

# 2020 ANNUAL REPORT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연구백서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ree

MARKET ENTERPRISE COMPETITION

# CONTENTS

## 목차

### Part 01 기업과 경제 성장의 해법 모색

인사말	6
설립 목적	8
조직도	8
임원소개	9
연혁	10
<b>1. 한국경제 리스크 점검 및 극복 방안</b>	13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14
경제정책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15
기술수준별 제조업의 R&D 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16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17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18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19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20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과거 위기로부터의 교훈	2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22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23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24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25
<b>2. 기업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b>	27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28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29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 문제점 검토	30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31
문제인 정부 조세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32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33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34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35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3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37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38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39



Part **02** 경제정책 동향  
및 이슈 대응

<b>3.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b>	41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4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3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44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45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46
전일제 환산 취업자 추정 및 분석	47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48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49

Part **03** 언론과  
한국경제연구원

<b>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b>	53
민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5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개선	57
주력 산업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 점검	59
국가 재정 건전화	62
<b>2.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b>	65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66
노동정책 대응	75
노사관계 선진화	79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규제 대응	83

<b>1. 경제와 기업의 상황 진단 및 해법 제언</b>	87
올 성장률 -2.3%...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	88
코로나19 종식돼도 경제위기는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장기화	89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코로나19 영향으로 IMF때 보다 감소폭 커	90
2019년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 21.6%, 일본(33.3%)에 이어 2위	91
65세 정년연장 시 한 해 약 15.9조원 추가비용 발생	9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 일자리부터 타격	93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94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95

# CONTENTS

일시휴직자 1명 늘면 한 달 후 취업자 0.35명 감소	96
하반기 주택가격, 수도권 2.5%, 강남 4구 등 7% 이상 상승 전망	97
국민생활필수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98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철회해야	99
월세 살면 자가 대비 결혼(65.1%)·출산(55.7%) 가능성 절반 이상 감소	100
기업승계 시 적용되는 징벌적 상속세율(60%) 인하해야	101
한국판 뉴딜 성공,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에 달려	102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판매장과세'로 전환해야	103
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기업투자 감소해	104
<b>2. 경제전문가 제언을 통한 방향성 제시</b>	105
<b>3. 기사를 통한 여론 확산</b>	113
대기업 매출 증가할 때 중소·중견기업 매출도 증가	114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임금유연성 제고되어야	115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116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배우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방안	117
경제성장률 1%p 감소하면, 신생기업 8,000개 증발	118
코로나 불구, 대기업 '인력감축' 자제, '유동성 확보'· '긴축재정'으로 버텨	119
한국 노동비용 경쟁력, 주요 진출국 대비 약화... 리쇼어링에 치명적	120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121
재정준칙 확립·준수로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해야	122
R&D조세지원 업고 훨훨 나는 중국, 까다로운 절차에 막힌 한국	123
한국 재정건전성, 독일형이나 일본형이나 갈림길	124
특고, 고용보험 일괄적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감소 우려	125
청년실업률, 10년간 OECD 4.4%p 감소, 한국은 0.9%p 증가	126
폭력파괴 등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부담 법안 봇물	127
법인세 부담(실효세율)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128
코로나궤 불확실성에 영업이익 급감·차입 급증, 투자 노력은 지속	129



## Part 04 전문가와 지식 네트워크 구축

<b>1. 세미나 · 포럼</b>	133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13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135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136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137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138
<b>2. 연구회</b>	139
기본소득제연구회	140
기업법연구회	142
노동법연구회	146
시장경제연구회	149
조세재정연구회	152
<b>3. 시장경제교육</b>	155
<b>4. 도서발간 및 정기간행물</b>	159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60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62
KERI 칼럼	166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167





인사말

# 『2020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의 경제성장률 -3.2%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 부진이 상반기 지속되었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노동비용 상승은 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가 계속되었고,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침체와 대외적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의적절한 정책세미나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와 큰 정부’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이어서 코로나19가 촉발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전망하여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1월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통해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립적으로 양측을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실증적·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사회에 해법을 제안하는 등의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을 통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과거와 비교분석하여 장기불황에 대비한 재정여력의 확보가 필요함을,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급

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서도 다발적 정부대책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서도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폐지를 주장했고, 단기적으로는 과세시기 관련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 문제점 검토>를 통해서 기업이 정신을 약화시키는 징벌적 상속세의 완화·개선을 촉구했고,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을 통해서도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활동이나 세미나와 별도로 기업, 노동, 조세재정 등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사연구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기업을 인력감축을 자제했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힘든 상황이지만 투자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대기업을 매출이 증가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친(親)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인 미국·프랑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에게만 부담을 더하는 노동규제법안에 대응해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이 신중해야 함을 주장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적용 및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제한 법안을 반대했으며, 노동비용 경쟁력이 주요 진출국 대비 약화되고 있어 리쇼어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건전성 관련 나랏빚을 줄인 독일과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일본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는 한국은 재정준칙 확립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함을 강조했고, 법인세 부담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은 한국경제의 힘을 길러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기업규제 확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부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원기업 모두와 힘을 합쳐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기업,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 도약의 실마리를 찾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회원기업들의 도약에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소의 해인 신축년(辛丑年), 장밋빛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 태 신



## 설립목적

1.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2. 현실 경제에 부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3.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조직도



## 임원소개



권태신 회장

02-3771-0005

kwontaeshin@keri.org

### 학 력

英 카스대 경영대학원(MBA), 美 벤더빌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주요경력

국무총리실장(장관급), 駐 OECD 대표부 대사,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등 다수

### 전문분야

경제정책, 국제금융



배상근 전무

02-3771-0023

skbae@keri.org

### 학 력

미주리주립대학교(Univ. of Missouri) 경제학 박사(1998)

###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경제본부장(상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수

### 전문분야

거시경제, 화폐금융, 국제금융, 중앙은행(통화정책)

연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1967년)를 확대·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1980		1990	
1981년 4월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1990년 2월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1982년 2월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1993년 2월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1984년 11월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1995년 2월	제4대 회장 최중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87년 2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95년 5월	부원장 손병두 취임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중현 취임	1997년 4월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수립 및 CI 제작
1987년 10월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유창순)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88년 2월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98년 9월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으로 분리 독립
1989년 2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2000		2010	
2000년 1월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2010년 12월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00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2011년 2월	제10대 회장 허창수 취임
2001년 4월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11년 12월	제9대 원장 최병일 취임, 부원장 박대식 취임
2003년 2월	부원장 이규환 취임,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12년 7월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2003년 3월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13년 12월	사무실 이전(하나대투증권8층 → 전경련회관 45층)
2004년 2월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4년 10월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14년 3월	제10대 원장 권태신 취임
2005년 4월	「규제연구센터」 신설	2014년 5월	부원장 배상근 취임
2005년 7월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 등의 2개실로 개편		미래전략연구실 신설, 사회통합센터 폐지
2006년 3월	「경제교육본부」 신설	2015년 2월	산업연구실 신설
2007년 3월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15년 8월	노동시장연구 T/F 신설
2007년 4월	제7대 원장 김중석 취임	2016년 4월	미래전략실 및 공공연구실 폐지, 미래성장동력실 신설
2007년 6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17년 3월	부원장 송원근 취임
2007년 12월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연구본부, 정책본부 신설
2008년 3월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내 경제교육팀 신설	2018년 2월	정책본부 폐지, 일자리전략실, 혁신성장실, 혁신창업T/F팀 신설
2008년 12월	사무실 이전 (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18년 10월	혁신창업T/F팀 폐지
2009년 5월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2019년 3월	연구본부 폐지, 연구본부 내 2실 1팀 유지
2009년 10월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의 7실 체제로 개편		
		2020	
		2020년 2월	경제정책실, 경제연구실 및 연구조정실 신설



part 1

기업과 경제 성장의  
해법 모색





01

# 한국경제 리스크 점검 및 극복 방안



#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유진성 | 연구위원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월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월세 거주 시 무자녀 가구에서 첫째 아이 출산 확률은 약 28.9%, 55.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되고 시점에서 주거환경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패널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평가

최근 인구변화의 동향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 경제정책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관계되므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최근 대내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투자에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내용

22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된다. 2019년 한국의 정책불확실성 지수는 전년 대비 1.7배,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내외 정책불확실성이 최근 급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2001-2019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총투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의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특성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정책 불확실성과의 음(-)의 관계가 보다 뚜렷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평가

본 연구는 기업투자에 대한 정책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직접적 효과 외에도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제약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

---

김윤경 | 연구위원

---

정책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며 이같은 부정적 영향은 연구개발투자보다 설비투자에 더 크게 나타난다.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높여야만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 기술수준별 제조업의 R&D 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이태규 | 연구위원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저기술산업군에서 R&D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저기술산업군이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군에서 글로벌 선두주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성장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군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혁신활동(R&D 지출로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 2. 연구내용

산업의 성숙도와 국내 기업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상대적으로 오래된 산업과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와 성장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선진국의 기업들이 이들 저기술산업군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산업(1차 금속, 플라스틱·합성수지, 석유화학, 반도체 등)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 10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해외 기업의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한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저기술산업을 사양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국내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저기술산업군을 제외하는 경향성이 보이는 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도 저기술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군에서 글로벌 선두주자가 나타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혁신성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평가

주요국의 기술수준별 제조기업의 R&D 활동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성장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혁신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기술산업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높다.

#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수년 간 성장률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정책의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최근 ‘한국형 뉴딜’을 포함하여 전반적 산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현 정부의 혁신성장 주창 후 2년간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과는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2018년, 2019년 연속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기저효과가 강한 투자변수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1960년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외에는 사례가 없었던 현상이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혁신성장의 방향성과는 반대방향이기 때문이다. 반면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혁 - 특히 노동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며 그 결과가 투자부진으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주창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도 혁신성장의 성공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성장 부진을 초래하는 정책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 3. 평가

본 연구는 지난 3년 간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을 통해 향후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일반론적으로는 산업정책의 성공조건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이태규 | 연구위원 · 김윤경 | 연구위원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혁신성장의 방향성과는 정반대방향이기 때문이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도 혁신성장의 부진을 야기하는 정책방향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다.

#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이승석 | 부연구위원

정부는 주택시장 억제를 위해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 후 짧은 기간이나마 진정흐름을 보였던 과거의 양상과는 달리 공황구매 현상까지 나타나며 주택시장은 과열양상을 지속중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아파트) 시장은 2020년 하반기 중 전국 0.8%, 수도권 2.5%, 그리고 서울 인가지역 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시장의 흐름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이며 추진해 온 주택수요 억제정책의 실효성 및 거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면서도 주택시장위축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믹스를 검토해 보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내용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의 결과 및 최근 주택시장 동향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아파트) 시장은 2020년 하반기 중 전국 0.8%, 수도권 2.5%, 그리고 서울 인가지역 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물량은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반면, 주택수요는 풍부한 유동성, 공황구매에 따른 추격매수세 강화 등에 따라 상승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거래와 지방 현금보유자의 인가지역으로의 자금유입 증가 역시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3. 평가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하반기 주택가격을 근사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시장의 혼란과 왜곡만을 초래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정책은 철회하고 주택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고 공감할만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실증적·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 휩싸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대공황,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내용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3.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에 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 주요 위기와 현재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되거나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

경제연구실

---

코로나19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코로나19 위기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 저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호황인데 장기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로 실물부문의 위기가 금융부문에 번지고 금융부문의 위기가 다시 실물 부문에 충격을 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여러 형태의 금융안정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내용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주식시장의 최근 호조세는 기업실적보다는 유동성과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이한 점은 해외 금융시장과 달리 주가와 신용스프레드가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통상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는 급속히 회복되었지만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기에 신용스프레드 축소를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시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3. 평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호조는 유동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확대될수록 금융시장의 거품은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경고와 정책제언을 투자자와 정책당국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과거 위기로부터의 교훈

##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 - 특히 수출을 포함한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 을 살펴보고 위기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잃지 않고 세계경제회복 시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 코로나19 위기시대의 수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세계경제성장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한 적이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 시 우리나라 수출은 급등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른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는 수출 관련 대책이 경상수지 개선 위주로 추진되었지만 이후에는 위기대응에서 경제영토 확장으로 대외정책 기초를 전환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에서도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탄력성 분석을 통해 수출대상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속도가 빠른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저하된 현 시기에서는 가격경쟁력 유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 3. 평가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확대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수출전략 수립에 적절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이태규 | 연구위원

---

향후 수출정책에 있어 코로나19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졌으므로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 김윤경 | 연구위원

기존 감염병과 달리 경기하강 국면에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성장률 하락 및 장기성장경로의 하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국가전략 수립과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확산과 수요 및 공급 충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제2차 대유행의 발생 규모에 따른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글로벌 CGE 모형을 통해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40분기에 걸친 모의실험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규모와 속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변화하므로 7, 8월의 감염자수가 3분기에 유지되는 시나리오 1과 이에 비해 확산되어 감염자가 25% 증가하는 시나리오 2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5.5%를 기록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산이 심화된다면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시적 충격 외에도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가진다. 기존 성장경로와 새로운 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성장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경로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교역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도 전망된다. 그러므로 방역과 경제의 두 정책목표의 균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며 과도한 정부개입보다는 근본적으로 민간의 역동성을 활성화하는 정책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경험이 팬데믹 대응 관련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3. 평가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단기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 GDP 수준 하향을 넘어 성장경로의 기울기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책 제언의 근거를 경제적 분석으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 정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에 ‘탈세계화와 큰 정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전망과 영향,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코로나19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간 질서 등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감지되고 있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민간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탈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에 기반한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급속히 떨어지면서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월평균 8만 6천 명씩 감소하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최악의 소득분배를 경험하였다. 특히,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케인즈언의 기대와 한국판 뉴딜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사업으로 진출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3. 평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만연한다면 국가부도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경제연구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김윤경 | 연구위원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한계기업의 급격한 증가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개선을 바탕으로 상시화해야 한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이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한계기업 현황과 동향을 검토하고 관련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수 있으며 정상기업의 자원활용이 제한되므로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3~2019년 외감법 대상 비금융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감소하던 한계기업의 수는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18년과 2019년 급증하였으며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증가가 뚜렷하다. 20개국의 상장기업을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은 한계기업의 비중은 작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일본에 이어 2위이며 비중의 증가폭은 1위로 나타났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한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 대상의 동의 요건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회생절차가 불러오는 부실기업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선을 전제로 기촉법의 상시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당국의 영향 배제장치와 경영자 활용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평가

본 연구는 한계기업 분석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검토하여 기촉법의 개선과 상시화를 제시하였다.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한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 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진단하는 한편 OECD 주요국으로 이루어진 패널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의 산업역동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 하에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계산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측정한 결과 변화속도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더 빨리 하락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경제의 산업 역동성은 소득 대비 낮은 수준이며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하락세도 비교국가들 중 매우 빠른 그룹에 속한다. 한편 패널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추세치는 실질성장률 추세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질성장률의 추세는 잠재성장률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추세적 변화는 결국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 3. 평가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산업역동성의 빠른 하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을 밝혀졌고 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은 산업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태규 | 연구위원

---

한국경제의 산업역동성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매우 빠른 하락속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역동성 하락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되므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회복이 필요하다.



02

기업성장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방향



#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임동원 | 부연구위원

중소기업의 현실과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외면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정책목적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도입이 철회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49.3%)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이 철회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배당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저해할 것이다. 두 번째, 개별 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적정 유보소득 산정과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미실현이익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현실과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외면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정책목적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도입이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도입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율 3% 인상 등 정책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과 세수의 증가만 남았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49.3%)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 3. 평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2020년 세법개정안상의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의 도입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회적 이슈로 제시했고, 이는 국회 논의에서 동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도록 일조했다.



#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 1. 연구배경 및 목적

급증하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절대적 수준은 물론 증가속도, 대외의존도, 고령화 수준, 기축통화국인지의 유무, 소득수준, 민간부채 등 국가마다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왔던 40%를 넘어 올해 45.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한다. 적정 국가채무수준은 다르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경우 외화유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측면에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입 변동성과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을 40% 내외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한 결과, 소국개방경제의 적정국가채무 비율은 41.5~45%로 추정되고,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비율은 37.9~38.7%로 추정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로 추정된다. 국가채무관리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 3. 평가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경제,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나누고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과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분석을 도출했다.

#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

임동원 | 부연구위원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있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어,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시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나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2위이고, 최대주주할증평가시 사실상 1위(60%)이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2%)인데 기업승계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되어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한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3. 평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승계가 기업 및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함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다.

#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 1.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의 도입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고, 국제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국익 모두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EU)이며, OECD와 G20도 2020년을 목표로 디지털세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사무국은 적용범위를 디지털 서비스사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하여 제안했으며,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글로벌기업에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OECD에서 권고하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이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된다면 당초 BEPS의 목적과 배치되므로, 소비자대상사업은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digital service business의 조세회피행위를 막는다는 당초 디지털세의 논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고,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2018년 기준 연매출이 1조원을 넘는 국내기업은 약 200개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 부족분은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 3. 평가

디지털세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했으며,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차선택도 제안했다.

---

임동원 | 부연구위원

---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상겸 | 단국대학교 교수

현 정부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정책의 기조가 ‘본격 증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우리나라 세제의 완성도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효율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어 향후 조세정책이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회복 및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현 정부 집권 3년 간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 부분에서의 증세로 인해 세제의 효율성 상실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중장기 조세정책은 안정적인 세수증가를 토대로 점진적인 효율성 개선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 이와 같은 효율성 원칙이 대폭 후퇴되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적자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세계 각국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경제활력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제 강화로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조세정책은 ‘얼마가 필요하니 더 겹겹다’는 식인데, 이러한 후진적 자세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립한 후에 필요한 자원조달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평가

소득세제, 법인세제, 재산과세 등 현 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을 진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운용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 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세계 경제위기에서 기업의 생존은 위협될 것이기에, 본 연구는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두가지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와 비교를 통해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주로 상시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경제위기 하의 기업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체계, 상시화, 조세혜택 수준 등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지원세제도 사업재편계획 지원세제처럼 조세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다른 주요국의 세제와의 비교 및 지원대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현재 모법인 원상법이 한시법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로 과세이연 방식인 현행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혜택은 기업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상시화 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점은 기업 정상화라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3. 평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경제위기 하의 기업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체계, 상시화, 조세혜택 수준 등에서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임동원 |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임동원 | 부연구위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 구조를 왜곡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에 따른 차별과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현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니라 유통 중간단계인 제조장 반출시(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 및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차는 수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국산차와 달리 수입 이후 발생하는 영업마진,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과세상 혜택을 얻으므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입차의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할 때, 같은 가격대의 승용차라면 국산차가 더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산차 구매자와 수입차 구매자의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국내 산업에 불리하게 중간단계과세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최종단계과세(판매장과세)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조세중립성 제고 및 국내생산품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과세시기 변경은 상대가격 구조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부합되므로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 3. 평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 문제점으로 인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조세형평성이 저해됨을 세부담 사례와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올라가락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날 수 없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라가락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정상적인 소비행위를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지고 인하 적용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가격대도 다양해서 단순히 고가의 사치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를 배기량에 상관없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변경하면서 역진성에 대한 입법목적도 상실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자동차 구입(취득)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 어려워 과도한 세금 부과로 보인다.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과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연관 산업과 높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소비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해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 3. 평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은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지고 인하 적용기간도 길어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분석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정부는 당장 개소세 폐지는 어렵지만, 인하정책을 2021년에도 이어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

임동원 |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목적과 개별소비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국민생활필수품인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조경업 | 선임연구위원

GDP 대비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p에서 0.38%p 하락할 수 있다. 재원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재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늘어난 만큼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드는 역 케인지언(non-Keynesian) 현상으로 재정승수가 마이너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정승수를 추정한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을 대상으로 역 케인지언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시장이자율 상승하고 미래에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성 지출확대와 비효율적인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창출 등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비용을 포함한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2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재정지출의 역 케인지언 현상은 증세보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때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적자를 통한 재원 조달 시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은  $-0.034 \sim -0.073$ 으로 추정되고, 재원조달이 증세/재정적자가 혼합될 경우  $-0.022 \sim -0.63$ 으로 추정된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왜곡적인 조세와 비왜곡적인 조세가 분리되어 분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0.012 \sim 0.016$ 으로 추정된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이 조달될 경우 재정지출이 단기적인 성장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음의 부호로 추정된다. 재정지출과 증세의 시차는 재정적자 확대에 야기되는 미래의 세부담과의 시차보다 짧기 때문에 장기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단기탄력성이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평가

재정지출의 기회비용을 무시한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재원조달 비용을 포함한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추정했고, 재정지출의 역 케인지언 현상은 증세보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때 커지는 것으로 분석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이며, 목적인 효과 없이 세수 목적 만이 남은 세제이므로 연장은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몰연장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를 보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세수'만 증대되고 있다.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일반 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약 72%(2019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시부터 배당, 투자,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고, 이는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세 번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중과세일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결국,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적용기한의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부담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연장이 아니라 일몰되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2020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므로 기존에 있는 규제라도 폐지해야 한다.

## 3. 평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투자·상생협력세제라는 규제를 연장하려고 해서 그 연장을 반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

임동원 | 부연구위원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만 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은 적절하지 않다.

#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환 | 계명대학교 교수 ·  
최병일 | 매일경제신문 책임연구원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연금 지급과 복지 지출로 재정 부실을 야기하였고, 경기 침체, 경상수지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 충격이 더해지면서 경제가 하강하게 되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재정 적자 및 국가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회복 및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방만한 복지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정책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지출은 투자적 성격의 교육이나 의료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비적 특성을 갖는 노령연금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남유럽 국가들의 노령연금 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출범 이후 유로존(Eurozone)에 편입되면서 대외경쟁력이 약화돼 경상수지가 악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남유럽 국가들의 선심성 복지 지출은 실물경제와 정부 재정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 사례를 교훈삼아 복지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3. 평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 1. 연구배경 및 목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포함되지만,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입법 취지를 살펴 왜 이런 법률적 미비가 발생했는지 검토하고, 이어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이중과세 및 조세형평성 문제점을 도출하려 한다.

## 2. 연구내용

2014년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관련 발생한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장치, 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했고, 공제받을 수 없는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명백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법인의 부당한 과세부담을 제거하려면,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던지,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사업·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 3. 평가

보고서 발간 후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7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등 제도개선 여지가 생겼다.

---

임동원 | 부연구위원

---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03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유진성 | 연구위원

여성·저학력·미취업·월세 및 기타 거주형태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006(1.7%), 빈곤지수는 0.007(3.6%)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도 및 빈곤율이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 정부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1인 가구 정책 추진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2018년 기준 특성별 1인 가구 비중을 분석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 가구주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하였으며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평가

1인 가구의 추이 및 특성을 분석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보고서는 최근에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적용그룹을 추려내고, 동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3. 평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유진성 | 연구위원

---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거나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유진성 | 연구위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1명이 증가하면 그 다음 달에 취업자가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 들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시휴직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시휴직자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일시휴직자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는 한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2020년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7만 명, 148.5만 명, 102.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1997~1998년 IMF 위기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시에도 이와 같은 폭발적 증가는 없었다. 일시휴직자의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3~5월 평균 기준으로 일시휴직자의 약 58.2%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이었다. 2020년 3~5월 통합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았다. 2020년 상반기 15~64세를 대상으로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다음달)에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자의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평가

최근 일시휴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휴직의 사유와 일시휴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일시휴직자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19 시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등 불안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2021년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 원(9%) 증가했고, 그 규모도 10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명(8.8%)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완화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7만 원 감소하였으며, 2사분기에는 약 6.7만 원, 3사분기에는 약 7.6만 원, 4사분기에는 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지속성이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3. 평가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진성 | 연구위원 · 임동원 | 부연구위원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을 상승(소득불평등 심화)되었으므로, 정부의 정책이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국내 노동조합이 서구의 산별노조와 같이 비리 가능성이 높은 거대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만큼 대기업 공기업 부문의 노조에 한정해서라도 전문적 회계 감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부 국내 대기업 내지 대규모 노조에서는 여전히 회계나 채용 비리, 과도한 부당 행위에 따른 피해가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조합 조직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제고 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 2. 연구내용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거대 산별노조에 의한 재정비리 문제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시 제도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법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율한다. 영국은 노조 회계에 대해 행정관청에 연차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고, 미국은 조합간부가 노조나 회사와 관련하여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 채권, 증권 등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 보고를 규정하는 등 투명한 노조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 보고 책임을 중요하게 본다. 독일과 프랑스는 노조의 재정이나 회계에 관련한 노동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엄격한 노조 규약을 통한 노조자치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에 한하여 내·외부 회계 감사를 전문적·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감사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업무 투명성 제고 필요도 높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노동조합의 업무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평가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대되고 노조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민주적 운영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전일제 환산 취업자 추정 및 분석

##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사용하여 전일제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취업자수를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로 추정하여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고용동향 통계의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전일제 환산(FTE)<sup>1</sup> 방식의 취업자 규모를 구해본 결과, 3월 FTE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월에 비해 7.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수의 전년비 감소율 0.7%보다 약10배나 가파른 것으로, 과거 IMF 외환위기에 필적한 수준의 감소율이다. 이는 통계청 고용통계에서와 달리 코로나19가 고용동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IMF 위기 당시(-7.0%)와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FTE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통계청 고용통계 결과에 비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자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는 통계청 방식 뿐 아니라 이 FTE 방식 통계에서 나타난 피해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E 기준 취업자 증가율과 통계청 방식 취업자 증가율을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은 60대 이상(8.4%p)으로서 노인층의 실질적 고용, 소득 상황은 통계청 통계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게 악화됐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평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늠하려고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취업자 수: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전일제 환산 1명(1FTE)으로 산정. 20시간 일하면 전일제 환산 0.5명(0.5FTE), 60시간 일하면 전일제 환산 1.5명(1.5FTE)으로 간주. 각 년도 3월 기준.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서영빈 | 뉴스1 기자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취업자 규모를 추정할 결과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시장에 미친 실질적 영향은 지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유진성 | 연구위원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직 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60세 정년제도가 2017년 시행된 이후 다시 65세 정년연장이 논의되면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결과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이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직접비용은 14.4조원, 간접비용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총비용은 약 15.9조원으로 분석되었다. 임금피크제의 확대도입을 가정하여 기존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 2.5%를 5.0%로 증가시킬 경우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 감소액은 직접비용이 약 2.5조원, 간접비용이 약 2천 5백억 원으로 총 2.7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년연장의 의무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평가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불가피한 정년연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분석기간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0%와 3.07~39.59%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물가와 최저임금 간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7년 물가상승률의 25%를 최저임금 조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3. 평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물가상승이나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히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송헌재·신우리 | 서울시립대학교 ·  
전병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변화할 때 가격 변수들이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part **2**

경제정책 동향 및  
이슈 대응





01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1) 민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 ◆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논거 마련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및 투자위축 효과를 분석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 하였다.

'18년 법인세 과표구간(3천억원)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적용을 받은 6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5.7조원으로 당초 정부 추정치(2.3조원)보다 2.5배 많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이 줄었음에도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효과 분석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국내 설비투자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세수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 기업 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수가 정부 예상 대비 2.5조원 줄어든 것이라는 추산과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동향을 제시하면서, 나홀로 역행하고 있는 한국 법인세제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대기업 법인세 크게 늘지않을 것”이라더니... 5조7000억 급증**

한경연, 2017~2018년 6월 조사

이연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라... 1년 새 늘어나는 법인세 57700억원은 전초 정부-이러이 법인세율 인상과연사 법인세 최고 세율 대상 기업들의 순이익이 300억불가량 늘어난 데 비해, 법인세 부담은 5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급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국제비교분석(대상 50사) 5000억 원 초과 대기업 61곳의 2017~2018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당기순이익(세전)은 11.1조원(54.29%)에서 전년(10.8조원) 대비 3%포인트 늘어난 11.4조원(54.29%)에 달했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은 5.75조원(50.2%)에 급증했다. 세수 손익은 5.65조원(49.7%) 급증했다. 세수 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14.1조원(52.7%)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대비 3.5배 늘어난 14.1조원(52.7%)에 달했다.

한경연은 당기순이익이 줄었음에도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효과 분석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국내 설비투자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절벽... 올 2.5조 더 줄어든다**

한경연

당초 예상보다 2.5배 많고 5대기업이만 72% 줄어

3대·4대 기업 법인세율 낮춰 35%p 줄여 요구됨

한경연은 당기순이익이 300억불가량 늘어난 데 비해, 법인세 부담은 5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급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국제비교분석(대상 50사) 5000억 원 초과 대기업 61곳의 2017~2018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당기순이익(세전)은 11.1조원(54.29%)에서 전년(10.8조원) 대비 3%포인트 늘어난 11.4조원(54.29%)에 달했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은 5.75조원(50.2%)에 급증했다. 세수 손익은 5.65조원(49.7%) 급증했다. 세수 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14.1조원(52.7%)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대비 3.5배 늘어난 14.1조원(52.7%)에 달했다.

## ◆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

기업들의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점검하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했다. 세제 개선 종합건의(3월)을 통해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및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고 주요 건의과제가 금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공제대상 확대 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기

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조세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기업활동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美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최근 3년간 7계단이나 추락했음을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한국의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세제정책 방향을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투자세액공제 확대 내용〉

현 행	개 정 안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p style="text-align: center;">&lt;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li> <li>■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li> <li>■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li> </ul> <p>※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p>

자료 : 2020년 세법개정안, 기재부

**에이블디**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0039호 총8면

### "기업 稅부담 높인 한국, 조세경쟁력 7계단 추락"

한경연 美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 분석  
OECD국가 중 2017년 17위서 올해 24위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탓에 경쟁력 약화  
"해치는 세부담 완화...글로벌 추세 역행"

미국 기업들의 유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 부담마저 갈수록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 순위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7계단 하락(71→54)세를 경험한 개발 국가(OECD) 국가 중 하락폭이 두 번째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2019년 이후 급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세경쟁력은 미국 조세재단이 각국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최고 한도세율, 배당세율, 원천징수율 등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의 소득세율이 높음이 인상의 원시 조세경쟁력 순위가 뒷걸음질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해외 국가들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하는데 주목해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폭이 더욱 컸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4위였다. 2017년 17위에서 불과 3년 만에 7계단 떨어지 하락 폭이 내閣府(프랑스)계단 하락 다음으로 컸다.

세목별로 보면 소비세가 2위를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소득세(22위)와 법인세(33위), 국제조세(33위, 재산세(30위)) 모두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소비세와 국제조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순위 하락폭이 컸고, 법인세는 네 번째로 컸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국가들은 같은 기간 전체 종합 순위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쟁력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종합 순위의 상승폭 부문에서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추세에 역행해 우리나라는 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1.5%포인트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 항목 중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20%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항 네트워크가 주된 대비 강점으로 평가했지만 법인세의 제한적인 손익이외장제 제도와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부과되는 예외된 재산 세율은 단점으로 꼽았다.

주요한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필 기자

◆ 주요국 R&D 세제 지원 비교 등을 통한 정책 개선 촉구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R&D 500대 기업 중, 한국과 중국의 기업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중국의 기업 수가 2배(66→121개)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정체(14→14개)되어 있었다. 중국이 R&D 육성을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동안 한국은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 축소, 까다로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요건 등 지원에 소홀했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 R&D 분야의 성장속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R&D 세제 지원책의 미비로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가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이오, IT 등 6대 신산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의 신산업 투자액(평균 2,500만달러)이 글로벌 기업(평균 24.7억달러)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R&D 집중도)은 4.1%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해외 R&D 세제지원 사례를 참고해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년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은 '66 → 121' 글로벌 R&D 500대 기업 수    한국은 '14 → 14'

**환경연 '2015-2019년' 비교**  
 중, 연구개발비 50% 추가공제  
 과감한 조세혜택으로 투자유도  
**韓, 세역공제율 감소폭 '감소세'**  
 전자산업은 작년 역성장하기도

김은우·권도영·이정민 기자

▶ 지난 5년간 중국의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업이 약 2배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정례회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R&D 분야에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우리 나라는 R&D 투자를 유도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R&D 지출 상위 500곳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121개로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에 14개였는데, 지난해에도 그대로 1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이글 기업의 R&D 투자비용은



중국에 154% (49억7000만 달러 → 126억2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한국은 63% (2098000만 달러 → 3398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

환경연에 따르면, 중국의 R&D 기업 급성장 배경에 전략적이고 과감한 조세 지원 정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현시적으로 공제 비율을 75%까지 높인다. 또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추가비용공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공제 금액에 한도도 없다. 이 외에도 R&D 비용 인계 등 활자를 간소화하는 등 R&D 조세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의 일반 R&D 세역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2011년에는 대기업 일반 R&D 세역공제

율(당기분) 최고평도가 6%였는데, 2018년에 2%까지 줄어들었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을 비교하면 2014년(대기업, 신고기준) 1조8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 1조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명삼 서울대 복합 교수는 "기업들이 장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지원해야 하는데, 여러 조건을 달고 실적과 결과만 따진다. 또 규제 틀에 맞춰서 지원하는 실적만 R&D 실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10년간 성장률이 가장 높았지만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ITA)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품목 동향조사서 바탕으로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자산업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내수·수출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고 수입만 증가했다. 전자산업의 생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증가했고, 2018년에 3677조9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5% 감소한 321조9000억 원에 그쳤다. 특히 전자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은 2018년 238조2500억 원에서 지난해 196조3110억 원으로 17.5% 감소했다. 수출 역시 연평균 3.9% 증가해 2018년 2203억4000만 달러(약 290조 원)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768억8000만 달러로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은 3.9%다.

## ◆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여론 조성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기업 상속 시에는 할증률(주식 가액의 20%)까지 적용받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5년)도 미국(10년), 일본(20년) 등 주요국에 비해 짧아 연간 납부하는 세 부담은 더욱 높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 20년 간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속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차질 및 고용·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해 연간 납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하거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Vol.22 2020.11.26

## 주요국(G5) 기업상속세제 비교

주요국 비교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b>상속세 최고세율</b>	50% (최대주주 할증시, 60%)	40%	40%	30%	45%	55%
<b>1.8조원* 상속시 상속세액 추정</b> <small>* 20개 그룹 평균 보유자본</small>	1조 1,035억원	7,359억원	3,680억원	5,499억원	8,277억원	1조 112억원
<b>기업 승계 시 사업자산 공제감면</b>	최대 500억원	없음	50%~100% (한도 없음)	85%~100% (최대 9,000만 유로)	75%	비상장 중소기업 100% 감면 (한도 없음)
<b>개편방향</b>	<b>(단기)</b> 기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b>(중장기)</b>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전환					

Global Insight는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각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기업인 체감 세율은 75% ... “상속세 내려고 지분 팔면 양도세까지”

## 가혹한 한국 상속세 ⑤ ㉮ 세계 상속세 공포

국내 기업인들이 상속세 공포에 휩싸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국내 20개 대기업집단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마련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2조원에 달한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세대들도 재산 세습 내야 할 만 30일 한국 경제연구원 자료 기준 상위 1~3%의 대기업집단(20개 그룹 총 100여 개)이 최근 상속세 한 기점 세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 상속세 규모는 22조698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중기 기점 각 기업 총수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계산해 상속세 규모를 예측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권의 상속세 부담은 회장의 타계로 인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어부지기는 102592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 그룹의 상황도 비슷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의 예상 상속세 규모는 각각 2조7674억원, 1조5508억원이었다. 현대(10337억원)와 GS(2359억원), 현대중공업(5239억원), 신세계(887억원) 등의 상속세 규모도 수천

억원에 달했다. 2, 3세 기업인이 총수로 있는 전통 대기업의 양이 아니었다. 김형수 카카오의 장의 보유 지분(추정 가치 4조3334억원)을 남겨본다면 2조5999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셀트리온(2조7674억원), 넷마

**20대그룹 22兆 마련해야**  
현대차 2.7兆 SK그룹 1.5兆 카카오투 兆 단위 부담 가능성

**“경영권 위협 엄살 아닌 현실”**  
이우연 OCI 부회장 상속세 맞 한때 최대주주 지위 유지 못해 해외 투자자본 ‘먹잇감’ 우려도

블(25671억원), 연세소프트(23646억원)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급성장한 기업의 총수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계자가 당장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장기주가 안정적 일군 기업은 경영권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분도 LG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20대 그룹 총수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30조원에 수천억대. 상속세 규모가 절반 이상인 22조원에 달한다.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 승계의 장벽이 되고 있는 만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연 OCI 부회장은 “상속세 내려고 지분 팔면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며 “분할 납부에 따른 대주주 지위를 한때 놓친 사례가 있다. 이우연 OCI 부회장은 2017년 부친인 이수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1900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우연 부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했고, 한때 최대 주주로 내려왔다. 지금도 이우연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5.9%로, 기점으로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우연 부회장은 “상속세 부담도 현대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할증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지어 내야 한다”며 “분할 납부에 따른

##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개선

### ◆ 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재도약 위한 정책 전환 촉구

구조적 경기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 최근 민간투자의 감소와 국민소득 증가세의 둔화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였다.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지난 3년간 50% 이상 급감하는 등 민간의 활력저하가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 추진 등이 더해져 기업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투자 및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다.

한경연은 기업활동 저해 규제 입법 대응은 물론 주력산업 생산능력 저하, 기업실적 부진 등 도처에 나타난 한국 경제 위기징후를 알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생사 갈림길에 놓인 우리 경제 현주소를 부각해 정책방향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문화일보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822면 2중

“추락하는 민간투자 성장기여율  
美·佛처럼 감세·규제완화 절실”

한경연 ‘월·미·佛정책’ 비교  
“韓, 최저임금 등 부담 커져”

한국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기업에 확대 추진되는 과잉규제완화 논의가 있는 미국, 프랑스의 정책이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감세,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 및 소액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 고용유인력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최근 ‘월·미·佛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간 투자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95.8%에서 82.8%, 프랑스는 82.8%에서 58.3%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미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성장률 변화 폭도 한국은 1.2%포인트에서 프랑스(1.1%)까지, 미국(1.1%)포인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미국은 연 2~3%, 한국은 1%포인트는 3~4%의 양극화였다. 2015년 2월 10일 기준 민간투자가 기여한 비중은 한국이 1~3%에 불과한 0.0%포인트에 불과했다.

미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과잉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감세, 규제 완화, 노동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GDP 성장률이 4% 이상인 반면 한국은 2017년 11.1%, 2018년 7.4%, 2019년 0.1%로 떨어졌다. 미국과 프랑스는 2017년 2.8%, 2018년 2.3%, 2019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은 2017년 0.5%, 2018년 0.1%, 2019년 0.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8%포인트, 1.6%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했지만, 미국은 1.1%포인트 상승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2017년 1.4%포인트, 2018년 0.1%포인트, 2019년 0.0%포인트의 성장률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은 2017년 1.2%, 2018년 1.0%, 2019년 1.2%로 올랐고, 프랑스는 2017년 1.0%, 2018년 0.8%, 2019년 1.0%로 올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 2017년 0.4%포인트, 2018년 0.2%포인트, 2019년 0.1%포인트의 성장률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은 2017년 0.4%, 2018년 0.4%, 2019년 0.4%로 올랐고, 프랑스는 2017년 0.4%, 2018년 0.4%, 2019년 0.4%로 올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 2017년 0.4%포인트, 2018년 0.2%포인트, 2019년 0.1%포인트의 성장률 상승을 기록하며, 미국은 2017년 0.4%, 2018년 0.4%, 2019년 0.4%로 올랐고, 프랑스는 2017년 0.4%, 2018년 0.4%, 2019년 0.4%로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A8면 10쪽



김태현  
한경연 연구위원

“상법, 기업활동 다루는 헌법... 임대차법처럼 줄속·일방처리 안돼”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법규로 국민총헌규정(헌법)의 효력은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 헌법이란 국가는 법의 제정, 집행, 변경, 폐지 등을 행할 수 있는 권력, 부패방지, 청탁응답, 공권침해구제, 재정, 예외상황(전쟁)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법규로 국민총헌규정(헌법)의 효력은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 헌법이란 국가는 법의 제정, 집행, 변경, 폐지 등을 행할 수 있는 권력, 부패방지, 청탁응답, 공권침해구제, 재정, 예외상황(전쟁)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상법 제1조는 헌법에서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한 의도”로 최저임금 올렸지만 되레 비정규직에 ‘독’돼  
‘쟁쟁한’으로 기업규제3법 통과된 고용·투자 위축 불보듯  
경기불황에 코로나쇼크 겹쳐 -1.2%형 장기침체 각오해야

◆ 한국 기업·산업 투자 매력도 글로벌 세일즈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활발한 해외 투자 유치는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경연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1위(전망) 기록의 비결,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행보,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한국의 기회요인 등을 살펴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코로나19 발생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 충격 최소화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례 없는 금융+실물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의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규제·세제의 3대 분야 개혁을 강조했다.

먼저, 주52시간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내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정책안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친기업적 규제개혁이 동반되어야만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을 늘려왔다. 한경연은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더불어 친기업적 규제개혁과 세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 활력 회복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문확일보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02면 중첩

## “전례없는 복합 위기… 경제정책 대전환 절실”

**전문가 집단 및 해법**  
 “재정·조세·금융 총체 대응을 받기 위한 조치 철폐도 병행해야”



권세선 이동근 정홍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는 ‘트iple S’에 직면했다”며 “중국 성장률이 5%대로 내려앉았다”며, 유관연환 (연고)의 교역이 줄어들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1997년 국제 통화기금(IMF) 위기는 아시아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에만 한정된 지역적인 위기였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실물 모두 영향을 받는, 성격이 다른 복합 위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충격은 관용, 유휴 등 서비스 산업을 넘어 서비스 제조업 등 제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원장은 “V자 형태의 경기 회복으로 ‘일부적으로는 회복(중동호황기 등)은 물론이지만,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제 회복이 지연될수록 실업률 상승, 소득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6일 권세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한국대중경제연구원장, 정홍로 한국대중경제연구원장(이하 권정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긴급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밝혔다. 권 원장은 최근의

이승욱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02면 중첩

## “코로나됐 경제충격 극복 위해 최소 2년 기업 핵심규제 유예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승욱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승욱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2020년 3월 긴급 진단 및 해법’ 행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욱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2020년 3월 긴급 진단 및 해법’ 행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 주력 산업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 점검

#### ◆ 한국경제 현황 진단 및 저성장 탈피 방안 등 제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및 주요 소비시장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요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한국경제에 1.5%p~2.0%p의 성장률 하락압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이 기업, 가계소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신생기업 8,000여개가 감소하고 가계소득은 월 1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수는 성장률 1%p 하락 시 45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폭이 경기 상승에 따른 감소폭의 약 2배에 달해,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 갭률 등 한국의 주요 지표가 OECD 최하위 수준임을 보이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심화요인으로 중요소생산성의 저하를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 19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 등 법제도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혁신 촉진을 제시했다.

“올 성장률 -2.3%...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

한경연 “코로나로 극심한 침체 예상”
기존 전망치 1.9%서 하향 조정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4.2%포인트 내린 -2.3%로 낮춰 제시했다. 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60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동향과 전망 2020년 1분기 1~3월 보고서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1~3월의 극심한 침체기에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3개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제 경제 침체물류가 피치는 올해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 -3.3%, 중국 1.0%, 일본 -2.7%로 낮춰 잡았다. 한경연은 이를 기준으로 올해 미국의 역성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0%포인트 떨어뜨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올해 민간 소비가 -3.7%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민간 소비가 부수적인 회복 역할을 담당했을 때 마

주간기 기사 www.koreas.com

미국 경제

초유의 역성장-외환위기 때처럼 ‘규제 동결’ 선언해 보라

“코로나 소르로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미국 월플렛이 그 세계 주요 7개국(G7)과 민간 경제학자들과의 2분기 GDP추계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1.0%였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한국도 2분기 -0.2%로 예상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미국(26.0% 성장)과 1.0%포인트는 낮지만 1분기(1.4%)에 이어 연속 역성장을 안는다. 한미수교 성장기 예상되는 곳은 중국(1.5%)인데도 0.0% 정도 내리(4.5.0%) 등 신중하게 내리했다. 수출이 많이 높은 우리 경제는 예외는 아닌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외환위기 때처럼 대폭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총 200조원을 쏟아붓는 것은 현실적인 위기극복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통념 넘어 코로나19 후 회복을 위한 경제가 살아남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통념 넘어 코로나19 후 회복을 위한 경제가 살아남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한 규제는 되며 강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통념 넘어 코로나19 후 회복을 위한 경제가 살아남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통념 넘어 코로나19 후 회복을 위한 경제가 살아남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린 규제 강화는 행정사들도 뚫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물며 코로나19를 경계하여도 초유의 역성장 시대라는 상황에서 더욱 부채질된다. 코로나19에도 대응을 강화하고 외환위기 때처럼 규제 동결과 규제 동결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규제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린 규제 강화는 행정사들도 뚫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물며 코로나19를 경계하여도 초유의 역성장 시대라는 상황에서 더욱 부채질된다. 코로나19에도 대응을 강화하고 외환위기 때처럼 규제 동결과 규제 동결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규제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국내 경영환경 및 주요 기업 대응 분석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한국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경고하면서, 국내 생산과 고용확대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분석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이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특히 최근 5년 간 10대 제조업 세부업종 중 5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하락했음을 보였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이탈 우려가 있어 기업규제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0대 기업의 2010년 이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올해 2분기 들어 부채가 급증했고 총자산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 직면한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이 예년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코로나19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일보**

**“자원 총동원, 현금 확보하라” 비상금 끌어모으는 5대 그룹**

3분기 재무제표 현금흐름 보나 자산 감소 우려에 대비, 일일 현금 인출이 2천억~4천억 원에 달하는 5대 그룹은 비상금을 끌어모으는 등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대 그룹은 3분기 현금흐름이 3조 1천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다. 이는 2019년 4분기 2조 9천 800억 원에 이어 3분기 연속 3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5대 그룹은 3분기 현금흐름이 3조 1천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다. 이는 2019년 4분기 2조 9천 800억 원에 이어 3분기 연속 3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朝鮮日報**

**100대 기업 영업익 29% 줄었지만 투자 8%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3분기 분석

올 상반기 코로나19 국내 100대 기업 영업이익이 30% 감소했다. 하지만 실적 악화로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4월호’ 100대 기업의 연감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한 333,900억 원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액은 오히려 8% 증가한 632,9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대 기업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한 333,900억 원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액은 오히려 8% 증가한 632,900억 원으로 나타났다.



## ◆ 기업 및 투자 유치 환경 국제비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기업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018년, 22%→25%)하고 각종 공제를 축소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행 중이다. 그 결과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미국(21%) 보다 높아졌고,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한경연이 한-미 양국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8.6%로 미국 인텔(1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17년에는 인텔의 유효세율(52.8%)이 삼성전자(24.9%) 보다 2.1배 높았지만 2년 만에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었다.

한편, 한국의 제조업 고용지수는 27.9로 독일(17.6), 미국(21.9) 등 주요 제조업 강국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선진국들이 최근 경쟁을 벌이는 지표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으로 계산되는 제조업 고용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세제는 물론 입지, 투자 인센티브 등 경영환경을 해외에 비해 유리하게 만들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제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A01면 종합

(유효세율)

##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

**중대민국 세금 대예부**

27.3% **대** 11.6%로 큰 격차  
한국만 세율인상 '역주행' 탓

삼성전자의 작년 1-3분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반도체 라이벌인 미국 인텔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년 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각종 공제를 늘린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법인세율 22%→25% 인상, 대기업 공제 축소)을 택한 여파다. 경쟁국보다 큰 법인세 부담 탓에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시리즈 A3면 16회**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 의뢰에 한-미 주요 기업의 작년 1-3분기 법인세 유효세율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는 27.3%로, 인텔 1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7년에는 인텔의 유효세율(52.8%)이 삼성전자(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2년 만에 역전되었다. 삼성전자는 작년 1-3분기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

**역전된 한-미 기업 유효세율 (단위%)**

기업	2017년	2019년 1-3분기
MS	57.1	27.3
일파넷	53.4	18.1
인텔	52.8	11.6
삼성전자	24.9	28.6
애플	24.5	8.7

194억달러를 거뒀지만 법인세비용이 53억달러나 붙은 탓에 당기순이익은 141억달러에 그쳤다. 인텔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159억달러)은 삼성전자보다 20% 적었지만 법인세비용이 18억달러에 그친 덕분에 당기순이익(141억달러)은 삼성전자와 같았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마이크로소프트(8.7%) 애플(15.6%) 미만(16.0%) 구급(18.1%)보다도 훨씬 높았다. 같은 기간 가이아자동차의 법인세 유효세율(2.7%)이 미국 제너럴모터스(12.0%)의 2.3배에 달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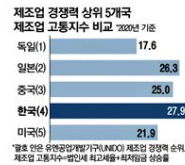
오영환 기자 [ohy@hankyung.com](mailto:ohy@hankyung.com)

## 매일경제 '포스트코로나' 경제전쟁 ... 다시 제조업이다

**바운스백 코리아** (2부)

세계 제조업 주력 5개국 중  
韓제조업 고용지수 3년째 최약  
기준 틀을 깨는 부활책 필요

오늘 매경 글로벌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부처인 제조업 경쟁에서 한국이 크게 밀리고 있다. 선진국들이 '제조업 전쟁'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자리 버팀목이 된 산업이 바로 제조업이었고, 씩다른 상태에서 경쟁률 공극을 원만하게 메운 것도 제조업이었다기 때문이다. 경제 부활목표가 국가간 보살핌으로서 중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관련기사 A4-5-6-8면 C1-8면**

한국은 유엔글로벌개발기구(UNIDO)에서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지수)에서 4위다. 독일 일본 중국 미국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에 속한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들어오려면 와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메카'로 불리는 영남 산업단지에서 열세 제조업체들이 연달아 주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과의 '제조업 고용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27.9로 가장 높았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다. 일본(26.3) 중국(25.0) 미국(21.9) 독일(17.6) 순이다. 제조업 고용지수는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선진국들이 최근 경쟁을 벌이는 지표들이다. 배상근 전략기획인연합과 전무는 "이미 가져질만큼 앓고 있던 한국 제조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11년간의 고통을 회자하며 "한국은 유엔글로벌개발기구(UNIDO)에서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지수)에서 4위다. 독일 일본 중국 미국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에 속한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들어오려면 와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메카'로 불리는 영남 산업단지에서 열세 제조업체들이 연달아 주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실제로 한국 제조업체들이 받는 고통은 최근 들어 유독 심했다. 매일경제가 10일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받은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 국가의 '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화희 1년 전 제조업 부활을 내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해 이렇다할 상황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송성윤 정치부 부장대우

## 4) 국가 재정 건전화

### ◆ 국가채무 및 재정관리 대응

정부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빠른 정부소비 비중 증가로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소비 팽창 제어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18년 정부소비 비중이 '10년 대비 1.4%p 상승하여 증가속도가 OECD 2위를 기록하였고, 우리나라 정부소비비중이 성장을 극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17년~'20년 1분기 GDP대비 총부채비율 증가폭이 25.8%p로 OECD 28개국 중 2위에 달하고, 올 1/4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전체 빚이 GDP의 2.4배를 웃돌아 성장력을 높이고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민간 디레버리지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기업 및 공적연금 총당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18년 기준 106.3%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주장한 결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문화일보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020면 경제

**“정부소비 증가폭 너무 빨라... 재정적자 급증 우려”**

한경연 OECD 35개국 분석  
2018 15.8% → 상반기 18.4%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빨라

서울경제 2020년 09월 17일 목요일 A14면 산업

**“韓정부지출 증가속도 OECD 2위”**

한국일보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B03면 경제 금융

**“韓, GDP대비 총부채 3년새 26%P 증가- OECD 2위”**

한경연 “1분기 4685조5000억  
정부-가계-기업 모두 빚 크게 늘어  
규제개혁-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매일경제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A14면 경제

**韓부채비율 1분기 증가폭, OECD 2위**

### ◆ 재정 건전성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저성장 심화로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적자가 수십조 원대로 불어났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추경이 4차례 편성되면서 국가채무가 수직 상승했다. 그럼에도 향후 재정지출 효율화, 채무 상환, 채무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건너뛴 채, 추가적인 예산확대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증세 요구만 거세지고 있다. 건전한 재정은 다양한 경제정책수단 운용의 원천이고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신인도 및 거시경제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며 기업과 가계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토대를 이룬다. 이에 ‘재정통’으로 정평이 난 권태신 원장을 필두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방만한 재정지출 및 예산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하였다.

### 3 미래 실존 가늠해도 되나

아들딸에게 더 많은 기회와 부를 물려주려는 것 한국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 포상이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였다. 건전 재정은 역대 정부의 자랑이자 유산이었다.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압록지에 물음표를 던진 것은 현 정부다. "우리가 40%까지도 아닌 건 국가가 없나"라는 대통령의 빈문이었다. 복지 확대는 균형과 속도 논쟁을 낳았다. 건입이 불고 온 경제위기는 고삐를 풀었다. 사방에서 돈이 쏟아진다.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일자라가 사라져가듯 갖가지 해빙기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적자 따위는 신경 쓸 것 없다는 이른까지 나온다. 시차를 바꾸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빚으로 보지 말고, 부자로 여기자는 얘기가

## "나랏빚 급증, 코로나 세대 영원한 패배자 될 수도"

(현재 20대)

"코로나 세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땐 게 기성세대의 책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래에 쓸 돈을 담기 쓰는 데 따른 첫 희생자로 현재의 20대, 코로나 세대를 꼽았다. 한 경연의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4월)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의 55.5%는 취업을 하기 힘들다. 권 원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민간의 성장 활력을 자극해 향후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수입도 늘고, 일자리도 생긴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굴리만 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재정 확대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일갈한다. 지난 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권 원장을 만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능률적 조직 돈을 굴리만 해 문제. 차라리 감세를 규제개혁 안 만들지만 성장률 높이



국은 그렇지 못하다. 신용평가사 피지도 '채무비율이 46%면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화 자금 이탈-금리 상승-기업 자금난-연세부도도 이어진다. 제

산업 예산은 10~20%뿐이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부모에게 많은 빚을 물려받은 자녀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원리금 폭쇄를 친다. 이런 부담을 국가가 미래 세대에 주고 있다" -과거 도시 아니냐 적자물가 걱정 말고 지출을 늘리라'는 한대화페이먼트(MMT)이 주목받는다. "과거보다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 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반(반)기업벌로 민업을 대체해 기업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다. 그래서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를 것처럼 보일 뿐이다" -다른 방법이 있나 지금은 위기가. "위기일수록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가면 따라가는 '물위 현상'은 반복된 실패인데 매번 있는다. 나도 공무원이었지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능

실패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다. 4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2030세대는 그다. 본인도 부담할 돈이다. 노르웨이 미래를 위해 석유 팔아 빈 돈을 국대에 쌓아 놓는다. 스위스는 공짜로 주는 기본소득을 스스로 거부했" -무책임 안 쓰는 게 능사나. "재대로 쓰자는 거다. 저출산 대책 10년간 210조원을 쏟았다. 결과는 1.5% (2019년 0.92%) 세계 꼴찌다. 주머니, 교육 등 구조적 문제는 바꾸고 출산장려금 같은 복지만 늘렸기 때문이다. 노조가 소수 권로지만 대변하는 노동시장 바뀌지 않으면 그 경제는 위기를 못 한 청년 세대가

### ◆ 재정관리 실효성 제고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

#### - 독일, 일본 재정관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 앞서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했던 독일과 일본의 재정관리 사례를 대조해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독일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고 국가채무비율도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 동안 21.1%p 감소한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비율 적자를 방치한 끝에 국가채무비율이 최근 225.3%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성공비결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균형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데 있는데, 우리도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가채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연구 보고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 朝鮮日報

2020년 09월 03일 목요일 A03면 종합

#### "나랏빚 확 줄인 독일 적자 늘어나는 일본 한국은 갈림길에 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직선호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독일 사례와 그 반대인 일본 사례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를지 갈림길에 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 서울경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A04면 종합

## "재정준칙案 부실...총지출 제어해야"

한경연 '재정준칙 도입' 보고서  
 "정부 제시案 기준 느슨하고 모호  
 뾰족처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案)에 총지출과 재정적자 관리장치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기준

국명	주요국 재정준칙 핵심 내용
영국	연간정부 구조적 재정수지(리)의 0.2% 이내, 5년 추정액 0% 이내 국가채무총액(리)의 100% 이하, 5년 추정액 100% 이하 준수
미국	총지출을 한도 안으로 제한(총지출안 예산안) 예산총액(리)을 초과할 수 없음(총지출안 예산안) 국가채무총액 상한을 정함(총지출안 예산안)
스웨덴	총지출(총지출안)을 인플레이션이 제로 이상을 상한 설정 및 통제 연간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GDP의 2% 이하를 목표로 설정
한국	-재정수지 적자 GDP 3%, 국가채무비율 60%로 제시 -국가채무비율 60% * 총지출(총지출안)이 GDP의 1% 이상이면 총지출 통제 -재정수지 적자 안으로 인플레이션 0%로 정함

최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에 발맞춰, 미국·독일·스웨덴 등 선진국의 재정준칙 및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재정준칙 성공의 관건으로 '재정적자 제한'과 '총지출 증가 통제'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가 계속돼 재정적자가 쌓였고 채무가 늘었지만, 스웨덴·독일은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준칙 또는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준칙을 도입해 재정적자를 원천 차단하고 채무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도 스웨덴, 독일식 재정준칙을 벤치마킹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02

##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



# 1)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인 4월에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3만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업자수 33.3만명은 당시 총 실업자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①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② 중소기업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③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④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산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⑤ 고용중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⑥ 최저임금 동결, ⑦ 최저임금제 개선, ⑧ 특별연장근로 허용, ⑨ 탄력근로제 개선, ⑩ 파견제도 개선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경경제**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804면 경제총면

## 한경면 “코로나 실업자 33만명 쏟아질 것”

**정부에 강도높은 지원책 건의**

코로나 사태로 33만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으며 이 같은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대책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과제를 건의했다. 20일 밝혔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한경면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 30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감후 한경면 경제정책실장은 "실업자가 33만 3000명은 올 3월 기준 총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 위기(신규 실업자 92만 2000명) 이후 역사상 두 번째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면은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에도 3개월간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또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권 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형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국내 식당업(학교 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진 기자

**매일경제**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A14면 경제

## “실직자, 금융위기때 3배...최저임금 동결을”

**한경면 코로나 극복 10대 제안**

정부, 직권급여 대출 보증해야  
무급휴직자에도 구직급여 줘야

코로나19 쇼크로 올해 실직자가 최대 33만 3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동결이나 무급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등이 사라지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신규 실업자 18만 2000~33만 3000명이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2019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 관계를 규명한 후 세계은행 등 국내외 14개 연구기관의 국내성장률 전망치를 연계를 분석한 결과다.

실업자 33만 3000명은 2020년 3월 실업자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정 사건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1980년 석유파동 때는 20만 8000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1만 8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한경면은 실업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 8580원으로 3년 만에 32.8% 급등했다. 이상호 한경면 고용정책팀장은 "일중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으로 지급 여백이 없는 사업주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을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처럼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기존 여행·관광업에 면세점업, 국내식당업, 행사대행업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탄력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자는 기존 2주에서 3개월로 늘리고, 서면 합의 시 1년까지 가능하게끔 바꾸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별연장근로제 역시 코로나19 인건 시까지는 노사합의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중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법인세를 공제하는 고용중대세액공제가 존재하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신규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못 보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에(법인 최저한세액) 이상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도,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인원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중소기업의 직원급여 대출에 정부 보증제를 도입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추가 채용에 직권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김형우 기자

1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무급 휴직자 포함
2	중소기업 직권급여 대출에 정부기금보증
3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 국내식당, 행사대행사 포함
4	법인세 이월 결산금 공제 한도를 100%로 확대
5	고용 중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6	2021년 최저임금 동결
7	최저임금제 적용률 저율 적용과 주휴시간 제외
8	특별연장근로는 코로나19 인건 때까지 자율 허용
9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합의 시 1년으로 확대
10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과 기간 제한 폐지

일자리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을 상하반기에 조사하였고, 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홍보하였다.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6개 사 중 27.8%는 올해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한 명도 채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채용을 줄이는 기업은 19.0%이고,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기업은 8.8%였다.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32.5%이며,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대출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 국내의 경제·업종 상황 악화(43.6%) ▷ 회사 내부 상황 악화(34.6%) ▷ 신입사원 조기퇴사·이직 등 인력유출 감소(24.4%) ▷ 인건비 부담 증가(19.2%) ▷ 신규채용 여력 감소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대기업 4곳 중 3곳(74.2%)이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아예 한 명도 뽑지 않을 전망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채용 계획 미수립 기업은 50.0%, 신규채용 '0'인 기업은 24.2%였다. 대출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6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 > 유휴인력 증가, TO 부재 등 회사 내부수요 부족(7.5%)을 꼽았으며,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5.7%), > 정규직 인력 구조조정 어려움(5.7%), >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의 어려움(5.7%)을 동일한 비율로 응답했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 노동·산업 등 기업규제 완화(29.0%), >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8.6%), > 신산업 성장동력 육성 지원(16.9%), >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4.3%), >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10.4%) 순으로 꼽았다.

**東洋日報**  
"경력자에 유리한 수시채용 늘어" ... 취업생엔 더 좁아진 취업문

2020년 9월 7일 월요일 A08면 종합

학업 기간 공백, 학점 하락 등 취업 준비생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취업생에게 더 좁아진 취업문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학업 기간 공백, 학점 하락 등 취업 준비생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아지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취업생에게 더 좁아진 취업문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학업 기간 공백, 학점 하락 등 취업 준비생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아지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취업생에게 더 좁아진 취업문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 코로나 시대 '3無 취업생'**

취업 준비생들은 '3無(無) 취업생'이라고 불린다. '3無'는 '취업할 수 없는', '취업할 수 있는 게 없다'를 의미한다. 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3無(無) 취업생'이라고 불린다. '3無'는 '취업할 수 없는', '취업할 수 있는 게 없다'를 의미한다. 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3無(無) 취업생'이라고 불린다. '3無'는 '취업할 수 없는', '취업할 수 있는 게 없다'를 의미한다. 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청년(15~29세) 경제활동인구가 0.2% 감소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OECD 국가의 경우 청년경제활동인구가 3.9% 감소하고 청년실업자가 30.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데 오히려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에서 3개국(한국, 그리스, 이태리) 뿐이다.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p 증가하였다. 다른 고용지표는 OECD내에서 10년 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에서 2019년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뿐이며, 그중 한국은 그리스, 이태리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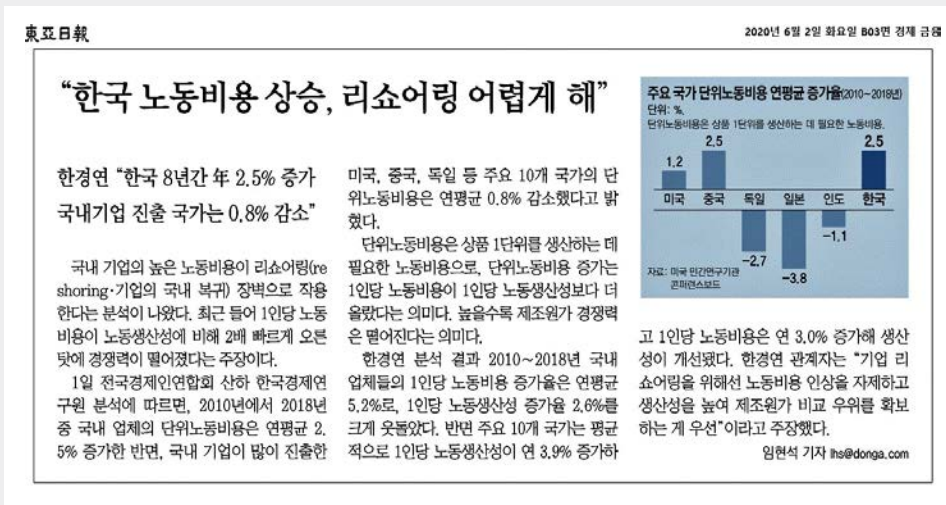
**청년실업률 OECD 5위→20위**  
(2009년) (2019년)

한국·이탈리아·그리스만 증가

OECD 국가 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p포인트 하락했다.

OECD 37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6개국으로,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 폭이 큰 국가는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뿐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에서 2019년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뿐이며, 그중 한국은 그리스, 이태리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제조원가 비교우위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컨퍼런스보드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주요 10개 국가(이하 ‘10대 진출국’)들과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2018년 중 한국의 단위노동비용(US\$ 기준)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10대 진출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2010년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할 때, 2018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116으로 상승한데 비해, ‘리쇼어링 경쟁국’들은 94로 하락하였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에 비해 빠르게 올라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고임금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저해함을 강조하고, 유턴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 자제 및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제적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이슈를 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②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③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입법과제(총 33개)를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나누어 제시했다. 주요과제로는 ▶[노동] ① 대체근로 허용, ② 사업장 내 정의행위 금지, ③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⑤ 최저임금 인상을 상한 설정, ⑥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⑦ 파견 허용업종 확대, ⑧ 임금체계 개편, ▶[환경] ⑨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⑩ 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있다. 추가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달 새 발의된 노동·환경 법안 중 규제 강화법안이 77.4%에 달해 국내 노동경쟁력이 뒷걸음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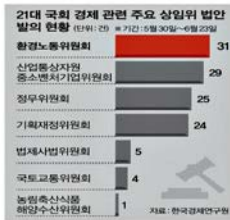
# 21대국회 발의된 환경·노동법안 77%가 “규제”

### 한경연, 관련법안 31개 조사 세계 “勞-使 불균형 계속될듯”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새 발의된 환경·노동 관련 법안 중 규제 강화된 법안이 7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국회발(發) 노동시장 경직 및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뜩이나 하위권인 노동시장 경쟁력이 더 뒷걸음질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 입법기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발의된 환경·노동 관련 법안 31개 법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노동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비중이 77.4% (24개 법안)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법안은 19.4% (6개 법안)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에 경제 법안을 주로 다루는 국회 7개 주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발의된 법안이 가장 많아 ‘노동 국회’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환경·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 대부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폭력·과포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가 아니

면 사업주가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는 노조 입원·조입원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입료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노조 통제에서 일관한 노조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이다.

노조 쟁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의 경감도 허용하게 했다. 세계 관계자는 “노사 관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안영 민주당 의원 주도 발의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생생·건강·안전 업무에는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이 정의안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노동비용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8~'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5.4%(383.6만원→519.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28.4%(491.8만원→631.7만원) 올랐고, 중소기업은 44.8%(295.6만원→427.9만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보면, '08~'18년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8.5%('08년 236.9만원→'18년 351.7만원) 올랐고, 대기업은 30.0%('08년 378.3만원→'18년 491.7만원) 증가했다. 한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08년 58.7만원→'18년 76.2만원), 대기업은 23.3%('08년 113.5만원→'18년 140.0만원) 증가했다.

## 백일경제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A4면 경제

### 대기업 노동비용 28% 늘 때 中企 45% ↑

최근 10년 비교...취직임금 영향

이 중소기업 노동비용이 대기업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2008~2018년)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노동비용이 월평균 28.4% 증가할 때 중소기업 노동비용은 44.8%로 약 1.5배 더

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 월평균 노동비용은 28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같은 기간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직·간접 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늘었다. 중소기업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0% 증가에 그

쳤다. 송민근 기자

## 서울경제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A3면 오너리뷰

### 이래도 친노동정책 계속할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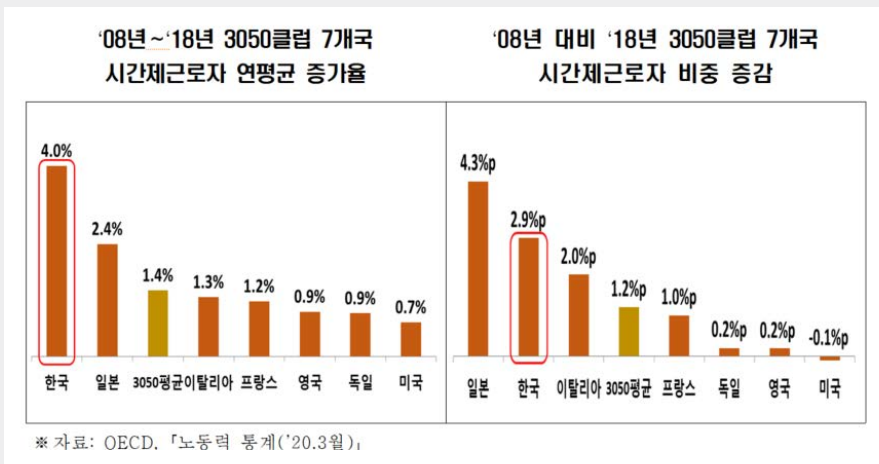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35.4%나 늘었다고 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18년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정액·초과급·상여상급급 등의 직접비용에다 4대보험료·퇴직급여·복지비·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비용 등 근로자에게 투입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3% 오른 점을 감안하면 노동비용 증가가 기업에 미친 영향은 2배에 가깝다. 노동비용 증가율은 대기업(30%)보다 중소기업(44.8%)이 더 높았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해온 결과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 기업 비종인 최저임금 미달률이 10.8%에서 15.5%로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최근 7년간 연평균 2.8% 향상되는 데 그쳐 조식대상 41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미국 편비

런스보드가 2010~2017년 전 세계 41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3.5%)보다는 한참 못 미친 것이다. 특히 이는 일본(4.1%)과 독일(4.0%), 프랑스(2.9%) 등 주요 선진국에도 뒤졌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지지부진했는데 임금 등 노동비용만 증가하게 상승한 셈이다. 특히 한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근로제 및 노동이사제 도입, 연금 사회주의에 이어 청년연장까지 기업 경영활동에 속죄는 정책들을 쏟아내 기업의 허리가 휘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든 기업들 경영의욕이 생기겠는가.

기업이 살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친노동정책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기업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 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으로 2008년 216.9만명 대비 48.6%(+105.4만명)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시간제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하였는데,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인력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 중심의 생존 전략을 전개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등이며, 인력 감축을 응답한 기업비중은 8.8%로 조사되었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인력 감축 기업비중은 32.5%로 크게 증가 하였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 방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 ▶최저임금 동결(19.2%) 등을 요구하였다.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요건 미달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80.6%에 달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유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을 지적했다.

# 올해 207만명 실직... 대기업 33% “코로나 반년 더 가면 감원”

(1~4월)

올해 1~4월 실직자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도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 6000명이다.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올해 1~4월 만에 실직만 이후 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올해 4월 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이 207만 6000명이라는 의미다. 같은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 5000명으로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1~4월 실직자 수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는 종전 최고치였던 2009년 63만 8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해당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한 사람 수와 실직 시기, 실직 사유를 파악한다. 응답자가 실직 사유 가운데 ▶직장의 유·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종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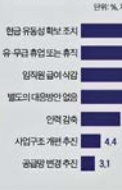
연령 고용률 증가 추이



대기업 고용유지 한계기간



대기업 경영위기 극복방안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가 '비자발적 실직'으로 분류된다. 실직 사유 가운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종료'(33만 5000명)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34만 4000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 5000명), '직장 유·폐업'(16만 명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11만 2000명)보다 네 가까이 늘면서 처음 20만 명을 넘어섰다. 직장 유·폐업으로 인한 실직 역시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8만 3000명)보다 배로 늘

금융위기 뛰어넘어 역대 최대 63%가 10인 미만 사업장 인력 1~4월 비자발적 실직도 104만명 업계 "고용유지지원 요건 완화"를

면서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실직자가 집중됐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 6000명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 5000명인, 5~9인 사업장에서 4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 수가 많았다. 추 의원은 "1~4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40만 명에 후반에 머물던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난해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 피해 본격화 이전인 1~2월 비자발적 실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각각 7만 명,

17만 8000명 늘었다"며 "사군의 고용대란은 코로나19 피해만 아니라 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고용 악화도 영향을 미쳤"고 말했다.

올해 가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대기업도 실업 위기에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 지난 13일부터 2일째 매달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경영 악화가 앞으로 6개월 내 지속할 경우'에 관해 묻자 10곳 중 3곳의 기업(32.5%)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8.8%)의 3.7배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달한 구체적인 고용 유지 한계 기간은 0~4개월(23.3%), 4~6개월(9.2%), 6개월 이상(67.5%)이다.

대기업들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와 "최저임금 동결"(19.2%)을 꼽았다. 이미 휴업·휴직을 하고 있지만, 지원요건 미달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80.6%에 달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이소아 기자 [hn.namhyun@donggong.co.kr](mailto:hn.namhyun@donggong.co.kr)

7월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추어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 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노동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통상적 근로형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0%)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신규도입 또는 확대하였고, 그 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유연근로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로제(26.7%), ▶사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

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대기업의 10개사 중 약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서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등을 지적했다.

**해설자료**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804면 경제총집

### 대기업 75% 유연근무제 절반 이상 "코로나 끝나도 지속"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대기업 4곳 중 3곳꼴로 재택·원격 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75%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 또는 확대했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51.1%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나 지원책을 바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기업 중 75%가 코로나19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6월 8일~7월 6일 진행했으며, 500대 기업 중 120곳

이 응답해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8%포인트다.

응답 대기업 중 75%가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한 가운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 기업 중 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이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38.9%였으며, 더 나빠졌다는 반응은 4.4%에 불과해 기업 인사담당자 사이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유연근무제 시행을 계속하거나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51.1%에 달했다. 유

근무제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두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최대 단위기간을 2주로, 단체협약으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임무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단위기간을 늘려 근로자와 회사에 필요한 기간에 더 밀착하고, 덜 필요한 기간에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송민근 기자

**해설자료**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A16면 경제

### 매일경제 대기업 절반 "코로나 끝나도 재택·원격근무"

환경연 대기업 500곳 조사 60%는 "해보니 만족" 응답

코로나19로 등 떠밀려듯 시작한 유인·원격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원격근무는 물론 선택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코로나19가 끝나고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반응이 절반을 넘었다. 이를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나 지원책을 바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기업 중 75%가 코로나19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6월 8일~7월 6일 진행했으며, 500대 기업 중 120곳

이 응답해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8%포인트다.

응답 대기업 중 75%가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한 가운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 기업 중 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이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38.9%였으며, 더 나빠졌다는 반응은 4.4%에 불과해 기업 인사담당자 사이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유연근무제 시행을 계속하거나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51.1%에 달했다. 유

근무제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두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최대 단위기간을 2주로, 단체협약으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임무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단위기간을 늘려 근로자와 회사에 필요한 기간에 더 밀착하고, 덜 필요한 기간에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송민근 기자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이하 대졸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해설자료**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802면 경제총집

### 대졸 실업률 악화... 10년새 OECD 14위서 28위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1위 일자리가 대졸자 증가 못 따라가

한국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1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포인트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포인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을 낮춘 순서대로 일정한 순위에서 한국은 2009년 OECD 국가 중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하락했다.

한편,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9.2%포인트 올라 OECD 평균(68.6%)을 웃돌았으며 이 기간 평균

OECD 1위였다. 하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권이었다. 2009년 73.9%에서 2019년 76.4%로 2.5%포인트의 소폭 올랐지만 OECD 내 순위는 기간 30위에서 35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환경연은 고학력 청년실업이 심해지는 이유는 노동시장 수요 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학력이 필요하거나 청년이 선호하는 일종의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로 환경연 경제정책실장은 "3초봉 현상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본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 체질 개선 등으로 민간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제안했다. 송민근 기자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하여 8개 국가 뿐이었으며, 증가폭 기준으로 한국(0.7%p)은 그리스(7.0%), 터키(1.7%p), 덴마크(1.5%p)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OECD 37개국 중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크게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한편,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9.2%p 올라 OECD 평균(8.6%p)보다 크게 증가했고, 비교대상 시점인 2009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인력 경쟁력을 비교·조사하고 홍보하였다. 주요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20년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인력 경쟁력을 100이라 했을 때, 주요국의 인력 경쟁력은 미국 123.3, 독일 114.4, 일본 107.8, 중국 106.7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 5년 뒤인 2025년에도 한국의 인력경쟁력은 주요국에 비해 뒤처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드론 등 4차산업혁명 모든 분야에서 꼴찌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20년 현재 4차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은 평균 29.4%에 달했고, 5년 뒤인 2025년에도 28.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의 4차산업혁명 인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인프라 확충(29.6%),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인력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22.2%), 산관학 협력 활성화(14.8%)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추가로 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 인력 확보 애로사항으로 실무에 적합한 기술인력 부족(40.7%), 석·박사 등 전문인력 부족(33.3%),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 부족(11.1%) 등을 지적하였다.

서울경제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A06면 중면

### 청년 사상최대 구직난... 4차혁명 분야는 구인난

**한경연 '인력경쟁력' 조사**  
인력부족률 드론 55%·로봇 35% 인적경쟁력도 주요 5개국중 꼴찌 교육인프라 확충·인재육성 시급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청년이 지난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매칭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협회 9곳을 대상으로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인력부족률이 29.4%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의 약 3분의1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인력이 부족한 기술 분야는 드론(55%), 3D프린팅(35%), 로봇(35%) 등으로 인력부족률이 30%가 넘었다.

5년 뒤인 오는 2025년에도 4차 산업혁명 인력부족률은 28.3%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75%), 로봇(55%)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부족률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인력경쟁력도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한국의 인력경쟁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123.3, 독일 114.4, 일본 107.8, 중국 106.7 순으로 나타나 한국이 가장 뒤처졌다. 주요 국가별로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9개 기반기술 중 산재생애노직을 제외한 8개 분야의 인력 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4개(3D프린팅·산재생애노직·첨단소재·컴퓨팅 기술), 중국은 2개(블록체인·인공지능·컴퓨팅기술), 일본은 2개(블록체인·첨단소재) 분야에서 1위였다.

반면 한국은 한 분야에서도 1위에 오르지 못했고 인공지는 등 6개 분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로봇·산재생애노직·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는 중국을 앞섰다.

5년 후에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인력 경쟁력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인력경쟁력 전망은 미국 121.1, 중국 114.4, 독일 106.7, 일본 104.4로 중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2020년 중국에 앞섰던 로봇·산재생애노직·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도 중국에 따라잡혀 2025년 모든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비교 대상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재용기자 ylee@sedaily.com

국가	인력부족률 (%)
드론	75
로봇	55
사물인터넷	25
3D프린팅	25
산재생애노직	25
첨단소재	25
인공지능	15
블록체인	5
컴퓨팅기술	5

※인력부족률 = (인력 수요 - 인력 공급) / 인력 수요 × 100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B04면 중면

### 취업난은 사상 최고 4차산업은 구인난

청년 취업난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심화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11일 "소프트웨어산업, 온온블록체인, 로봇, 드론 등 9개 분야의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한국 4차 산업혁명의 인력 부족률은 29.4%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률은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해 부족한 인력의 비율로, 약 3분의 1이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주요 기술 분야는 드론(55%), 3D프린팅(35%), 로봇(35%)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경쟁력도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력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123.3), 독일(114.4), 일본(107.8), 중국(106.7) 순이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9개 분야 중 산재생애노직을 제외한 8개에서 1위(공통 1위 포함)를 차지했다. 독일은 4개(3D프린팅·산재생애노직·첨단소재·컴퓨팅기술), 중국은 3개(블록체인·인공지능·컴퓨팅기술), 일본은 2개(블록체인·첨단소재) 분야에서 1위였다.

한국은 1위에 오른 분야가 1개도 없었고, 인공지는 등 6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5년 뒤에는 현재 중국에 앞선 있는 로봇·산재생애노직·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 도 예전답게 9개 분야 모두에서 꼴찌가 머를 것으로 전망됐다.

신은진 기자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 실업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홍보하였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WEF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 중 노사관계가 협력적인지 대립적인지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이 1단계 개선될 경우, 한국의 청년고용률(25~29세)은 4.8%p 증가하고 청년실업률(25~29세)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이 산업별 노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기업별 노조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임금결정 유연성이 1단계 개선될 경우, 청년고용률(25~29세)은 1.3%p 증가하고 청년실업률(25~29세)은 △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진행한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0년 08월 19일 수요일  
A17면 경제

**“노동유연성 높여야  
청년고용률 올라간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청년 실업이 최악 상황으로 떨어진 가운데 한국 노동유연성 수준이 높아지면 청년 고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노사협력’과 ‘임금 결정 유연성’ 지표가 상향되면 청년 고용률이 오르고 청년 실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 협력은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 노사 협력 점수는 2019년 기준 3.59점(점수 범위 1~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다. 1점이 상승해 호주(4.58점) 수준이 되면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은 25~29세가 4.8%포인트, 15~24세가 19.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 기자

**서울경제**  
2020년 08월 19일 수요일 A35면 오피니언

**노동 개혁으로 청년 취업 빙하기 벗어나야**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취업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8일 상경사 53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곳이 57.2%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9.6%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는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5.6%로 7월 기준으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에 취업 시기를 맞은 청년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불렀던 현상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는 큰 시사점을 준다. 환경연은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9~2019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세부지표 중 노사협력 점수(7점 만점)가 1점 오르면 청년고용률이 4.8%포인트(25~29세), 19.8%포인트(15~24세)나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3.7%포인트(25~29세), 6.4%포인트(15~24세) 줄었다. 또 임금결정 유연성 또는 고용·해고 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고용률이 올랐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기준으로 141개국 중 97위로 매우 낮았다. 기업이 신속적으로 고용 수준을 조절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만 높여도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튼튼 때마다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권고해온 사항이다. 독일 통일 후유증으로 한때 ‘유령의 병자’로 불리며 저성장기에 시달리던 독일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퇴민주당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탈바꿈했다. 문재인 정부도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도 성장시키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 유턴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을 제조기업 유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 중 5.6%는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유턴을 하지 않는다는 환경연의 과거 조사결과(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 '18.11월)를 토대로, 2018년 기준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매출액(363.9조 원)의 5.6%인 20.4조 원이 국내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의 고용창출효과가 4.3만 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전자(3.2만 명), 전기장비(1.0만 명) 순이었다. 더불어,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이 유턴할 경우, 생산유발액 40.0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13.1조 원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에 다방면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해외진출 기업 5.6% 유턴뎀 일자리 13만개 생겨”

한경연 “코로나에 글로벌 공장 비상  
규제개선 등 복귀 유도정책 필요”

규제 개선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돌아오면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11월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를 기초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경연은 당시 설문조사 응답을 근거로 국내 규제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진출 기업 비중을 5.6%로 가정했다. 5.6%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4.2%)과 과도한 기업 규제(0.7%), 인센티브 부족(0.7%)을 꼽은 기업의 비중을 더한 수치다.

한경연은 이를 기초로 매출액 20조4000억 원

수준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고용 효과는 1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 자동차 4만 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 명 등의 순으로 추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글로벌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세계 개선과 노동 개혁을 통해 해외 진출 대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지민규 기자 warum@donga.com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관광산업 유발 일자리 감소효과를 추정하고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개선방안 및 산업활력을 위한 업계의견을 제시 및 홍보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6월 외국인관광객은 △99.0%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19,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13.2조 원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유발액은 △6.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 감소된 취업유발인원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0,009명, 숙박서비스 25,805명, 음식점 및 주점 22,78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시 적용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로 무기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광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 감면, 면세품 인도 전용 관광산업 개발 등을 제안했다.

## 2) 노동정책 대응

2020년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5월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규제 개선(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정부는 6월 원안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언론 기고, 전문가 세미나, 前노동부장관 초청 좌담회, 32개 단체 공동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히려 노조의 정부개정안 반대 규정을 삭제해 정부개정안 보다 더 노조에 기울어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시행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호소문까지 발표했으나,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盧정부 장관 김대환 “文정부 노동정책, 좌우신발 바꿔 신는 것”

한경연 좌담회에서 정부정책 비판 “기업엔 공정 요구해 과도한 규제 노조엔 글로벌 기준 자의적 적용”



교수는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정치 세력으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유럽 시스템에 기반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따르기 위해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고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의 노조 전입자 임금 지급 하유에 대해서는 “ILO가 규정하는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자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캐나다에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일본도 임금 지급을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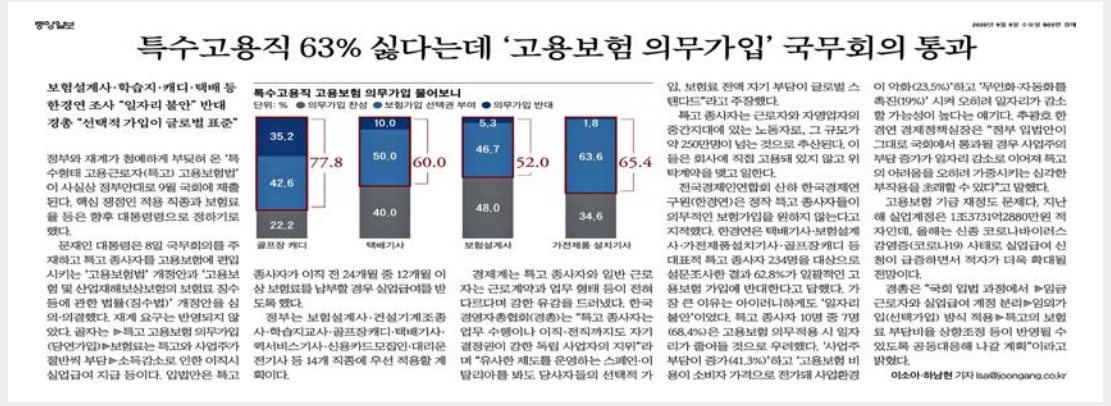
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는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책 밑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며 “기업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기자

“지금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행은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존중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좌담회에 참석한 김대환(사진) 전 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인하대 명예

2020년 노동이슈 중 하나는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특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의견서에서는 ① 보험 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② 고용보험 적용방식, ③ 실업급여 재정수지, ④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⑤ 고용보험 수급자격, ⑥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 예고안의 쟁점분야를 총 6개로 꼽으면서, 예고안대로 법안이 마련될 경우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 임의가입 방식 적용 등을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특고 10명 중 6명 이상(62.8%)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특고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68.4%)고 우려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인 특고도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 입장에도 정부는 원안을 대부분 유지한 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14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의 공동건의문 발표, 언론사 기획기사 등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가뜰이나 어려웠던 골목상권 경기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하여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이에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경기현황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류점업 등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올해 2~3월 중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8% 급감하고, 평균 순이익은 44.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 협회들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59.4%),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결정(53.1%) 등을 요구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압도적 비율(83.9%)로 동결(58.1%)·인하(25.8%)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은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이 사상최악으로 치달았다. 반면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었다. 이에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회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다.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각각 담겨있다. 이를 통해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 청년절망 3법: ①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②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현행은 1년 이상), ③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 “노동3법, 경제약자 보호? 청년 절망3법 될 것”

**노동3법 왜 '청년 절망3법'인가**

**노조법** 자료: 언론연

-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 노조 2인 이상 지급 허용
- 노동경찰직 신설로 효율적 인력운용 어려움
- 신규 채용 여력 감소

**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 대상 확대
- 1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무
- 퇴직급여 재원 전액 사용자 부담, 인건비 급증
- 신규 채용 여력 감소

**근로기준법**

- 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
- 직접고용 의무화로 인건비 증가
- 신규 채용 여력 감소

**한국 특이점인 청년 고용 순위** 단위: %, 자료: OECD

국가	청년 실업률 (%)
일본	8.6(19위)
독일	4.9
네덜란드	5.4
이스라엘	6.0
미국	6.4
스위스	6.6
오스트리아	6.8
노르웨이	7.3
헝가리	7.3
영국	7.9
뉴질랜드	8.1
<b>한국</b>	<b>8.9(20위)</b>
OECD 평균	10.5
룩셈부르크	10.6
스페인	13.7
프랑스	15.3
터키	22.1
이탈리아	22.4
그리스(37위)	28.9

2019년 청년 실업률 25.4% (9월 기준, 자료: 통계청)

해도록 하는 “노조법” ▶ 퇴직급여 대상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한 “퇴직급여 보장법” ▶ 상시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이다. 전경련은 “이 법안들은 경제계 약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필방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필방감만 안기는 청년절망3법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4%에 달한다. 청년 넷 중 하나는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졸업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도 지난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업계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조사해 보니 매출 500대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24.2%)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50%)고 답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은 만악의 사태에 대비해 비용을 줄이는 내실경영에 들어간 상태”라며 “우리나라 근로법은 사명 한 명을 뽑으면 해고는커녕 부서나 임용 조정조차 어려워 위기일수록 아예 채용을 안 하거나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조법의 경우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 노사 교섭 분위가 해고자 복지 등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로까지 확대돼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소하 기자 isoh@joonang.co.kr

▶ B3면 ‘청년절망 3법’으로 계속

출 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A대표는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정직원들은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다. 고용을 기업이 하지 정부가 하나”며 답답해했다.

국회에 발의된 노동법안들이 가뜰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국내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과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법안들이 속속 발의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은 안이든 법안은 크게 3가지다. ▶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일자에게 임금을 지급

한국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국가는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며, 비교 대상 지표는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세 가지이다. 우선 고용·해고규제를 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 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규제의 경우,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도입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달리 G5 중 미국,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고,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0년~2018년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5와 달리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경제**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069면 5쪽

### “韓 노동시장, G5보다 비용 부담 높고 경직”

**한정연, 고용·해고규제 등 분석 경쟁력 낮춰 일자리 창출도 막아**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른바 주요 5개국(G5,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보다 고용과 해고, 근로시간 등에서 경직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 인력 운영과 채용을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정연 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G5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는 19일 밝혔다. 한정연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고용 규제의 경우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대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과도한 재원 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 및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sdh@aj.com](mailto:sdh@aj.com)

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A 고용·해고 규제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이 없음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이 없음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이 없음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이 없음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이 없음	제조업 외 32개 업종만 가능
B 근로시간 규제	6개월 이상~해당업종	6개월 이상~해당업종	6개월 이상~해당업종	6개월 이상~해당업종	6개월 이상~해당업종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도입이 가능
C 노동비용 부담	연 1.5% 감소	연 1.5% 감소	연 1.5% 감소	연 1.5% 감소	연 1.5% 감소	연 2.5% 증가

\* 2010년~2018년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 한국은 연 2.5% 증가, G5는 연 1.5% 감소. 출처: OECD,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산업재해 발생을 막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불명확한 의무와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규정하였고, 하한형의 징역을 규정하여 다른 법률 대비 처벌 수위가 과도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경제·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업종별 협회 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주 처벌 수준, 법인에 대한 벌금 등이 과도하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11/3)하였다. 또한, 30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11/19)하였고,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12/16)하였다. 더불어, 한국과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업안전 재해 처벌 제도를 비교(12/16)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모델로 하고 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이미 주요국보다 산업재해 기업 처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도 기업과실치사법보다 강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기업 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을 분석해보았을 때, 기업 처벌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불명확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문과일보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621면 2면

## 코로나·적자·기업규제 입법… 대기업 임단협 ‘가시밭길’

**한경연, 교섭협상 조사**  
 “경쟁실적 작년비 약화” 54%  
 타결 임금인상률 평균 1.9%  
 쟁, 기준급·복지확대 요구 많아  
 인사·경영권 참여 항목도 포함  
 쟁. “52시간·피차임금 큰 영향”  
 “1년 미만 피차급이” 가장 우려

**한경연 조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적 부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국내 대기업 임단협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둘러싼 협상 여건이 지난해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은 어려운데 기준급 인상과 복리후생 강화에 대해서는 노동계 움직임이 두드러진 대목이다. “1년 미만 근로자 피차급에 보충” 등 경영 부담을 늘리는 법안만 있으면 별다른 의의가 없겠다. 이에 따라 근로자 단체와 회계법인 인상으로 위축된 기업 경영 예산이 한층 더 곤란해질 것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리서치센터가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은 올해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올

**21대 국회 노동법 관련 기업 부담 가중 법안** (중복응답률 0%~100%)

년 미인사 확대 보장	50.8
상사제입부 장외식 의무화	30.8
장제외 요건 강화	29.2
제외자·임단협 노조가입 허용	25.0
사제외직역의 행정처분 포괄	12.5
상사제외 복리후생 근로계약 확대	10.0

120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임단협 교섭 현황과 노동법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경영실적 전망이 “약 년보다 약화”라는 답은 54.1%로 “약년보다 개선”(21.7%)의 2.5배에 달했다. 이런 상황은 올해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올

래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렵다”(37.5%)는 답이 “약년보다 양호하다”(15.0%)는 답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타결된 임단협인상률도 낮아져 임단협 상승 전망 중이거나 완화된 86개사의 경우 노조는 평균 4.4%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최종 타결된 인상률은 평균 1.9%로 지난해(3.1%)보다 낮았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은 △기준급 인상(66.7%) △복리후생 확대(58.3%) △상사제외 입법(50.8%) △정년 연장(15.8%)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단협에도 사측이 조항에 대한 인사 조치 시 노조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 항목이 포함됐다. 노동계 부담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60%)과 최저임금인상(47.8%)이 지적됐다.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된 21대 국회에 발의되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년 미만 근로자 피차급에 보충”(법제규제보강법, 기법)이 50.8%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사제외 입부 장외식 고의무화(기간제법, 법의예상, 30.8%) △정년연고 요건 완화(근로7개년법, 법의예상, 29.2%) △제외자·임단협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기법), 28.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노조 파업 때 사측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사임장 임가는 법적으로 간주하도록 한 해외 각국의 사례는 어떤 양 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노사 관중재 부정적 영향만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방 후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활동을 늘리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주적인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에 중점을 두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의 노사관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노사관계지표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동기간 평균 임금근로자 천 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0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조가입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의 2008년~2018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p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한해만 1.1%p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08년 대비 '18년에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 외에 프랑스(0.3%p) 뿐이며, 일본(-1.0%p), 미국(-1.9%p), 독일(-2.5%p), 영국(-4.0%p)은 노조가입률이 감소했다.

‘주한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54.3%로,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규모를 23.4% 늘릴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해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력적노사관계 정착을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으로 ▶협력적인노사문화구축(34.1%)을 가장 많이 주문했고,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순으로 응답했다.

### 파업 등 노동 손실 일수, 한국이 일본의 209배

#### 한국경제연구원, 노사관계 분석 노사협력 수준 141국 중 130위

한국의 노사분류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日數)가 일본의 209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8~2018년 한국과 주요 5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노동 손실 일수는 파업·태업 등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 시간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것이다.

이 기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 손실 일수는 한국 41.8일, 프랑스 40일, 영국 19.5일, 미국 6.7일, 독일 4.3일, 일본 0.2일 순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의 209배, 독일의 9.7배에 달했다.

한국과 주요 5국의 노동 손실 일수가 차이는 배경을 환경면의 노사 협력

·노동유연성 수준에서 찾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노사 협력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141국 중 130위로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와 격차가 있었다.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97위)은 미국(9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에 밀렸다.

노동조합 가입율을 보면 한국은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미국·독일·영국은 내려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 손실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 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외국기업 54% “韓노사관계 부정적”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 20% 더 늘것”

#### 주한 외국기업 138곳 설문조사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협박기를 두고 노총 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 노사관계만 개선돼도 투자를 20% 이상 늘리겠다고 답한 실태가 드러났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 기업 138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4.3%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라는 응답(16.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번 설문은 환경면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월드에서 의뢰해 주한 외국 기업 총 응답률 100% 이상인 기업 901곳에 설문용 용지에 138곳만 응답한 결과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7.68%포인트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본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이라는 것이 응답 기업 평균이었다. 중국은 9.1로 한국보다 낮았다.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노사관계 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응답 기업은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일본 수준으로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더 늘릴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54.3%에 달했다. 반면에 한국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도 답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28억달러였다. 지난해 연평균 달러당 원가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FDI는 1455000억에 달해 한 해 약 35000억 원의 규모 투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 외국 기업이 노사 관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용 조정이 어렵다는 외국 기업이 한국 노조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많았다. 송한근 기자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보고서(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인정하는 직장폐쇄의 경우 판례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허용,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쟁의행위로서의 수단인 파업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나 요구에 반하여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침해하여 헌법 23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조업 방해행위임을 지적하고, 노사간 무기대응의 원칙에 입각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조법 개정 강행맨, 대체근로 허용해야”

### 환경연 노동법 개정안에 일침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 속 대항권이 유방무시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사간 합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정관회관에서 ‘노사 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부담을 요구까지 들어주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기한 국내 노사관계 문제점을 △사용자 대항권 상실 △쟁의행위 유방 △보장 △파업 중단 사용자 징벌 조항 등 크게 세 가지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직장폐쇄(46조)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금지(42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대항행위·방어 직장폐쇄만 허용된다. 게다가 과거 대항권 조항에 대해 공적거부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아 이 조항은 근로자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대체근로제도	△	○	△	○	△	○
사업장내 쟁의행위	△	△	△	△	△	○
부당노동행위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허용 ○금지 △부분적 허용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외국은 기업 대항권 인정

### ILO도 “폭력 점거시 제재”

### 유럽서는 직장폐쇄도 허용

### 국내기업들은 속수무책

### 대체근로금지 OECD 중 유일

### 노사분류권 더 심해질 가능성

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한국이 대채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노사 권한 불균형을 조려 내는 원인으로 꼽힌다. 대체근로는 사용자 파업기간 중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금지 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연장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노사교섭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기업이 연례대체 내기 수단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헌법 15조)와 재산권(헌법 23조)을 침해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목적만 강조해 대체근로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장래의 최소성 등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노조법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 노조법은 점거 금지 사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허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단결권과 사용자 재산권·영입권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ILO도 평화적 수단을 넘는 직장점거는 허용하지 않고 이를 규제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점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침해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법(30조)이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겐 민사책임을 묻는 법 체계도 균형을 맞아야 할 부분이다. 현행법은 노조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 법적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무 위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제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명시적법 규정은 없다.

한경연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희성 교수 비롯해 김영호 전법대 교수, 박기성 정선애 대교수, 조영일 법원법무법인 아이엠에스 대표, 최흥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노사 간 무기대응이 양측에 대항근로도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라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노사관계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되면 노사 양자 모두 결국 지는 수 있다”며 “헌법적 노사관계는 노(勞)와 사(資)의 선의적·양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성 기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정부노조법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한 협약을 무효로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판결으로 판결이 났다. 환경연은 이중 불법판결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판결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① 간접공정, ② 사외하청, ③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고,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132일 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발의된 법안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법안 총 392개 중 환경법안을 제외한 고용·노동 법안은 264개로 67.3%였다. 이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한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부지원 19개(7.2%), 중립 18개(6.8%) 순이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퇴직급여 등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東亞日報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804면 경제 4면

### “고용-노동 법안 10건중 7건은 규제 조치”

**한경연, 4개월간 발의 264건 분석 “노조 권한 높이고 자율해결 막아”**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7개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이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 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규제 법안들을 사용자에 대한 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 권한만을 키우는 것 사용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것 △현장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

**고용 노동 관련 규제 법안 관련 우려**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불법 파업 시에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 금지 등
일자리 감소 우려	한 달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급여 지급 등
규제 완화주의 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 직장 밖 이해관계자 등 제3자까지 확대 등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이해관계자 등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형태공시제도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핵심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4)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규제 대응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도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20여 년간('99~'19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근로자 평균연령은 1999년 35.5세에서 2019년 42.1세로 6.6세 높아진 반면, 일본은 40.4세에서 42.7세로 2.3세 증가했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1999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는 일본보다 4.9세 젊었으나, 2019년에는 차이가 0.6세로 좁혀졌다. 지난 20여 년 간의 속도대로라면, 2022년부터는 한국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조업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인력 고부가가치화와 성과·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12월 11일 수요일 802면 경제종합

### 한국 제조업 고령화, 일본보다 2.9배 빠르다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도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일본보다도 제조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20여년간(1999~2019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근로자 평균연령은 1999년 35.5세에서 2019년 42.1세로 6.6세 높아진 반면, 일본은 40.4세에서 42.7세로 2.3세 증가했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증가 폭 기준으로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는 일본보다 4.9세 젊었으나, 2019년에는 차이가 0.6세로 좁혀졌다.

한경연은 지난 20여년간의 속도대로라면, 2022년부터는 한국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고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진 기자

2020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해인 2060년에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48.1%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령인구는 42.8%, 현역입영대상자는 38.7% 수준으로 감소하여 경제·교육·국방 등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게 됨을 분석했다.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서 총 209.5조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지원대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금보조 확대 등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제시했다.

### 올해 신생아 40살 땀 일할 사람 반토막, 노인 부양비 4.5배 급증

(2060년)

**출산율 높이려면 현금보조 확대**  
세계 예대각은 간접지원은 한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한국의 국외로 직결되는 인구는 2060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5년 부양비는 현재의 4.5배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감소해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살이 되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2030년의 48.1%, 현역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88명으로 늘어나 4배에 달해 부담이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 현금보조 확대 ▶ 국공립 취원율 향상 ▶ 노·노·금사상 유선으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원에서 현금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2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OECD 국가들이 현금보조 평균은 50.9%에 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아동 1인당 수당을 20세까지 월 205유로(약 40만원) 지급

**생산가능인구 전망**  
▶ 생산가능인구(2019년 기준, 만 명)  
▶ 10년 후(2029년 기준, 만 명)  
▶ 20년 후(2039년 기준, 만 명)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다. 사진은 대한의원 산부인과 산방아실.

하고, 출산장여금 923유로(약 128만원)는 물론 자녀간호수당도 월급 일당 43유로(약 6만원)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상호 한경연 고령정책팀장은 "해외의 경우 아이에게 고대금 지급하는 제도도 많이 부도들이 지원을

바다 제갈하는 반면 한국은 자녀에 따른 세제 혜택 등 간접지원이 많아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15개 국가와 2019년 합계출산율 평균인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선다.

반면 어린이집 등 비용은 해외 주52교보다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립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공립가정유아취원율은 한국이 21.9%로 OECD 평균인 66.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노동유연성도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0만 국내총생산(GDP)당 취업자가 1인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장기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와 기사 [hkr.hoonq.com](http://hkr.hoonq.com)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했다.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87.2%에 달했고, 기업의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82.7%는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 강화되었다고 응답했고, 72.9%는 21대 국회에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로 배출권거래법(38.6%), 화평·화관법(31.3%)을 꼽았다. 이들은 규제 애로사항으로 이행능력·기업현실과 괴리(51.9%)되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세부지침이 모호하다는 의견(36.8%)도 제기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을 반영(30.5%)하고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 기준을 설정(27.2%)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일보  
2020년 4월 9일 월요일 44면 47면 48면

### 기업 72.9% "21대국회, 20대때보다 환경규제 더 강화될 것"

**매출액 600대 기업 조사**  
87% "환경규제, 경영에 영향"  
환경연 "기업협력 제해할수도"

주요 환경규제 제도/대상 및 개정방향	개선방향
배출권거래법 제15조 경이치는 배출권 거래량 불충분액에 따라 불량 배출	실용적인 실적 제고 방안 필요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5조 제5항 제15조 제6항 제15조 제7항 제15조 제8항 제15조 제9항 제15조 제10항 제15조 제11항 제15조 제12항 제15조 제13항 제15조 제14항 제15조 제15항 제15조 제16항 제15조 제17항 제15조 제18항 제15조 제19항 제15조 제20항 제15조 제21항 제15조 제22항 제15조 제23항 제15조 제24항 제15조 제25항 제15조 제26항 제15조 제27항 제15조 제28항 제15조 제29항 제15조 제30항 제15조 제31항 제15조 제32항 제15조 제33항 제15조 제34항 제15조 제35항 제15조 제36항 제15조 제37항 제15조 제38항 제15조 제39항 제15조 제40항 제15조 제41항 제15조 제42항 제15조 제43항 제15조 제44항 제15조 제45항 제15조 제46항 제15조 제47항 제15조 제48항 제15조 제49항 제15조 제50항 제15조 제51항 제15조 제52항 제15조 제53항 제15조 제54항 제15조 제55항 제15조 제56항 제15조 제57항 제15조 제58항 제15조 제59항 제15조 제60항 제15조 제61항 제15조 제62항 제15조 제63항 제15조 제64항 제15조 제65항 제15조 제66항 제15조 제67항 제15조 제68항 제15조 제69항 제15조 제70항 제15조 제71항 제15조 제72항 제15조 제73항 제15조 제74항 제15조 제75항 제15조 제76항 제15조 제77항 제15조 제78항 제15조 제79항 제15조 제80항 제15조 제81항 제15조 제82항 제15조 제83항 제15조 제84항 제15조 제85항 제15조 제86항 제15조 제87항 제15조 제88항 제15조 제89항 제15조 제90항 제15조 제91항 제15조 제92항 제15조 제93항 제15조 제94항 제15조 제95항 제15조 제96항 제15조 제97항 제15조 제98항 제15조 제99항 제15조 제100항	실용적인 실적 제고 방안 필요 이행능력 고려한 기준 설정 모호한 세부지침 보완 기업현실 반영

환경연 "기업협력 제해할수도"  
배출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방향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따라 규정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따라 규정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東亞日報  
2020년 4월 9일 월요일 804면 경제 2면

### "과도한 환경규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환경연, 매출 600대 기업 인식조사**  
87% "환경규제로 경영 영향"  
73% "21대국회, 규제 더 강화할듯"

과도한 환경규제가 결국 기업 생산비용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엔디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이들 중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

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 집중배출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기업 과반은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이행 능력과 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응답도 36.8%였다.

또 대부분의 기업(82.7%)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느꼈다. 20대 국회보다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도 72.9%나 됐다. 이에 기업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법률 제정·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30.5%) △이행 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 기준 설정(27.2%) △신설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을 주문했다.

허용은 기자 hungry@donga.com

2020년 7월,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매출액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나간다고 밝힘에 따라,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규제 개선 성과와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였으나,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기업(57.5%)들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등을 지적했다. 특히,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해서는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25.7%) 등을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았고,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32.3%) 등을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을 반영(42.1%)하고,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해달라고 요청했다.





part **3**

언론과  
한국경제연구원



01

# 경제와 기업의 상황 진단 및 해법 제안





# 올 성장률 -2.3%...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

真道日載

2020년 4월 9일 목요일 801면 경제 글로

## “올 성장률 -2.3%...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

한경연 “코로나로 극심한 침체 예상”  
기존 전망치 1.9%서 하향 조정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4.2%포인트 내린 -2.3%로 낮춰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6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동향과 전망 2020년 1분기(1~3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때는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5.1%)뿐이다.

특히 한경연은 올해 내린 소비자 -3.7%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민간 소비가 내수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는데 마



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상당 기간 심각한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 수출도 세계 교역량 감소 영향으로 -2.2%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이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3개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 -3.3%, 중국 1.6%, 일본 -2.7%로 낮춰 잡았다. 한경연은 이를 기준으로 올해 미국의 역성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0%포인트 떨어뜨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지민우 기자 wum@donga.com

매일경제

2020년 4월 9일 목요일 A15면 경제

## 설마했는데... “올해 한국 성장률 -2.3%”

한국경제연구원 전망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예측  
“美·中 1% 하락때韓 0.4%↓”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196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해외 주요 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줄이기 위해 내리는 가운데 국내 연구기관으로서서는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2020년에 1.9%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에 비해 4.2%포인트 내린 -2.3% 성장을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소비는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 역시 2.2% 줄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은 내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주요국 경기 부진과 교역량 감

소로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4% 떨어졌다.

중국과 일본이 1%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각각 0.4%, 0.5%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비투자는 -

18.7%로 지난해 -8.1%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13.5%로 지난해 -3.3%에 비해 가파르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0.4%보다 낮은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 침체, 서비스업 부진과 기계부재 증가, 교역량 등 구조적 원인이 더해졌다. 김홍우 기자

중앙일보

2020년 4월 9일 목요일 803면 경제

# “올해 성장률 -2.3% 외환위기 이후 최저될 것”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1.9% 성장에서 전망치를 4.2%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3.2%로 크게 떨어지고 하반기에도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8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사실상 마비 상태인 생산·소비할

한경연, 코로나 경제쇼크 전망  
상반기 -3.2%, 하반기도 마이너스  
수출 -2.2%, 투자 -18.7% 급감 예상  
“경제위기 수준 경기침체 불가피”

### 한경연 2020년 국내경기 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2019	2020
GDP 성장률	2.0	-2.3
소비자물가	0.4	0.3
실업률	3.8	4.2
경상수지	600억	510억 달러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동,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이미 본격화된 경기 침체 흐름을 전환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가 -3.7%로 상당 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다에 이 큰 소비심리가 민간소비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침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성장을 이끌 실질 수출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기의 동반 하락으로 세계교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여파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온 설비투자(-18.7%)는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침체와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위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역시 공사 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13.5%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실업률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4.2%로 오를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락,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경연은 “현재 위기상황이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지는 코로나19 상황 종결 시점과 주요국의 경기둔화 폭, 정부 대

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주요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은 한국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노무라증권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7%로 내렸고,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3%로 낮추는 등 역성장을 예상한 기관이 많다.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5.1%)뿐이다.

손혜용 경제에디터  
sohn.yong@joongang.co.kr

# 코로나19 종식돼도 경제위기는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장기화

한국경제

## “소주성 탕 체력 약해진 경제, 코로나후 회복 더딜듯”

(소속주도상장)

한경연 보고서 “V자 반등 어렵다” 1930년대 대공황 위기 악화시킨 미국 정책과 유사한 패턴 찾아 금융위기때보다 장기화될 것

소매유통업 저수역 확대 최저치 기업들 “규제 풀어야” 호소

한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 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의 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제 발달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反)시장적인 소득 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금성 복지 확대 등으로 위기 후 반등에 필요한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체에선 “세계 경제와 비교 구제책 등 경제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 오고 있다.

“약해진 경제 체력... 코로나 후 V반등 어렵다”

한경연은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근거로 GDP(국내총생산) 곱(gdp) 추세를 들었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열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의 차인 ‘GDP 갭’은 지난해 -2.1%포인트를 기록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가 기초 체력면에서 심약해 못 났다는 뜻이다. 지난해 수치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1.2%포인트보다도 낮다.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이 훼손되면서 침체가 들어갔다는

뜻’이라며 “GDP 곱 하락률이 OECD 36개 국가 중 터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라고 했다.

한경연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미국이 국가산업을총범을 재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해 위기를 심화시킨 상황이 현재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선 최저임금이 2017년 670원에서 작년 8550원으로 2년 새 23% 올랐다. 2018년에는 주 50시간제도 도입 했다.

“위기장 1년”에 대한 우려는 수저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6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약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 패셔너블 회사 수출 담당 부서 인건비 10%에 대해 “대체로 인건비는 늘 유혹적이었던 만큼 구조 조정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계 ‘규제 총 제거’해야”

재계에선 과감한 경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2008년 금융 위기에서 한국이 빠르게 회복했던 이유로 밝힌 세 안과(2009년) 등 정부의 단기적인 행보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경연 조경업 경제연구소장은 “금융 위기 후 한국은 주가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리는 등 비교적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경제 등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자유총회의(경총)는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특별연명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이전부터 발목을 잡았던 규제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경제계 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고사 직전인 항공업계는 자산 규모 조달 이상 항공사는 재산세 같은 부담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전체 국회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같은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통업계는 의무 휴업일과 영업의 시기에 대상 물품의 온라인 배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예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석남은 기자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A08면 5중첩

한국경제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A03면 5중첩

## 한경연, 경제전망 보고서 “세계교역 증가율 6%P ↓ 코로나 사태 끝나도 한국 V자 반등 어렵다”

한국경제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A03면 5중첩

### 쏟아지는 경제위기 장기화 경고, 규제완화·유동성 공급 서둘러야

코로나19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은 14~15일 일일 총체 회복을 앞두고 9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지만 IMF 총재의 발언 후보다도 이번 코로나-19 소크가 얼마나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19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했으나 이날 4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 후 불과 5일 만에 150%가 넘는 약 10년간 지속된 대공황과 비교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전경련 상회 한국경제연구원은 여제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킨 미국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생산량 제한 등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다. 그 바람에 경제가 더 비극적으로 악화되고 회복에 지연했다는 분석이

다. 그동안 한국이 취했던 것과 비슷한 정책 흐름이다. 한국 경제자유총회도 임종철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유통성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공통 진의사항을 내놓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 불황의 여파가 심각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대응요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가세소비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금수입이 크게 줄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평균 6%포인트가량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타진 이후 3년간의 영향을 평균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타진 이후 3년간의 영향을 평균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이런 코로나 불황은 공급과 소비, 신품과 금융이 한꺼번에 타격을 입은 유례없는 상황이다. 경제자유총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다. 이번 불황을 기존 정책을 전방위로 재검토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산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크로 글로벌 교역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이 오랜 기간 고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위제가 타격을 때 세계 교역 증가율이 평균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타진 이후 3년간의 영향을 평균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타진 이후 3년간의 영향을 평균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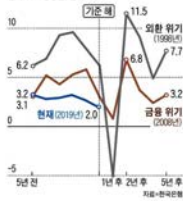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한국 경제의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의 체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건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GDP갭은 -2.1%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포인트)보다 낮았다. 코로나19 인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는 얘기다. 조 심장은 “획기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업의 크기를 따지며 지원을 미꾸러니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자유총회회는 이날 7개 업종별 단체의 주장을 취합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성 공급 확대 △특별연장조로 허용 △공공조달 예산 상한치 집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세계 지원 확대 등이 공통된 요구였다.

경총 관계자는 “태풍과 아이리 급강했다지만 사업장 유지를 위한 고정비,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예년 수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황정수 기자 click@hankyung.com

위기 때 V자 반등했던 한국 경제. 이번에는? 한국 GDP 성장률, 단위: %





#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코로나19 영향으로 IMF때 보다 감소폭 커

한경연

2020년 5월 7일 목요일 803면 3면

## 3월 취업자 0.7% 감소? “온전한 일자리는 10배 넘게 줄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다.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이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지난 3월 취업자 수 감소율은 공식 통계의 10배 이상이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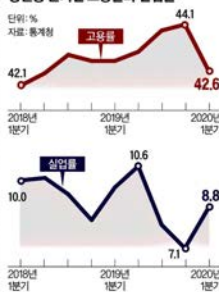
**한경연 '정부 고용통계' 재분석**  
주 40시간 기준으로 취업자 환산  
3월 -7.6%, 외환위기 때보다 나빠  
**청년 취업난, 10년간 소득에 영향**  
가난한 코로나 세대 양산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정부가 발표한 통계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경제학)에게 의뢰해 6일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이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한 명으로 산정한다.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면 0.5명, 60시간 일하면 1.5명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6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하지만 박 교수팀이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2546만 명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 3월 취업자 수 감소율은 7.6%로 공식 통계의 10배 이상이었다. 통계청은 일주일 동안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간주한다. 월간 취업자 수가 7.6% 감소한 것은 1997~98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7.0%)보다 상황이 나쁘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업종별 취업자 수 감소율은 교육·서비스업(-5.4%)과 숙박·음식업(-4.9%), 도·소매업(-4.6%)의 순이었다.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따지면 업종별 취업자 수 감소율이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컸다. 교육 서비스업은 -24.9%였고 숙박·음식업(-14.6%)과

청년층 분기별 고용률과 실업률



도·소매업(-11.2%), 운수·창고업(-5.4%)에서도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운수·창고업에는 항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도 16.8% 줄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이용자가 급감한 노래방·PC방 같은 업종이 들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60대 이상 취업자는 7.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유일하게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1% 감소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자리가 (통계청 발표보다) 더 심각하게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층 취업난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세대와 같은 ‘코로나 세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도 6일 나왔다. 한요셉 연구위원이 펴낸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다. 그는 “같은 나이의 근로자에 비해 첫 직장 시점이 1년 늦어졌다면 이후 10년 동안 받은 임금이 연평균 4~8% 적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의 여파가 10년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의 씨앗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43.1%에서 하반기 44.0%로 올랐다. 늘어난 청년 일자리의 대부분은 예술·스포츠·여가·숙박·음식업 등이었다. 제조업보다 임금이 적고 고용 안정성도 낮은 직종이었다. 한 연구위원은 “일자리 질적인 측면에선 개선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서비스업 소비 수요가 급감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물려있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1월 7.7%에서 지난 2

월 9%, 지난 3월 9.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그냥 쉬었다’ 인구까지 합치면 실제 청년층 실업난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아마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는 KDI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에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중순 이후 상황은 아직 (실업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하면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도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5만 개 공공·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는 개한체다. 한 연구위원은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무슨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경력을 쌓아나가는 디딤돌이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lsa@joangang.co.kr

### 실업급여설명회장



지난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말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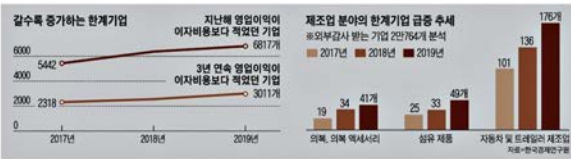
# 2019년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 21.6%, 일본(33.3%)에 이어 2위

주요해석

2020년 5월 25일 일요일 003면 경제종합

## 기업 3곳 중 1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 한계기업 3년새 30% 급증

(서울권)



### 본지-한경련, 2만여 기업 분석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 매출 3.2% 감소, 영업이익은 반토막 한계기업, 증권·중소기업서 급증 자동차·의류 제조업체가 많아

“한국GM, 삼성중공업, HMM(옛 현대상선), 쌍용차, 현대로템, 이마트 24’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한계기업’이란 점이다. 이들은 경영력 약화로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건실한 흑자를 내더라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던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단계의 기반 붕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현상은 대기업보다 증권·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 소크까지 겹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한계기업이 더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외부 감사사를 받는 2만76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

하는 해가 3년 이상 계속된 한계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0개를 돌파했다. 2017년 2318개에서 2018년 2556개, 2019년 3011개로 3년간 30% 급증한 것이다. 특히 작년 한 해만으로도 조사 분야를 좁혀면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업들의 비중도 26.2%(2017년)→30.7%(2018년)→32.8%(2019년)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 매출은 1190조3000억원에서 1151조8000억원으로 3.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1조3000억원에서 55조5000억원으로 50%로 줄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18년 9.4%에서 지난해 4.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한계기업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다는 것이다. 이원배 대기업담당에서는 한계기업의 수가 매년 100%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동안 증권·중소기업은 26.7%, 중소기업은 31%씩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특히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때 제조업에서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 못 내는 기업 개수는 2017년 815개에서 지난해 1248개로 급증했다. 의복과 섬유 제조기업이 2017년 각각 19

개, 25개에서 지난해 41개, 40개로 내 이상이 됐다. 자동차·트럭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2017년 101개, 40개에서 지난해엔 176개, 65개로 급증했다. 한계기업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가가치 3365억 중 94%는 신용도가 투기등급(BB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건설·조선·해운 등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착수했다. 그해 1월 산업은행 등 재건당사를 통해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위원을 평가해 부실 기업을 퇴출시켰다고도 공언했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정부는 2015년에도 해운·조선·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개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에는 파산 등 후폭풍을 맞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김윤경 한경연 박사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의 파장을 받은 이후 정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 좀비 기업의 수명을 연장했다”며 “최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거저질환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취약 기업까지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업 생태계가 비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진 기자

### 한국, 부실기업 코로나 이전부터 급증

한경연, 2만여 기업 재무현황 분석 부실기업 증가율 20개 국 중 2위 중·보로나 사태 발생 전까지 고사 위기 주요 대기업 신용등급 중추에 갈등 “실적만 구조조정-기회별 개선”

연도	한계기업 수
2017년	2,218
2018년	3,011
2019년	5,442

기업	신용등급	신용등급	비고
삼성중공업	CCC	부적격(위약조정)	
대우건설	CCC	부적격(위약조정)	
현대건설	CCC	부적격(위약조정)	
현대중공업	CCC	부적격(위약조정)	
현대건설	CCC	부적격(위약조정)	
현대건설	CCC	부적격(위약조정)	

### 급증하는 한계기업... 증가율 21% ‘세계 2위’

한경연 기업현황 보고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지 못해 지난해 3011개 - 17% 늘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증가세 코로나 타격 본격화될 ‘위험’

신문진 기자

19) 이원배 부사(기업) 박재길 대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계기업 증가율이 세계

### 급증하는 한계기업... 증가율 21% ‘세계 2위’

한경연 기업현황 보고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지 못해 지난해 3011개 - 17% 늘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증가세 코로나 타격 본격화될 ‘위험’

신문진 기자

19) 이원배 부사(기업) 박재길 대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계기업 증가율이 세계



# 65세 정년연장 시 한 해 약 15.9조원 추가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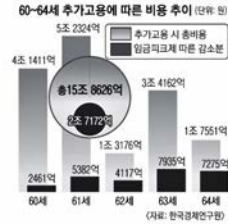
서울신문

2020년 6월 2일 화요일 021면 경제

## “정년 65세 연장 시 매년 16조 추가 부담”... 정년 연장 논란 재점화

### 한경면 “정년 연장 비용 추정” 보고서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 1.5조 추가 발생 임피제로 직결 비용 청년 8만명 고용 가능 청년 일자리 감소·기업비용 부담 등 고려 65세 의무화보다 노사 자율결정 바람직” 기업선 코로나 상황 비용 추가 부담 우려



율을 2.5%로 가정할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2조 7173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피크제로 직결된 직접비용 2조 4645억원은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눈 경우 약 8만 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계산이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정년 고용 감소’ 우려와 늘 연동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민간기업에서 청년 취업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2013~2019년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수 10~999명 규모의 민간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1명 늘어난다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4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자 1명당 고령층 고용은 1명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1명 줄었다. 이에 따라 KDI는 “정년 연장을 크게 줄여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직이나 권고사직을 확대 시행할 수 있고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런 까닭에 청년 일자리 축소,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근로 연명,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면 기업의 추가 인력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와 같은 호봉제 아닌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거나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청년층과 노년층,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도입된 지 4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 이 다시 이뤄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감소, 사업장 근로자 고령화, 추가 비용 부담 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면서 “임금피크제 확대가 보완책이 된다”고 하지만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률적 제한도 있어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세민기자 rmi@seoul.co.kr

에럴드 객원 2020년 6월 1일 월요일 002면 총면

##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한 해 약 16조 추가비용”

### 한경면 “비용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15조9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고용 비용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아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해 추가 고용 비용을 추정했다.

한경면에 따르면, 60세~64세 연명 집단이 정년연장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경면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총 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염영식 기자

문화일보

2020년 6월 1일 월요일 022면 경제

## 정년 65세로 연장됐, 매년 16조 규모 추가비용 발생

### 한국경제리 보고서

사업주 간접비 1조5000억 “기업특성 맞게 자율 추진을”



한해 60세인 정년퇴직 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할 경우 매년 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을 덜게 될 경우 청년층 추가 고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토대로,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하

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산정했다. 이 결과, 60~64세 연령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5억 원으로 파악됐다. 4대 보험료와 같이 사업주 추가 부담하는 간접비용 역시 1조47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60~64세 연명당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 한 것이다.   
임태환 기자

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 원(직접 비용 2조4645억 원+간접비용 2527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 근로연명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해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 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東日日報

2020년 6월 2일 화요일 002면 경제 금면

## 한경면 “정년 65세 연장됐 年16조 추가비용”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15조9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 임금은 한 해 14조3875억 원으로 추산됐다.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은 1조 4751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60~64세 연명당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할 것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가 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 대비 2조7173억 원 줄어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면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비용을 25~29세 청년 1인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 6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현성 기자 hsd@donga.com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 일자리부터 타격

중앙일보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B04면 경제

##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 더 많이 잃어

한경연, 임금 인상과 고용률 분석  
“고임금 집단보다 취업률 감소 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6%포인트나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또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체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003면 종합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상자 일자리 없애

2018년 16.4% 인상 영향에  
120~150% 차상위그룹보다  
취업률 4%포인트 떨어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비교집단별 취업률 감소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던 2018년 기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가량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6470원 대비 16.4% 올랐다. 이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최근에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해 2017년에는 당시 기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 그룹을 추려냈다. 이후 같은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 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 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20%를 더 받는 차상위 120% 집단을 비교했을 때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포인트 감소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률 감소율이 높고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이 4.1%포인트에서 크게는 4.6%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노동密集型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체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유연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 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기자 goldfish@

문화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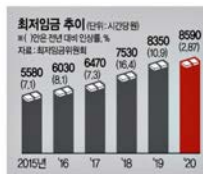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021면 경제

## “2018년 최저임금 급등 탓에 일자리 30% 줄었다”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영향’

7530원으로 전년비 16.4% ↑

“급격히 올라 일자리 빼앗은 셈”



■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 급격히 인상했던 최저임금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30%가량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영세 사업체들이 급격히 붙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한다는 우려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배대로 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

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2017년 당시에는 최저임금(6470원)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

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효과를 측정했다.

비교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30% 더 받는 집단보다 취업률이 4.6%포인트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취업률 감소율이 4.5%포인트 높았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은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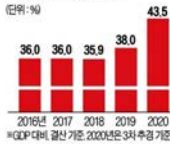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A08면 경제

## 예결특위 “정부 부채비율 9.8%P 상승 … OECD 평균보다 높다”

(2010년~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경고**  
 개별국가 재정 운용 상태  
 단순평균 적용 땐 채무관리 필요  
 대의의존도 높은 한국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수준 확장재정책도 반대

### 급증하는 국가채무비율



### OECD 대비 한국 정부부채 비율 (단위: %P)

연도	한국	OECD 단순평균	OECD 가중평균
2010년	33.5	72.2	97.1
2018년	43.3	81.1	109.4
증감	9.8	8.9	12.3

※ OECD 재정장부의 비정리공공기관 포함 기준  
 증감은 2018년-2010년 수치 자료: OECD, 국회예결특위

“20%대 후반~30%대 초반~40%대 초반~40%대 중반”  
 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내놓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예외 없이’ 후퇴시켜왔다”며 제시한 수치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는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대 후반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완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40%대 중반까지 높였다. 예결특위가 “구속력 있는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한 이유다.

◆정부 부채 증가속도, OECD보다 빨라  
 예결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 여력에 대한 기대재정의 기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기대재부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지방정부와 비정리공공기관 포함 기준)이 2018년 43.3%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평균(109.4%)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기재부는 가중평균치를 쓰지 않고 일본 미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수치가 많이 반영된다”며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2018년 OECD 평균은 81.1%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개별국가의 재정 운용 상태를 한국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선 단순평균이 비교 잦대로 더 적절하다는 게 예결특위의 판단이다. 더욱이 선진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적용하면 한국은 40.7% OECD 평균은 67.7%로 더욱 차이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단순평균치나 IMF 통계를 인용하면 정부 부채 증가속도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가팔랐다.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8%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는 12.3%포인트로 증가폭이 더 컸

다. 반면 단순평균치로 OECD는 같은 기간 8.9%포인트로 한국보다 작았다. IMF 통계로는 한국은 9.9%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는 4.0%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선진국과 같은 확장재정도 무리  
 예결특위는 국가채무의 기마른 증가폭을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설정해야 할 적정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는 40%를 제시한 외부 기관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예결특위가 사례로 든 지난 날 한국경제연구원의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는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예결특위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확장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잘했지만 무작정 선진국의 부양대책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했다.

◆세수 부족 심화·지출 구조조정해야  
 예결특위는 “세수 부족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세수적체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예결특위는 “국제수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상황에서 총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역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기준 764조3000억원으로 2019년 말(699조) 대비 65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기본 지출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도환 기자** van79@hani.com

서울경제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A05면 증권

## “한국 국가채무비율 국제기준 적용 땐 106.5%”

### 한경연 보고서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0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위협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 수준’ 보고서에서 서울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D1)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1989~2018년 OECD 국가의 성장률과 채무비율의 관계를 분석하면 적정비율은 40%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인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수준은 37.9~38.7%에 그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국경

방경제 14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4~45%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비기축통화국이 만성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져 자국 화폐와 국제기 외국부자가들에게는 기피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국가채무 산정에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한경연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B02면 경제총연

## 올해 국가채무비율 45.4%에 달하는데… 한경연 “40%가 적정”

올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적정 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1989~2018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다.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비)기축통화국은 37.9~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경방경제 14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입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기축통화국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신은진 기자**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이슈

2020년 8월 6일 목요일 014면 산업

## 해외서 세금냈는데 지방세 또 걷어...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눈감은 정부

### 대법 판결에도 2년 넘게 제도 안고쳐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2년이 넘도록 제도 손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내고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익

에 산입하지 않거나 이익에 산입 후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한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임동원 환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이중과세를 만들었다"며 "지방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지방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지자체)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됐다. km@frnews.com 김경민 기자

이슈

2020년 8월 5일 수요일 013면 산업

## 환경연 "해외진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 법 개정 안돼 기업부담 가중

해외에 현지법인 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낼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해 이중과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환경연)은 5일 '해외진출 기업들이 2018년부터 지자체를 상대로 이중과세 문제를 둘러싼다'는 경정청구를 해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외진출 기업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정부에 내는 법인세(국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14년부터 새로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할당돼 법인세의 공제가 지방세에도 적용됐지만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중으로 낸 법인지방소득세(2018년도 분)는 약 2900억원에 이르고, 관련 소송 건수도 2012년 16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이 300억원의 소득 중 세금으로 45억원(법인세

율 15%)를 현지에 납부하고 국내 모기업에 255억원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법 개정 전 1억 68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 6억18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관련 제도 개선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동원 환경연 부연구위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현일 기자

문화일보

2020년 8월 5일 수요일 021면 경제

## "해외 현지법인 둔 기업들, 지방소득세 공제규정 없어 이중과세"

### 환경연, 보고서 통해 주장 "해외에 소득 유보시킬수도"

|| 해외에 현지법인 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지자체에 내

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기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10%가 법인 지방소득세로 할당돼 법인세의 공제가 지방세에도 적용됐지만, 2014년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환경연은 설명했다. 임동원 환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말했다.

환경연은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외국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만큼을 총수익에 포함하지 않거나,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면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만큼 모회사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환경연은 또 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달라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워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지난 4월에야 법인 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법률적 미비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을 현지에 과도하게 유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 일시휴직자 1명 늘면 한 달 후 취업자 0.35명 감소

중앙일보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015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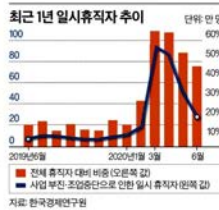
## 코로나로 휴직 484만명 중 134만명 일자리 복귀 못할 가능성

(3~6월 일시휴직자)

절반 이상이 사업진척 탓 쉬어 35%는 비취업자가 될 확률 높아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이 어려워져 휴직할 경우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산업 전



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올해 3~6월 일시휴직자는 총 48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일시휴직자'는 직장을 잃은 게 아니라서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같다. 일시휴직자의 절반이 휴직 넘는 58.2%는 사업 부진과 조업중단으로 일을 잠시 쉬게 됐다 고 답했다.

문제는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나 구직 단념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경

연이 분석한 결과 일시휴직자가 1명 늘어나면 그다음 달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는 0.33명 증가했다. 즉 코로나 위기 속에 일감이 줄어들수록 다음 달에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약 35%이며, 이렇게 비취업자가 된 대부분은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으로 대표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업 3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19.3%)'하거나 '채용일정을 미뤘다(31.2%)'고 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이 갑자기 파산해 휴직자보다 실업자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코로나19 위기는 점진적으로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아 기자 isa@joongang.co.kr

면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경

매일경제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A14면 경제

## 휴직자 대부분 실직자 전락 33%는 아예 재취업도 포기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경제활동 중단해 실업률에 누락 휴직 1명 늘면 취업자 0.35명 ↓

일시휴직자가 증가하면 다음달 바로 취업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일시휴직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또 이들은 경제활동 자체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 실업률로 파악되지 않는 실직자가 많다는 경고도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일시휴직자 1명 증가하면 다음달 취업자 수가 0.35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이 본격화한 3월 일시휴직자는 161만명으로 월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149만명, 102만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 이후 중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였다. 3~5월 일시휴직자 가운데 58.2%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부진

과 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했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다음 기간에는 취업자가 0.35명 줄었다고 밝혔다. 일시휴직 후 취업자가 0.35명 감소하면 이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사람은 0.33명이다. 조경연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일시휴직한 지 두 달 뒤에는 일시휴직자 1명당 취업자 감소 폭이 0.58명까지 커졌다"며 "취업자 감소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업률 통계는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비율이다. 코로나19로 일시휴직된 뒤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실업률 상승으로 파악되지 않는 실직자가 늘어난다. 실업률 악화보다 더 큰 일자리 위기가 벌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송민근 기자

세계일보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027면 오버나인

## 환란 때보다 심한 휴직사태 막는 길은 고용 유연화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4, 5월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만명, 148만명, 102만명을 기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폭증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일시휴직자 3명 중 1명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내상이 갈수록 깊어간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다. 실업급여는 6월에만 71만명에 1조 1103억원이 지급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하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5791곳에 이른다. 작년 1년간의 1514곳보다 50배나 많다. 정부 지원으로 근로자 배다는 고용관계가 많이 느슨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0곳 중 4곳이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미룬 기업은 절반이 넘었다.

이런 고용 난국을 극복하려면 고용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경제위기에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여주행만 거듭한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를 발제하라고 소리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경직성을 되레 높이고 있다.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조 편향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금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때보다 질박한 시정이다. 자국의 고용 위기는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경쟁을 죽이는 반(反)기업 정책을 그대로 둔 채 고용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 하반기 주택가격, 수도권 2.5%, 강남 4구 등 7% 이상 상승 전망

한국경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A05면 종합

## “패닉 바잉 지속… 하반기도 집값 크게 오른다”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수도권 2.5%·강남4구 7% 이상↑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극단적 규제가 주택 소비 심리를 자극하면서 나타난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하반기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도권은 2.5% 이상, 강남4구

는 7%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주택 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심해지면서 지금 집을 못 사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물량 부족, 3000만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뿌려진 대규모 보살금 등도 패닉 바잉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출금지 등 극단적 규제는 철회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경연의 동태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델 분석에 따르면 정부 대책이 나오면 두 분기에 걸쳐 집값이 4%가량 하락하지만 신속히 회복해 이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 위축은 15분기 이상 이어졌다. 송홍석 기자 [click@hankyung.com](mailto:click@hankyung.com)

매일경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A17면 경제

## 韓銀의 경고…“2100조 부동산에 쏠려 위험”

저금리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금융에 쏠린 돈만 2000조원을 넘어 서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기로 향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잔액은 2105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나 기업에 제공된 부동산 관련 대출·어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의미한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2010년 880조원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206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 벽을 돌파했다. 이후 올해 1분기 집값 급등이 계속됨에 따라 3개월 만에 43조원 증가해 2105조원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부동산 관련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면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연쇄 위기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 관련 자금이 큰 폭의 상승세

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올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7%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85년부터 정부 정책과 집값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는 강남 4구 집값이 전기 대비 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서울이나 강남 4구 등 인기 지역은 임시 선호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真日日報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B05면 경제 금리

## 한경연 “하반기 강남4구 집값 7% 넘게 오를 것”

### “수요억제 정책, 양극화 우려”

올해 하반기(7~12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가격이 7%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2020년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비교적 전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다주택자들이 세

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 주택부터 매도하면서 0.1%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연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이 부족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보살금까지 풀린다는 점, 다주택자가 중여 등을 통해 우회거래를 늘릴 가능성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윤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주택가격 폭등, 계층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생 기자 [samsam@donga.com](mailto:samsam@donga.com)



# 국민생활필수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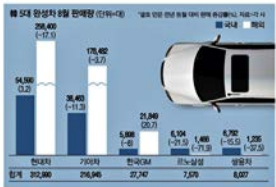
## 택시업계

### 후 내수마저 위축... 5개 완성차 실적 '뚝'

8월 자동차 판매 부진  
가이차 국내 판매 1년새 11%↓  
르노삼성 -21%·쌍용차 -15%  
수출도 회복 기미 없으며  
"개소세 폐지에 내수 늘려야"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하반기에도 고물나선 타격을 겪지 못하리라는 듯이 보이고 있다. 5대 완성차 브랜드(현대·기아·현대GM·르노삼성·쌍용차)의 8월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1만 9,000대 수준에 머물렀다.

1월 완성차 브랜드가 발표한 올해 8월 국내·외 판매 실적은 현대·기아·현대GM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만 9,400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31만 2,900대로 14.2% 올랐고 기아차는 21만 8,450대로 5.2%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17만 2,000대·쌍용차는 16,227대는 각각 -41.7%·-19.9% 감소폭이 더 컸다. 2017년 7월 판매량 한국GM만 13.2%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15만 4,400대를 판매했으며, 수출 실적도 내수 못지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내수도 판매량으로 추이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에서 15만 4,400대를 판매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3% 올랐다. 한국GM은 58,885대로 -8.0%, 르노삼성은



(8/04달)·쌍용차(8/02달)는 각각 21.5%, 15.5% 감소했다. 그나마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3.2% 높아진 5만 4,000대만 국내에서 팔아 내수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증가폭이 상반기 7월 대비 비교하면 그 절반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국내 판매량 7월(1만 7,381대)과 비교하면 20.5% 급증했다. 상반기 완성차 내수 시장은 개별소비세 70% 인하에 힘입어 5%~15%를 유지할 정도의 적극적인 소비부양정책에 힘입어 폭발적 증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르노삼성이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도 중요했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7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이

내수 하락으로 주춤하면서 수출 의존세도 아직 미약한 완성차 업계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특히 수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어 수출이 고인전 상태일 경우 약 70%, 해외에서 주춤 저조한 실정이다. 르노삼성은 하반기 30대 유럽 수출 물량을 예정했던 차 못하러 부산공장을 안전 공장인 상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10월 10대 수출 물량을 확정하고 11월 10대 수출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면 가이차 선진국을 겨냥 구공과 부자리는 개소세에 의해 폐지해달라 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유자한현대 고가·대형차에만 부자리를 인입해 소비세 세율을 저가차에 연다는 것이다. 개소세는 원래 사치품 소비세를 억제 하기 위해 적용 가격의 5%를 부과한 것이다. 물론 수입 차량은 부과하지 합적이라는 계산 단계가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안희산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 방향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월 내수 "자동차"는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5.2%가 부양될 정도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서 소비세 인하 효과를 상충시키는 한편 환경 문제 개도 문제 해결을 위해 10%에서 5%로 인하 개소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회복 기자

## 제조업

### 개소세 약탈 떨어지자... 지난달 자동차 내수 대폭 감소

가이·쌍용 10%, 르노삼성 20% 줄어  
현대는 신차 효과에 3.2% 증가  
"생산-소비 전차 세계화" 지적

국내 완성차 5개사가 8월 실적 발표를 내비치며 8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1만 9,000대 수준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31만 2,900대로 14.2% 올랐고 기아차는 21만 8,450대로 5.2%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17만 2,000대·쌍용차는 16,227대는 각각 -41.7%·-19.9% 감소폭이 더 컸다. 2017년 7월 판매량 한국GM만 13.2%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15만 4,400대를 판매했으며, 수출 실적도 내수 못지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내수도 판매량으로 추이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에서 15만 4,400대를 판매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3% 올랐다. 한국GM은 58,885대로 -8.0%, 르노삼성은

Table with 3 columns: Brand, Sales (8/04), Sales (7/04), Change (%)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7차차량에서 8월 실적은 7차차량과 같은 기준과 내수 판매가 10% 이상 줄고, 르노삼성은 20%대 판매 감소 폭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10%의 개별소비세만 자동차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소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안희산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는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5.2%가 부양될 정도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서 소비세 인하 효과를 상충시키는 한편 환경 문제 개도 문제 해결을 위해 10%에서 5%로 인하 개소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회복 기자

## 영수증

### 인하폭 줄이자 차 판매 뚝... "개소세 아예 없애자" 폐지론

차기 필수품 됐는데 사치품 취급  
특히한 인하여 기간·혜택 고문준  
외국엔 없는 제도, 일본 2배 세금  
환경엔 "또 내리겠지, 소비만 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월부터 줄어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소세 인하는 미래 소비를 앞당기는 것일 뿐, 소비를 늘리는 뜻만 있다. 이회복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정책 현황

- 30% (2008. 12. 19 ~ 2009. 6. 30)
- 19~30% (2012. 9. 11 ~ 2013. 12. 31)
- 30% (2015. 8. 27 ~ 2016. 6. 30)
- 30% (2018. 7. 19 ~ 2019. 12. 31)
- 70% (승용차) 30% (화물차) (2020. 3. 1 ~ 2021. 12. 31)

가이차는 지난달 국내 판매 3만 8,463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362대)보다 11.3% 감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완성차 5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를 합치면 11만 9,47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94만 4,50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8만 6,172대)보다 판매 실적이 좋았다. 신동호 르노삼성차 영업지원팀장은 "199에 대해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하던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 한풀 쉰 것 같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내진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월부터 70%에서 30%로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평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다. 미래의 소비를 당겨오는 효과만 있어 결국 애들 때서 뒷걸음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엔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주요 국가에선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 데다 인하여 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 때문이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코르코나 사태가 터진 올해까지 총 5차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모두 경제 활성화라는 중용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인세 시적에 언제 끝날지, 얼마나 줄여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일제로 정부는 글로벌경기 침체 심화가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내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할인을 없앴다. 하지만 코르코나 사태 발발하면서 다시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깎아주었다. 결국 올해 1~2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과 한두 달 차이로 46.2%의 차이를 겪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여 끝-더러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외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책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 개소세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세금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차를 살 때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세와 등록세를 내게 된다. 일본은 아예 지난해 10월부터 취득세 대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로 차등화한 환경성별 비례세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차 한 대를 사려면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된다. 연비 15km/l의 경차가 아닌 2000만엔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일본엔 26만엔을 내면 되지만, 한국에선 2배에 가까운 507만1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원래 개별소비세의 전신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였다. 2020년 5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392만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인구 약 5178만명 중 절반이 가까운 46.2%가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소비가 '특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환경연을 세는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치품 줄종언자,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되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회복 기자







# 월세 살면 자가 대비 결혼(65.1%)·출산(55.7%) 가능성 절반 이상 감소

이해럴드뱅크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002면 종합

## 한경연 “전세난 가중, 결혼 65%·출산 55% 감소 가능성”

최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된 가운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많은 자가 거주자보다 결혼 가능성이 65% 감소하고, 출산 가능성도 55% 넘게 떨어진다.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노동개발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향후 주거요인의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려 심각한 인구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를 남기고 있다.

조사 결과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

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1% 줄어든다. 전세로 사는 사람은 23.4% 감소해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거주유형이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으며 월세 거주는 55.7% 줄었다. 김현일 기자

문화일보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020면 경제

## “월세 살면 결혼 65% ↓ 출산 55% ↓ … 집값이 인구절벽 초래”

〈자기거주자 대비〉

### 한경연 상관관계 분석

전세 거주 결혼가능성 23% ↓  
첫번째 자녀 출산은 28% 감소  
“월세 늘면 생산인구에 악영향  
부동산, 인구정책 차원 고민을”

### 분석한 기초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로 거주하는 이들과 견줘 결혼 가능성이 약 65.1% 줄어든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도 약 55.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1744억의 가계(家庭)가 강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 영향으로 전세 붐이 형성되면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불안정이 “인구절벽”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를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노동개발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보다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월세 거주는 전세에 비해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수행했다.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다만 거주유형이 첫째 자녀 출산에는 영

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날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 붐이 전세의 월세화로 가속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8주째 상승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를 기록하면서 연 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에 머물렀다.

매일경제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A14면 경제

## 월세 살면 결혼 확률 65% ‘뚝’

### 한경연, 주거유형별 분석 첫아이 출산율도 떨어져

경기도 안양에 사는 직장인 이윤민 씨(38·가명)는 최근 친구들에게 비혼(非婚) 선언을 했다. 30대 중반 늦깎이로 입사해 회사 근처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이씨는 “모아 놓은 돈이 없어 집 사기는 불가능한데 전세로 나가도 집값이 오르고 하면 퇴짜 맞기 일쑤”라며 “공공 임대도 살 바에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혼자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같은 월세 거주자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65% 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세 거주자는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 첫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 역시 약 56%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거유형과 결혼·출산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자가 거주자는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결혼 가능성이 18.9%, 월세 거주자는 6.6%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조사기간 자가 거주자 10명 가운데 19명이 결혼할 때 월세 사는 사람은 7명 정도만 결혼했다는 예기다. 전세 거주자는 결혼 가능성이 14.5%였다. 한경연은 거주 형태에 따라 자녀가 없는 가구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고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김현일 기자

한국경제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A05면 종합

## 월세 살면 결혼·출산 힘들어진다

### 한경연 주거유형 영향 보고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의 결혼 가능성이 자가 거주자 대비 65.1%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거 형태는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거주 무자녀 가구 첫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내놓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개발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자의 결혼 확률은 65.1% 줄었다.

거주 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 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자가에 비해 약 55.7% 적었다. 다만 전세나 월세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거주유형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주거 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줄이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민 기자 hb@hankyung.com



# 기업승계 시 적용되는 징벌적 상속세율(60%) 인하해야

## “OECD 최고의 상속세율… 이견희 11조, 호주·스웨덴은 0원”

### 한경연 보고서

#### “징벌적 상속세 부작용 많아 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 도입”

이견희 삼성 회장 별세로 11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까지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아

니 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를 인화 및 자본이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며,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정장벽을 발

생시킨다”며 “상속재산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이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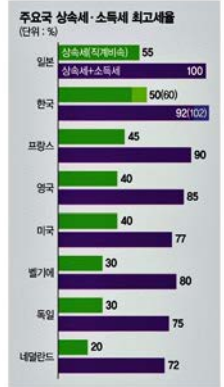
실제로 손톱깎이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자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이 됐고, 콘돌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밀폐용기 제조 세계 1위였던 락엔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자분을 매각하는 등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OECD 국가 간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어 2위(92%)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이견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까지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의 상속주식을 직계비속에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보다 46~253% 높다”며 “미국보다 46%, 독일보다 94%, 영국보다 191%, 캐나다보다 253% 각각 더 높아 현재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 등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008면 종합



※ ( ) 안은 해외주주할증평가20% 할증 적용 시 최고세율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종합보도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809면 경제종합

## 한경연 “기업 상속세 징벌적”… 11조 이견희 상속세, 미국선 7조·영국 3조·호주는 0

지난달 별세한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약 18조2261억원. 이례적 상속재산 부회장과 총리직 전 리미트인 관공 등이 이를 물려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10조56000억원에 달한다. 6년에 걸쳐 나눠내더라도 고(故) 이견희 회장 유족은 매년 1조 7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내고, “기업 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 재산의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경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인화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 기간의 자본이득을 모두 합산해서

세하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지만, 기업 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 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 이견희 회장처럼 18조 2261억원의 상속 주식을 직계비속에

상속한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0조56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가장 높았다. 일본 10조원(55%), 미국 7조2200억원(39.9%), 독일 5조4600억원(30%), 영국 3조5400억원(20%)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자본이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낮은 상속세는 0원이다.

보고서는 상속세의 이중 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소득세 과세된 채로 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상속세가 낮든지 또는 그 반대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29%)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14%)은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진 기자

### 매일경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A14면 종합

## “韓상속세, 기업엔 사망선고”

### 한경연, 기업승계 포기 우려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해야”

기업승계에 대한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과 국가경제 지속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정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장애물”이라며 “이는 상속재산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진단했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자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세계 1위 콘돌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는 2017년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또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엔락은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도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한경연 분석이다. 임 위원은 “현재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에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며 “기업승계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만 과세로 변경함으로써 유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재 기자



# 한국판 뉴딜 성공,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에 달려

**문과영보** 2020년 11월 12일 13:05 801면 3페이지

## “文혁신성장 불신… 설비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한경연, 산업정책 보고서**  
컴퓨터·전기장비 큰폭 감소  
소수성·기공3명 등 기업별  
“향후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경제성 확인된 곳에 재정 투입  
민간 투자 활력 더욱 높여야”

**분석한 가치**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특히 소수성  
도성장(회계이익 인상)과 경제력의 반  
영을 사고 있는 기업규제완화 정책을 등  
시에 추진하면서 오해의 혁신성장용 지  
인 산업정책 혁신성장용 부진 및 신  
기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고  
과다한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해  
 2018~2019년 경제성장률과 투자자  
 모두 부진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실질 가  
 률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8%  
 2019년 -7.5%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자가 많이 투자할수록 큰 부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을 이어왔던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 “혁신성  
 장용 부진 및 신기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고 과다한 민간 투자의 활  
 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용과 관련된 산업  
 정책, 투자 및 관여가(2018년 10.2%  
 2019년 20.0%), 전기장비(+4.7%  
 -10.9%)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체  
 산업 성장률에 비해 낮은 편으로  
 강조하며 “혁신성장은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  
 했다. “향후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  
 한 정부는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와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일산문** 2020년 11월 12일 13:05 801면 3페이지

## 설비투자 증가율 2년 감소, 혁신성장 뒷걸음

### OECD 37개국 중 세 나라뿐…“재정투자 경제성 확보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  
 투자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 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정부 혁신성장  
 추진에도 시장의 투자자 불신을 심화  
 했다고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성장 없  
 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  
 서를 통해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  
 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정부와 대표 기업정책인 ‘혁신성장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비투자 증가율(실질 기준)은 2018년  
 -2.8%, 2019년 -7.5%였다. 투자자  
 가 많이 투자할수록 큰 부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을 이어왔던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 “혁신성  
 장용 부진 및 신기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고 과다한 민간 투자의 활  
 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용과 관련된 산업  
 정책, 투자 및 관여가(2018년 10.2%  
 2019년 20.0%), 전기장비(+4.7%  
 -10.9%)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체  
 산업 성장률에 비해 낮은 편으로  
 강조하며 “혁신성장은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  
 했다. “향후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  
 한 정부는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와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일산문** 2020년 11월 13일 13:05 801면 3페이지

## 설비 투자 증가율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2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한 국가  
140여국 중 한국 포함 10국만  
제조업 투자 증가가 강한 편  
“규제정책이 기업 투자 가로막아”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  
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대  
표적인 산업정책인 ‘혁신성장’ 성과가 부  
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내와  
경제 시스템 현황을 위한 국가 전반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 투자  
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  
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발표한 ‘성  
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  
서에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간  
경제성장률과 투자자 모두 부진했다. 설  
비투자 증가율(실질 기준)은 2018년 -  
2.8%, 2019년 -7.5%로 마이너스 성장  
을 했다. 투자 증가율은 투자자가 큰  
부수입을 가져올 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실제로 1960년 이후 2017년까지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  
우는 IMF 외환 위기(1997~1998년) 때 두  
차례뿐이었다고 경제 위기 없이 2년 연속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는 최  
근 2년이라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세계  
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연속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세계 140여 국가 중 10개국 불과하며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을 포  
함해 아이슬란드·타이 3국뿐이다.  
 보고서는 “혁신 성장과 관련한 산업  
정책, 투자 및 관여가(2018년 10.2%  
2019년 20.0%), 전기장비(+4.7%  
-10.9%)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체  
산업 성장률에 비해 낮은 편으로  
강조하며 “혁신성장은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  
했다. “향후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  
한 정부는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와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 연구원은 “최근 2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  
경제의 투자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혁신성장을 주도할 산업에서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는 것  
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 확보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딜의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유  
도하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  
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평가되는 ‘경제성’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성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기자 hjeon@keri.com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판매장과세’로 전환해야

**한국경제**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A13면 경제

## 개소세 역차별 ... 렉서스보다 세금 더 내는 그랜저

그랜저보다 2000만원 비싼 렉서스ES가 세금을 덜 내

국산은 영업마진 붙은 출고가에 외계차는 수입신고가 부과

그랜저	렉서스 ES300	최종 소비자	BMW 530i	벤츠 E300	렉서스 ES300h
4869	5929	7560	7560	7700	6710
193	234	216	221	192	

※그랜저는 최상위 등급 옵션, 개별소비세 3.5% 기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ES300h 최종 소비자 가격은 67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최상위 등급(8899차량) 모델보다 1841만원 비싸다. 그러나 렉서스 ES300h 가격에 포함된 세금(연세 인허가 1529만원, 그랜저에 붙은 세금 1929만원)보다 1만 932원 적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BMW, 벤츠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BMW 530i 7560만원, 벤츠 E300 7700만원의 제네시스 G80이 9292만원보다 1631만~1711만원 비싸지만 세금은 각각 182만원, 132만원 덜 낸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하는 개소세 과세 시기가 다른 데 따른 역차별 현상이 일고 있다. 국산차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 책정하는 출고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가격에 개소세가 붙는다. 국산차 출고에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차 신고가격엔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마진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수입차의 과세표준이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세금이 덜 붙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자동차 개소세 과세 시기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6000만원(부가세 포함)에 같은 경우 국산차에 붙는 개소세와 교육세는 총 367만원으로, 수입차에 매겨진 세금은 629만원으로 102만원 많았다.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5% 많은 세금을 부담한 셈이다. 이는 수입차의 국내 판매비와 마진을 수입 신고 가격

30%로 가정했을 때다. 한편연은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최종 판매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같은 기준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임동원 환경연 부연구원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이 더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종단계 과세'라는 국제 과세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통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환경연의 분석이다. 수입차업체는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국산차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소세의 원래 세율 같은 차장 가격의 5%,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다. 정부는 소액 소비 진척을 위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광규 기자 [sky0419@hankyung.com](mailto:sky0419@hankyung.com)

**문확일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023면 경제

## “車 개소세, 국산차 살 때 수입차보다 38% 더 내”

환경연 보고서 지적  
공장 반출-수입신고 때 과세  
“세금 부과시기 똑같이 조정될”

국산 차를 산 사람은 수입차를 산 사람보다 38%나 많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시기를 최종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연형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 아닌 유통 중간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 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안팎으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 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다고 분석했다. 판매가격이 6000만원 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 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 덜 낸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 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환경연 부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 국제적 통상 규범(GATT·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매일경제**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A16면 경제

## 국산차 개소세, 수입차보다 38% 많다

환경연, 역차별 구조 지적

국산차를 구입하면 수입차에 비해 개별소비세를 38%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과세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형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 아닌 유통 중간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산차는 판매 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서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 관리비, 영업 마진 등이 제외된다.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액 비교한 결과 국산차를 사면 수입차보다 세액을 38%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가격의 승용차를 사는 상황을 전제로 한 비교 결과다. 판매 가격이 6000만원 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셈이다.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김희재 기자

**��解日報**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B03면 경제종합

## 환경연 “수입차가 국산보다 개소세 혜택 더 받는다”

사치품이라며 부과해온 개소세 이침에 폐지하자는 목소리 높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수입차와 고급차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과거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부과해온 개소세 자체를 이침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경제연구원(환경연)은 20일 보고서 “수입차와 국산차에 자동차 개소세가 부과되는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개소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개소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 관리비·영업마진을 포함한 출고 가격이 개소세의 기준이 되지만, 수입차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업 마진 등을 제외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수입차에는 개소세와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까지 총 265만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같은 6000만원인 국산차에는 102만원(38%) 더 많은 개소세·교육세 367만원이 반영돼 있다. 휘트니스 구입 가격과 연동돼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 차 가격에 비해 개소세·교육세를 수입차보다 더 많이 낸 국산차가 휘트니스까지 더 내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3~6월 원래 개소세를 1.5%로 인하했다가 하반기엔 3.5%로 인

하 폭을 줄였다. 그런데 인하 한도액(100만원, 교육세까지 143만원)까지 없애버림으로써 6700만원 미만의 인차 세 혜택이 줄고, 6700만원 이상인 차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개소세는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 물품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됐고, 1978년 특별소비세, 2008년 개별소비세로 바뀌었다.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등 개소세는 없어졌지만 자동차만 남아 있다. 성명재 총연대 교수는 “전 세계 5~6대 자동차 생산국 중 자동차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개소세를 부과할 명분이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류정기 기자





# 경제정책 불확실성 높을수록 기업투자 감소해

헤럴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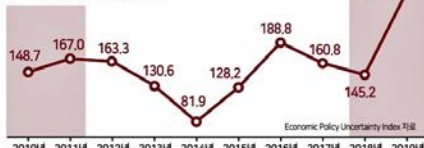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002면 중앙

## “韓 EPUI 10년來 최고... 투자위축 우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한경연 '정부 경제정책' 보고서  
美 연구팀 주요 21개국 조사  
한국가율 전년비 77%↑ '최고'  
불확실성 증가면 설비투자 감소  
"정책 안정성-예측가능성 높아야"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추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오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총 설비투자액은 170조2755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66조2893억원, 2019년 153조8547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업투자는 회사 내부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급격한 확대도 당장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스톱 베이커 교수와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기초로 주요 21개국의 불확실성 지수 추이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국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가지 단어가 출현한 기사의 빈도를 집계해 불확실성 지수를 측정한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8년 대비 77.2%

증가에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한경연은 2001~2019년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업 투자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기업의 투자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로 나뉘었을 때 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 성격이

문하일보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022면 경제

## 한경연 “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율, 21개국 중 최고”

“불확실성 커질때마다 기업투자는 줄어들어”

Ⅵ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주요 21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가 겹쳤고, 대내적으로는 환경·노동규제가 급격히 강화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투자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줄어들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책의 예측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257.4로 전년 대비 77.2%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수는 세계적 석학인 스톱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연구팀이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

련된 용어가 쓰인 신문기사 수를 기반으로 측정한다.

한국은 조사대상 2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칠레(60.4%), 호주(59.2%), 중국(52.3%), 싱가포르(41.5%)가 증가율 상위 5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특히 지난해 8월엔 538.2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한창이었던 2017년 1월(391.8)이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제적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도록 환경·노동법제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 수치를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저임금도 2년 연속 10%대 인상을 기록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

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논의도 이어졌다.

대외적 요인도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재언했다. 한경연이 2001~2019년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업 투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음의 관계가 더 뚜렷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승현 기자

아시아경제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003면 중앙

## 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율 1위 한경연 “기업투자 위축 우려 확대”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증가율이 주요 21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증가율이 77.2%(412.2)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21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에 이어 칠레(60.4%), 호주(59.2%), 중국(52.3%), 싱가포르(41.5%), 러시아(37.4%) 순이었다. 멕시코는 2018년 이후 자료가 누락돼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2014년)과 비교할 경우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과 북한의 발사체 문제 등이 불거진 시점"이라며 "대

내적으로는 정부의 부당산 정책,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경제정책 강화 등 정책기조 변동성이 뚜렷해지면서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수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

다

다

다

관계가 더 뚜렷하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투자는 내부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려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스톱 베이커,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사용했다. 이윤우 기자 dwlee@

02

경제전문가 제언을 통한  
방향성 제시





서울경제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A3면 오마이뉴스



김경연 논설위원의

清論直說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 “코로나發 경제충격 극복 위해 최소 2년 기업 핵심규제 유예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재계의 어려움을 대신 견뎌내는 경제정책의 역할은 이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권태신 전경계연연합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최소 2년 동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에 대한 핵심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결과를 받게 된다”며 “정부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까지 동반해 어려워지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각별히 주문했다. 권 부회장을 9일 만나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상황과 위기극대 방안을 들어봤다.

**올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회복 더딘 나이지형 전망  
대기업 한국 부도 날때 중소기업 수천개 무너져  
주52시간 완화·세계 지원 등 기업 부담 덜어주고  
한은법 손질해서라도 ‘최종 대부자’ 기능 다해야**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전망이 비관적이므로 바뀌는 것 같다. V자형 경제반등이나 U자형 회복은 힘들고 L자형으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나이지형 회복이나 L자형 회복이나 뉴 노멀에 관심이 많지만 장기 경기 침체 우려하는 의견이 될 것 같다. 나이지형은 L자형에 기업 경쟁력 면에서 회복 속도가 심각할 정도로 느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될 것 같다. (안정성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지금은 전 세계 경제체들도 어떻게 될지 재조리한다는 것이 맞다.

△유가가 안정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할 듯 중점주시하는 것 같다.  
△소액투자기 때는 위험이 부채비율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지금은 금융의 공과와 수요 모두가 문제다.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안 사니 발행한 대외채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공급업체가 무너진다. 금융회사 부실도 가변 금융위기로 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옛날처럼 국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대학을 개설하는데 현상급에서 어떤 대학이 우수하다고 보는가.  
△이런 위기는 실업률이 금융 시스템 한 부분이 아니라 범공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긴급도제자금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이 기업대출(CP)이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안이 있다. 미국이 22조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추가경정예산을 선거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SOC)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 들어 SOC 예산을 많이 썼었다. SOC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온 위기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현정권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우리는 내수와 외환이 견조하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최근 2~3년간 약화됐다. 한국 경제 자체에 7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체 경쟁력 신장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4위였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가량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려 해도 하루를 일하고 노조도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자네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밖으로 노코돈 돈은 618억달러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돈은 128억달러였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익이 적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상회할 것이다. 경쟁력 약화와 불리한 국제금융시장 동시에 마주한 셈이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불거지겠다(현정권은 연내부 담임 출생률 예상치를 2.3%로 낮췄다).

△기업이 갈수록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당장 소수자를 못하니 사회적 배후행위-국정 등이 문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호텔 객실이 7개 업체 평균으로 5.6%에 그쳤다. 도매수 거래량이 절반은 떨어졌는데 기업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1분기 회사채가 15.5조이고 4월 물량만 625,000억원인데 수요가 안 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오래갈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년 동안은 기업의 핵심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 is...** 1949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11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실장과 주영대사관 재경관, 원외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거쳐 재정부 차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국무총리실 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맡은 뒤 2017년부터는 전경계연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다.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데 그칠수록 회사채가 팔리지 않는다. 정부가 민간 돈을 끌어들이는 수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사람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소규모도로도 1.5m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수를 살릴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제는 계속 가면 디플레이션(저가부행)을 내는 기업들이 나온다.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할 수 있다. 기업이 어려워 안 된다. 특히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가변이 아닌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경제 성장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39위일 정도로 물가가 낮다. 현안이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현안업 1조를 고쳐서라도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 현안이 회사채와 CP를 직접 사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기업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유보금 등으로 우선 해를 끼치고 있다. 대기업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은 너무 소홀하다. 외환위기 때 30대 기업 중 16%가 문을 닫았는데 대우의 경우 협력사가 수천개였고 총 자산도 18조원이었다. 대기업 넘어가면 파급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대기업 하나가 부도면 중기 및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몇십만명의 실업자가 나온다. 계급투쟁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외환위기 때처럼 대기업들이 절대선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일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  
△현 정부 들어 소위 반값호신드롬(공무원 보신주의)이 더 심해진 것은 이런 정부를 부양하러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직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 공공직업이 중요 역할을 맡았다고 한 직종으로 보면 경쟁력이 높기 구조조정의 충

대를 따라 해왔는가. 감시없이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그로테스크로 일한 사람이든 처벌해줘야 한다. 대기업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책임지고 추진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애연고사생관을 확실하게 임용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촉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신속성 정책화-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금융위협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권한과 책임이 분방하지 않으면 적근보다 내부의 싸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전경련이 최근 위기극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예견에 전달했는지.  
△코로나19 전경련이 해경에도 경제는 경영 회복되지 않는다. 사람들이(대기업(공공기업) 자체가 무너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한꺼번에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2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만큼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장인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현시점 규제유예에 제도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주 52시간

제 예외 방안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대형 미드 유통업체의 경우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것을 예외로 하고 휴게 시간으로 바꿔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화물업(화물운송 및 화물 보관 관련 법률) 내의 화물운송 등 화물 운송 관련 분야도 예외로 해야 한다. 자금지원 어려움에 따른 규제 완화도 유예된 되겠다.

△규제 완화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텐데.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이 심해지면 대는 수출만으로 안 된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서비스 산업 비중이 70%가량 되는데 우리는 60%밖에 안 된다. 관광-물류-의료 등을 육성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이 시급한데 등에 다 다했다.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개방형 병원, 유명 외국학교 유치, 복합 레저시설 등이 모두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사적인 통화가 금융화-물류화인데 뒤에 계속 출현한 중국 회사, 싱가포르에 다 빼앗겼다. 드론-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원자력)-원격의료 등과 같은 4차 산업의 기회가 너무 많다. 내수업종에 제조업에 관해서는 혜택을 줘야 할 것만 같아 한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대외, 방이 나게 만든 요인들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파업과 불법행위 등을 하고 적대 상황에서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만 해결하면 안 된다. 기업들이 외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대학을 개설하는데 현상급에서 어떤 대학이 우수하다고 보는가.  
△이런 위기는 실업률이 금융 시스템 한 부분이 아니라 범공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긴급도제자금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이 기업대출(CP)이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안이 있다. 미국이 22조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추가경정예산을 선거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SOC)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 들어 SOC 예산을 많이 썼었다. SOC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온 위기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현정권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우리는 내수와 외환이 견조하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최근 2~3년간 약화됐다. 한국 경제 자체에 7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체 경쟁력 신장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4위였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가량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려 해도 하루를 일하고 노조도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자네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밖으로 노코돈 돈은 618억달러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돈은 128억달러였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익이 적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상회할 것이다. 경쟁력 약화와 불리한 국제금융시장 동시에 마주한 셈이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불거지겠다(현정권은 연내부 담임 출생률 예상치를 2.3%로 낮췄다).

△기업이 갈수록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당장 소수자를 못하니 사회적 배후행위-국정 등이 문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호텔 객실이 7개 업체 평균으로 5.6%에 그쳤다. 도매수 거래량이 절반은 떨어졌는데 기업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1분기 회사채가 15.5조이고 4월 물량만 625,000억원인데 수요가 안 된다.

다.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데 그칠수록 회사채가 팔리지 않는다. 정부가 민간 돈을 끌어들이는 수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사람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소규모도로도 1.5m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수를 살릴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제는 계속 가면 디플레이션(저가부행)을 내는 기업들이 나온다. 외환위기 때 보다 심각할 수 있다. 기업이 어려워 안 된다. 특히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가변이 아닌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경제 성장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39위일 정도로 물가가 낮다. 현안이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현안업 1조를 고쳐서라도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 현안이 회사채와 CP를 직접 사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기업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유보금 등으로 우선 해를 끼치고 있다. 대기업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은 너무 소홀하다. 외환위기 때 30대 기업 중 16%가 문을 닫았는데 대우의 경우 협력사가 수천개였고 총 자산도 18조원이었다. 대기업 넘어가면 파급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대기업 하나가 부도면 중기 및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몇십만명의 실업자가 나온다. 계급투쟁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외환위기 때처럼 대기업들이 절대선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일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  
△현 정부 들어 소위 반값호신드롬(공무원 보신주의)이 더 심해진 것은 이런 정부를 부양하러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직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 공공직업이 중요 역할을 맡았다고 한 직종으로 보면 경쟁력이 높기 구조조정의 충

대를 따라 해왔는가. 감시없이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그로테스크로 일한 사람이든 처벌해줘야 한다. 대기업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책임지고 추진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애연고사생관을 확실하게 임용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촉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신속성 정책화-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금융위협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권한과 책임이 분방하지 않으면 적근보다 내부의 싸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전경련이 최근 위기극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예견에 전달했는지.  
△코로나19 전경련이 해경에도 경제는 경영 회복되지 않는다. 사람들이(대기업(공공기업) 자체가 무너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한꺼번에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2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만큼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장인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현시점 규제유예에 제도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주 52시간

younp@sedaily.com



특가뉴스

### 3 미래 속도 가분해도 되나

아름답게 더 많은 기회와 부를 몰라주려는 것 한국 사회의 동력이라 예상된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다. 건전 재정은 역대 정부의 자랑이자 유산이었다. 국가재무비를 40%라는 압도적 비율로 늘린 것은 현 정부다. "우리만 40% 마지노선인 근거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반론이 있었다. 복지 확대는 균형과 속도 논쟁을 낳았다. 끊임없이 풀고 온 경제위기는 고배를 물었다. 사망에서 살아 돌아왔다. 분 당은 기계가 속출하고, 일처리가 사라지고, 안전자가 해질사로 나왔다. 재정이 타워는 신장 잘 것 없다는 이론까지 나왔다. 시기를 바꾸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빛으로 보지 말고, 부자로 여기는 얘기가. 재정 건전성은 "도끼"로 치부된다. 개인도 영달이 빛을 낸다. 부동산에 주머니 빛만 쫓아들었다. 빛이 놓여야 했다.

그런데 대체대표는 불완한다. 정형하지 못한 적자가 기록된다. 빛은 반드시 복속한다. 누군가 잃어 버린다. 거품이 터지면 국가도 파산할 수 있다. 나뭇잎이 세균이 빛을 앗아는 것도 세균이다. 결정은 형세대로 하고, 책임은 미래 세대가 안는다. 그래서 묻는다. 자기의 돈 옮기는 정당할까 불완가 후대까지 갈당할 만한가.

특별취재팀 = 곽정애 김경은 허현욱  
유지혜 권호 박수현 이소아 윤석만  
김기현 허삼현 기자  
©2020KOEI.com.kr

## “나랏빛 급증, 코로나세대 영원한 패배자 될 수도”

(한재 204)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능률적 조직  
을 골공리만 해 문제, 자라리 강세를  
규제개혁 돈 안들지만 성장률 높여



“코로나 세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없다. 그럴 때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래에 올 돈을 더 크게 쓰는 데 따른 희생자로 현재의 20대, 30대 세대를 꼽았다. 한경연의 대외정책 위임장인도 조사(4월)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의 55.5%는 취업을 할 기 힘들다. 권 위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민간이 성장 활력을 자극해 향후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수입도 늘고, 일자리도 생긴다. 그런데 지금은 돈 쓸 공리만 하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재정 확대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일갈한다. 지난 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권 위장을 만났다.

“초지극대 나랏빛을 내도 부당이 책다. ‘딴디는 오프라나리한다, 가렸었다’고 흥수 대미 안 할 수 없다. 경제정책은 흥수대 가름, 모두를 대비해야 한다. 돈 함부로 쓰면 결국 망한다.”

“1997년 국가재무비율은 11.4%였다. 그 때 20%는 됐다.”

“무책임 얘기가. 해외 지금의 10~20%만 빠져나가는 얘기가 온다. 영권위 기 때 재무비율이 높았다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다. 말하지 말지.”

“급할 때 뱉는다고 나리랑하나.”

“90년대 초반 외환위기 상황 비율이 일본 예산의 30~40%였다. 그때 등 경직성 지출을 빼고 나면, 미래



예산은 10~20%뿐이었다. 그래서 끌어내려 20년이 왔다. 부모에게 많은 빚을 물려받은 자녀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한라금 독채를 준다. 어떤 부담을 국가가 미래 세대에 주고 있다.”

“과거 도식 아니라 적자 국가처럼 알고 지출을 늘려라”는 한대회(제이콘AMI)이 주력했다.

“과거보다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 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반(反)기업법으로 만일을 대비해 기업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다. 그래서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를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은 위기다.”

“위기를수록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가면 따라가는 ‘물리 현상’은 반복된 실험인데 대만 일었다. 니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능률적인 조직이다. 민간이 잘 일할 정부가 하면 단반 들고 효율은 떨어진다. 자라리 강세한다.”

“정식 경제 지출 확대가 대세다.”

“재정 적자로 1984년 예산을 돌렸었다.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도 삭감했다. 육군 장성들이 권을 한 대로 경제 개혁이 들어갔다. 문화갑 당시 예산실장은 그래서 버렸다. 그렇게 지켜는 재정이야. 이런 격오가 없으면 ‘빚을 떠돌던 정부’라는 오명이 날 것이다.”

“재난지원금처럼 주머니에 돈 놓아는데

싫어할 사람이 많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는 돈이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2030세대는 그렇다. 분당이 부담될 돈이다. 노르베이는 미래를 위해 석유 팔아 만 돈을 국방비에 들어 놓는다. 스위스는 공짜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을 스스로 거부했다.”

“무책임 안 쓰는 게 능사나.”

“세대로 쓰자는 거다. 저출산 대응에 10년간 210조원을 쏟았다. 결과는 출산율(2019년 0.92명) 세계 꼴이다. 주머니를 자라교육 등 구조적 문제 같은 놔두고 출산장려금 같은 복지만 늘렸기 때문이다. 노조가 보수군 로직만 대변하는 노조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 폐해는 치열을 못 할 형편이다.”



### 서울 경제

#### 2020 싱크탱크 제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1989년 대학교 2학년 때 유망한 철학 교수인 고(故) 박종훈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박 교수는 미국 실리컨밸리에 갔더니 여러 근로자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한 후 2시간 일하고 퇴근하더라더라. 그런데 그들의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3~4배나 많았다. 그들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당시 한국은 8백 종사자를 들으며 출근하고 병을 보고 퇴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고 일하는 시간에도 돈을 받는 사회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정말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창의적 아이디어 대접하는 사회로

투입력이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보라. 우버-에어비엔에 같은 공유경제나 구글-유튜브 같은 플랫폼 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대규모 실물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기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가 변하면 생기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역행의 변화가 될 경우가 아니라 변화가 될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위한 다양한 양 공짜화가 일어난다. 상공한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기 때문에 바뀌어, 부자를 잘한 공무원에게도 노동이 너무 많은 돈을 받았던 때 같지 않은 사안을 보라. 사안이 많다. 돈을 번 사람이 부동산이 아니라 부가가치는 자만도 보인다. 그러다 국가가 그 이익을 왜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규제 개혁을 쏟아내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 아직도 선의의 판단을 받았는가. 이미 유체적으로 뭉쳐져있어도, 획기적인 기술 습득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는 시대다. 어떤 아이디어는 플랫폼 기업 하나와 가치가 상상한 것의 3배에 달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하나와 가치가 40% 넘는 것이 이미 현실이 아닌가. 성과를 바꾸어야 한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막대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후진에게 학습을 보내야 한다.”

경제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생존하려면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이 필수다. 결정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시장 변화에 맞춰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규제에 의해 사멸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을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 수 없다. 변화의 도전을 감을 외면하고 국가가 모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출구전략 구상에 빠진다면, 세계인들 선진국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감은 심해져 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흔히 한국이 선진국의 딱지를 뗀다고 한다. 하지만 유혹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이 되려면 남다른 다른 생각과 실험 역으로 승화하고 이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사회로 가야 한다. 2025년은 남은 시간과 힘을 모아야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민간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조건

# 재정만능주의 버려야 빚더미 피해 위기 탈출한다

조경업의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긴급지원 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고, 자동차·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이 줄줄이 비랑 끝으로 물러가고 있다. 산업 전후방요소가 매우 큰 산업들이다. 자동차만 해도 관련 부품업체가 8000여개에 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은 휴직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마지않아 줄도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나빠지면 언제나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는다. 지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실업은 현실화하고 있다.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26만 명 급증해 160만 7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이들이 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외환위기가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경제 위기에 재정 투입 불가피  
과거 미국·일본은 재정만 낭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고  
경제 체질 함께 개선해야 효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기존에 책정한 긴급 지원자금 150조원에 90조원을 추가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2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소요재원이 1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55만개 만들기 사업과 '한국판 뉴딜'까지 추진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지 가능하기 어렵다. 불의의 재난으로 세계가 위태로워진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방기업을 지원해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과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벌이고, 허드렛일을 만드는데 재정을 낭

###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과 성장률

※1980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 48.8%, 그리스 22.5%



비하면 위기의 끝은 깊어지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된다.

### 케인스 정책 효과 본 적 없어

경제위기 때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케인스 정책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을 늘려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케인스 이론은 역사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엄청난 공공사업을 벌였다.

### 케인스 정책 허점 찌른 '깨진 유리창의 우화'

프레데릭 바스티야(Frederic Bastiat, 1801~1850-사건)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고전학파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케인스보다 80년 전에 태어났지만, 눈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는 사ibi 학자들이 일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깨진 유리창'의 우화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화는 행질기들이 부주의한 돌팔매질로 아버지 가게의 유리창을 깨면서 시작된다.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주인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유리창이 깨진 게 우리 동네에 나쁜 일이 아니라며 위로를 한다. 행질기 주인이 유리창을 새로 사면 유리창 가게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번 돈으로 구

두를 사고 책도 사면 모두의 소득이 증가한다며 입을 모아 주인을 위로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으면 행질기 주인은 새 옷을 살 예정이었다. 새 옷을 샀으면 재봉사의 일거리가 늘어나고 유사한 파급경로를 거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새로운 부(富)가 창출된 게 아니라 재봉사에서 유리창수로 부의 이전만 일어난 것이다. 결국 새 옷을 장만하려고 모아둔 돈을 잃은 행질기 주인만 손해를 보고 말았다.

바스티야의 우화가 주는 교훈은 명쾌하다. 기회비용을 보지 못한 행질기 아들이 지출했는가에 상관없이

지출이라는 행위가 변명을 가져올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심지어 전쟁과 같은 파괴적 행위마저도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학자는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와 특징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경제

2020년 4월 8일 수요일 027면 오버시언

## 대공황을 걱정하는 이유

과거의 경제 위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과거의 위기 사이에는 비교해볼 만한 유사점이 매우 많다. 정부가 통화량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면서 생겨난 버블이 꺼지며 모든 위기가 시작된다. 스웨인 독감으로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은 1921년부터 막대한 돈을 풀었다. 통화량이 증가하자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했다. 시장이 과열된다 고 느낀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인위적 통화 정책을 전환하자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도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닷컴버블 붕괴와 9·11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모른다는 우려로 FRB는 유동성 확대 정책을 썼다. 넓어지는 유동성이 빌 리먼 미 행정부의 서민형 주택 보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버블이 형성됐다. 금리가 인상되자 채무 부채를 포기하는 대출자가 늘어났다. 이들에게 대출을 한 상업은행은 물론 모기지 담보로 각종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모

기지 전문 금융회사, 투자은행(IB), 기관투자자 등 금융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파산했다.

현재의 위기는 실물경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듯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

유하라는 위기 대책보다는 언제나 똑같다. 은행이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았다고 비판하던 정부는 위기가 닥치면 은행이 대출을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고 뒤달을 한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점에 비생산적인 공공 사업을 벌이고 유지를 줄는 공공일 자리를 늘린다. 국민에게 가진 것을 모

다 약하다.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값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니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범한 정책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노동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최대 노동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다.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생산성, 가동 시간, 생산량을 규제하면서 당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던 항공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했다. 더욱이 법안세, 소득세,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투자, 공공일자 리, 복지 확대 등 비생산적인 곳에 지출을 늘린 것도 공황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됐다.

불황에 맞서 싸우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불황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루트비히 에틀러 폰 미제스의 말처럼 '불황은 상처 입은 시장의 치유 과정'이다. 대공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반시장적 정책을 줄고 시장에 치유할 시간을 줘야 한다.



**들어보기**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터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한 자산과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 투자 등급 최하단에 위치한 BBB 채권에 대한 투자는 2008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주요 도시의 집값은 50% 이상 급등했다.

불행의 원인인 돈 풀기로 불행에 치

두 소비하고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 이롭다면 목소리를 높인다. 돈이 없으면 상품권을 주겠다며 인심도 쓴다.

불황이 종식되는 데 걸린 시간은 상이하. 1900년 대공황은 12년이나 걸린 반면 글로벌 금융 위기는 4년 만에 끝났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할수록 공황은 끝이 깊고 오래간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어느 때보

한국경제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A31면 오버시언

## 시론 복지 개편 없는 기본소득은 재앙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심포가 지난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음 대선의 승패를 가를 이슈를 선정하겠다는 압박은 이해되지만 누가 더 많은 현금을 줄 것이냐를 두고 보이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왜 기본소득제가 필요한지, 어떤 기본소득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기초한 정책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복지제도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현실보다 더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인기영합적인 복지제도 도입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복지재정의 비효율은 심각하고 있다.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복지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노동을 기피하는 복지 의존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모든 일터리를 찾아 갈 거라는 공포감이 고조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

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없다. 기본소득을 현행 복지시스템의 대안으로 실행하기에는 부작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 기대와 달리 높은 근로 의욕유인 효과, 기득권 저항 등 검증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본소득은 최소한 기존의 수혜군보다 많아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된다. 그러자면 현행 복지제도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187조원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현행 복지 대체한 대안제 아래 지속불가능한 재정부담은 덜고 근로의욕도 고취할 방안 찾아야**”

249조원이 필요하다.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복지에서 쓰면서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된다. 최근 2년간 실행한 결과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판단도 정부의 발표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

소득수준과 노동활동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완전 기본소득보다, 기본권을 보장하되 소득수준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음의 소득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의 소득

세는 정부가 최저소득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미달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음의 소득세는 빈곤 퇴치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대체하기도 수월하고 재정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음의 소득세 역시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총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장래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인간 존엄의 정의와 노동력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는 시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성공적이든 아니든, 복지 배당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투자위탁까지 약 4차 산업기술에 서두러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방대한 복지 관리체계와 비효율성, 지속 불가능한 재정부담, 의존적 복지수혜자 양산 등 현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이는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복지제도를 대체한다는 기본전제 가 없수되지 않다면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수단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다. 현행 복지제도의 개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기고

정부의 재정상황에 할갑불이 커졌다. 정부 재정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45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적자 수치다.

국가 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국고채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이 뒷받침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을 보면 512조2504억원 규모의 '수퍼예산'으로 문재인정부 가 출범한 2017년 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약 112조원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해 2023년 604조원

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약 292조원으로 예상돼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정책, 문제는 방향

정부는 2021년 이후 세계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정책 효과로 세수가 늘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전망에 고개를 끄덕일 이가 많이나 될지 의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수출규제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세가 확연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008면 오마이뉴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둔화로 정부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더 줄어든다면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빠른면 3년 뒤인 2023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인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서 증가한 예산투입의 대부분(약 20조원)이 보건·복지·노동분야 등 단기 소모성 지출에 집중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우려를 낳는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복지가 아니라 산업과 R&D(연구·개발) 분야를 향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근본적인 세수충족과 비효율적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2020년 1월 4일 월요일 031면 사설 / 오마이뉴스

기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활강 순매도에 이어 7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해 순매도액은 3조38275억원으로 2012년 8월(4조7027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매도가 물리는 현상은 매년 발생하지만 2019년 말에는 그 순매도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며, 대주주는 자본비율이 1%(코스닥 2%, 코스닥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주주인 경우 과세자 포함한다. 대주주 판단의 산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말 결산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그 직전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범위는 올해 확대되며, 시가총액 기준이 올해 4월말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과거에는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냈지만 오는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도 대주주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주주 범위 확대 때문에 작년 말 양도세를 감회하려는 매도세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2021년 4월 이후 시가총액 3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확대에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 간 차별 등의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

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산정 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척되면서 직계존비속 간에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녀나 부모 등이 아닌 친족은 주식 보유 현황을 고려해 주식 양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영국에서는 특수관계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일본은 배우자와 1촌 내 친족으로만 한정하는 등 우리의 대주주 범위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보인다.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수록 개인투자자가 본인을 포함한 친족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의 자본율 기준은 거주자의 경우 1% 이상인 데 비해 비거주자는 자본율 25%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 간 과세행정의 문제가 있다. 작년 12월 26일 배당금 전담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개인은 5500여명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300여명을 매수했다. 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 배당수익을 받을 것이고,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때문에 액자분이 발생한다.

주식투자자는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투자 대상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자금이 부실한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계속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하려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대주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 보완책이고,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되는 자본율 국내투자자와의 과세행정을 위해 현행 25%보다 축소돼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027면 오마이뉴스

헤럴드포럼

**사적영역의 축소와 디스토피아**

헤럴드 포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얼마 전 청와대 수석의 '주책'에 대해 '가짜' 발언은 현 정부의 정책적 정확도를 의심케 하는 일면(一)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또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실현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대응방식을 '정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적영역의 축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적영역의 축소'는 흔히 보이는 정부의 시장개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거래, 가격결정, 분쟁의 해결 등 많은 부문에 있어 사적영역을 축소하고 공적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계약과 자율적인 협상, 민사적 분쟁해결, 시장의 조절기능 등을 존중하기보다는 규제강화, 강제조정, 행정처벌 등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 돼버렸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 이 같은 경향은 강해져 왔고 최근 공수처의 신설과 같은 새로운 권력기관의 도입으로 사법부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정책방향은 통상 '공공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으면 '사적'이라 하더라도 가려지는 너무도 쉽게 무시되고 있다.

사적영역의 축소인 '개인의 자유와 동의'에 대한 존중은 우리나라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원칙이며 사적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 원리이기도 하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활동이 정보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적영역의 확대는 곧 정부의 개인에 대한 정보집근성 확대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의 개인에 대한 통제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영역의 축소와 공적영역의 확대가 가져다 주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과연 지금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SF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디스토피아(Dystopia)'이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미래의 디스토피아에서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는 제약된다. 유산한 도시의 높은 빌딩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소위 '공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으로 송출되고 이에 노출된 대중은 독립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때로는 기어머저 조작된다.

물론 이 같은 암울한 미래는 영화 속의 상상에도 불과하다. 하지만 디스토피아 영화가 먼저 주는 메시지는 여실히 유효하다. 인류를 과거 과학기술 수준은 넘었지만 공산주의라는 디스토피아를 경험한 바가 없었던 바로 북한이 현존하는 대표적 디스토피아 사회이기 때문에 영화의 상상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다름인 것은 디스토피아를 다른 대부분의 SF영화는 자각한 개인이나 일군(一)의 집단의 개인적인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스토피아를 탈출하거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해방연명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처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매일경제

2020년 11월 05일 목요일 A37면 오피니언

## 이슈 토론 기업 상속세를 완화

이견의 상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그룹 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으로 추정되면서 상속세를 완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쪽에선 상속세의 징벌적 성격에 의문을 표하며 세율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의 격차를 이유로 세율 강화의 당위성을 피력한다. 그 가운데 상속세가 과연 '이중 과세'인지에 관한 논란도 분분하다. 상속세는 완화돼야 할까, 강화돼야 할까.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두 전문가의 찬반 입장을 들어 봤다.

### 국가경제 근간 기업 존속위해 '이중과세' 상속세를 완화해야

찬성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다.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과 동시에 기업승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 대신 매각을 고려한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율 비중과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하고 있다. 특히 기업승계의 경우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20%)하고 있어 최대 60%의 징벌적인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인하돼야 할 것이다. 또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수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 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사망자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도 유지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 요건도 현재 실효성이 없는 가업상속 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빈부격차 개선하는 핵심 수단 실제 상속세납부자 극히 일부

반대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미국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세 등)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등의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상위 50%가 전체 자산 중 98.2%를, 상위 5%가 전체 자산 중 50%를, 상위 1%가 전체 자산 중 25%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상속세 등의 역할 제고를 요구한다. 상속세 등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과 관련해 상속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주위에 상속세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지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대략 3% 미만의 납세자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 실세율은 2015년 30.1%에서 2018년 27.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소득세의 불완전한 과세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상속세 합계액은 총 세수 대비 17.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3%보다 낮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계산해도 4.3%에 불과해서 OECD 회원국 평균인 8.5%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의 예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아직 대다수이며,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어떤 방식이든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림. 장현호



03

## 기사를 통한 여론 확산







# 대기업 매출 증가할 때 중소·중견기업 매출도 증가

**한경연 '대기업 '낙수효과' 여전히 높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015면 산업

**대기업 매출 늘면 중견·중소기업도 ↑**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 자발정책은 중견·중기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용 1000명 이상 기업(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런 조사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의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자동차·트레이더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1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은 49조36000억에서 70조60000억으로 1.4배로 늘었다.

회귀분석 계수추진 결과로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는 0.07%, 장기적으로는 0.27% 성장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대기업 수가 1%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0.43% 늘 것으로 파악됐다.

capac@fnnews.com 최갑천 기자

**에럴엠**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001면 종합

**중기로 퍼진 '성장의 과실'...대기업 '낙수효과' 있다**

**한경연, 기업 매출 영향 분석**  
**상관계수의 통계적 의미 확인**  
**문정부 인식과 상반해석 주목**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은 풍속이 아닌 상생의 관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전달된다는 이른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으로, 이는 대기업 '낙수효과'를 부정하던 문 정부의 인식과 상반된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신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 천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천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중견·중기 이상 기업이 하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중견·중기 매출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한경연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년~2018년 자료를 기초로 고용 천명 이상 기업이 하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고용 천명 미만 기업이 하대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어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한호 자동차·트레이더 일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는 중소·중견·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됐다. 실제 자동차·트레이더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100억에서 2018년 141조6000억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36000억에서 70조60000억으로 1.4배 늘었다.

한경연은 이어 대기업 매출 및 기업 수가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업 매출 1% 증가시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 0.07%, 장기적으로는 0.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수 기자

**東日**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B04면 경제 개황

**한경연 '대기업 수·매출 늘면 중소·중견기업 매출도 늘어'**

**9년간 통계 분석·상생관계 확인**  
**'기업 규모 따른 차별적 규제 부담'**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 규모 및 수와 중소·중견기업 매출의 상관계수는 각각 0.481, 0.644로 둘 다 1% 오차 범위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 이하를 수락 두 변수의 동조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는 두 변수 동인과 결과가 각각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경연은 인과관계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기업 매출은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기업 수와 중소·중견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자동차·트레이더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100억 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 원으로, 기업 수는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어는 동안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은 49조36000억 원에서 70조60000억 원으로 1.4배 늘었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중소기업이 경쟁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의 협력적·상생적 관계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팀장은 "경제 성장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은 기자 hungry@donga.com

**한경연**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024면 경제

**“대기업 매출 늘면 中소도 함께 증가... 상생 관계”**

**한국경제연구원 13개 업종 조사**  
**중·대기업 매출 1.3배 늘 때 중·중견기업도 1.4배 상승**  
**기업규모 크다고 규제 강화 경제 성장·역동성 떨어 뜨려**

**대기업자발규제 내용별 분류**

구분	계수(비율)
대주주의권리 제한 등 소유 지배구조	65(79.4%)
특정산업 영영활동 제한 등 영업규제	46(56.3%)
인건비관리(채용) 선인위주 등 고용규제	26(32.3%)
주주회사 규율형 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지배구조	20(25.0%)
실소유자(채용)인원 등 인사규제	16(19.8%)
공정거래 관련 조항을 가한	15(18.8%)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늘 때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의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자동차·트레이더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100억 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 원, 기업 수는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관련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36000억 원에서 70조60000억 원으로 1.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제성장이 규모에 상관 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승수 한경연 연구원은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경제가 조사를 보면, 경쟁력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 총액 합계가 10조 원 이상이면 규제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차별적 규제를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미국, 영국의 경우 소위 비호 중소기업로 경쟁 촉진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한 특조 규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는 47개 법률·188개 조, 30년 이상 된 규제는 17개(9.0%), 20~30년 된 규

제는 55개(29.3%)로 파악됐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면 발목을 잡는 대기업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앞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97.2%는 인수·합병(M&A) 경험이 없고, 42.9%는 선취투자제도가 없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성장을 억제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전략팀장은 "한국 대기업 1개사당 평균 종사자 수는 79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21위, 전체 기업에서 대기업 비중은 0.09%로 33위"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팀장은 "대기업 차별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대동 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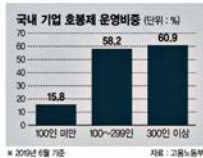
이민홍 기자



#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임금유연성 제고되어야

## 대기업 60% 여전히 '호봉제' ... “노동시장 유연성 떨어뜨린다”

**한경연 주요국 노동시장 보고서**  
 근속 30년 급여 신입의 4.39배  
 연공서열형 관행, 임금 격차 초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  
 직무급 임금체제로 개편 해야”



U)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일수록 연공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1~5년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이 1.59배, 덴마크가 1.18배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근속 1년 미만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한국이 4.39배, 덴마크가 1.44배로 크게 벌어졌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60%가 채택 중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노조가 강한 대기업일수록 호봉이나 연령에 따른 임금의 자연 증가와 해고 보호가 강한 노동시장을 경시시킨다는 것이다. 3월 한국경제연구원 이한국산업기술대 이상의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돼 고용과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고 보호가 잘 되는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의 2.3년에 비해 약 6배

가 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이 424만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152만원)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국내 노동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는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관협합도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호봉제 운영비중이 1000인 미만 기업은 15.8%에 불과하지만, 3000인 이상 대기업은 60.9%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호봉제 같은 연공서열형 임금 관행이 임금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게 이 교수의 결론이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해고 완화와 같은 노동법 개정도 집중해 왔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sapc@fnnews.com](mailto:cs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년 2월 4일 화요일 002면 중첩

**한국경제**

2020년 2월 4일 화요일 A19면 경제

### “대기업 61% 여전히 연공서열 30년 근로자 임금, 신입사원의 4배”

**한경연, 주요국 노동시장 비교**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려면 노사 임금체계를 근속연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무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이상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3개국의 사례와 한국 상황을 비교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국은 모두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4.39배에 달했다. 덴마크(1.44배), 네덜란드(1.65배) 등 유관협합(U) 주요국과 비교해 격차가 컸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4.39배에 달했다. 덴마크(1.44배), 네덜란드(1.65배) 등 유관협합(U) 주요국과 비교해 격차가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하다. 1000인 미만 기업에서는 호봉제 적용 기업이 15.8%에 불과했지만 3000인 이상 대기업은 60.9%에 달했다. 이런 구조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임금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직무급 임금체제 도입을 위해 해정부와 노사 양측이 시의적절한 책임을 지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gjseon@hankyung.com](mailto:gjseon@hankyung.com)

2020년 2월 4일 화요일 A12면 경제

### 매일경제

## 30년근속 근로자 임금, 1년미만 신입의 4.4배

**한경연 “임금 양극화 심각 호봉제 → 직무급제 전환을”**

국내 대기업·정규직·유노조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극화가 극심한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행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급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 이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 1~5년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1.59배로 네덜란드(1.21배), 독일(1.11배), 영국(1.16배), 프랑스(1.15배) 등 유럽 주요국보다 높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4.39배 높아 네덜란드(1.65배), 독일(1.89배), 영국(1.67배), 프랑스(1.64배)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성은 대기업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봉제 운영 비중은 1000인 미만 기업에선 15.8%였지만 3000인 이상 대기업은 60.9%에 달했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 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다. 월평균 임금이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성 임금제 관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해고 완화 같은 노동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 환경과 노사 관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임금 유연성을 줄이기 위한 직무급 임금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 대상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3개국은 모두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안정성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노동 환경과 과정에서 임금유연성 제고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 등이 기반이 됐다. [lyshin@hankyung.com](mailto:lyshin@hankyung.com)



#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헤럴드경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002면 중합

## 민간경제, 성장 기여율 3년새 3분의1 토막

최근 3개년 경제 지표의 비교에서 한국의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되며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를 통해 한국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내려갔다.

성장률 하락 폭도 이 기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크다. 민간투자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처로서 대외 배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규모가 부진했다.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FDI가 감소했지만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돈을 본국으로 이전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OI)이 크게 줄어든 효과를 봤다.

고용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우리나라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일 기자

문화일보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023면 경제

## “추락하는 민간투자 성장기여율 美·佛처럼 감세·규제완화 절실”

한경연 '韓·美·佛정책' 비교 '韓, 최저임금 등 부담 커져'

한국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친기업 활동 촉진 정책을 펴 경제활력을 높이고 있는 미국, 프랑스의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프랑스는 감세,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 고용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펴낸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95.8%에서 82.6%,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 프랑스와 견줘 계산식으로 크게 추락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성장률 하락 폭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투자는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격하게 꺾였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393억 달러로 늘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감소했다.

증시는 2017년 초 대비 한국의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았다. 고용률은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계월 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했지만, 미국은 1.1%포인트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만 달러인 미국은 연 2~3%, 4만 달러인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했지만 2018년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급격히 둔화하며 지난해 1~3분기에 0.0%까지 떨어졌다.

이만중 기자

중앙일보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002면 중합

## 민간 성장기여율 78%서 25%로 ... 미국 83%에 한참 못 미쳐

(연 세)

GNI 미국 2~3% 늘 때 한국은 0%

우리나라 민간경제 활력이 위축되며 민간 성장기여율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내려갔다. 성장률 하락 폭도 이 기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크다. 민간투

자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가 됐다.

고용률에서도 한국은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처났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이 기간 한국은 1.0%포인트 하락했는데 미국은 1.1%포인트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했는데 한국은 지난해 1~3분기에 0%를 기록했다. 증시도 한국은 2017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다.

추광호 한경연 입지리전략실장은 “감세·규제완화·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 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남희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배우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방안

東日日報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B03면 경제 금융

## 한경연 “코로나 극복 위해 한시적 규제유에 필요”

### 경제 체질개선 5대 과제 제시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경제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 보고서 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계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한경연 측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 위기 진화에 나선 뒤 규제개혁 및 세계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해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 핵심 과제를 찾아 한시적 규제유에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시행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규제 유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 심리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로 응급 처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와 마찬가지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 사례를 돌아보고,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일 기자 dong@donga.com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003면 종합

## 한경연 “기업활력법, 소상공업으로 확대해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대형 악재를 넘기 위해서는 ‘위기진화-경기 부양-산업구조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경제회복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시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위기진화 직후에는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의 해외투자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의 4.8배를 기록하는 등 투자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위축된 국내투자를 되살리는 게 경기 부양의 첫 단추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에 등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두 번째 경기부양 과제로 제안했다. cs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朝鮮日報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A04면 종합

## “280개 규제 푼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체질 확 바꿔야”

### 한경연, 5대 핵심과제 제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비교·분석해 22일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 개혁과 세제(稅制)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첫 번째 과제로 뽑혔다. 주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금융 위기 당시에는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 업종·피해 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했다”며 “이어 규제 개혁과 세계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민간·공공 부문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280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 유에 등을 시행했다.

한경연은 두 번째 핵심 과제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꼽았다. 건설 분야는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이다. 금융 위기 당시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 계획을 발표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구조 조정과 공공 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기업활력법을 모든 산업,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은진 기자



# 경제성장률 1%p 감소하면, 신생기업 8,000개 증발

**한국경제**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A13면 경제

## “성장률 1%p 하락 때마다 신생기업 7980개 감소”

가구당 가계부채는 657만원 늘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가계부채가 657만원 늘고, 신생기업 수는 7980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여파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세수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

송홍석 기자 click@hankyung.com

**세계일보**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015면 경제

## “성장률 1%P ↓ 땀 가계부채 657만원 ↑”

한경연 분석 “기업 8000개·시총 97조 감소”  
소비 진작책 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 주문

나기현·이우승 기자 na@sogye.com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고, 신생기업 수는 8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성장 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기업부문에서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줄어들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문에서는 가구당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고, 월소득은 10만원씩 감소했으며, 정부·사회부문에서는 국제 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 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2.2% 성장에서 -1.2%로 3.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책 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유류 인력 활용 제고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탄력근무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꼽았다. 또 법인세를 인하, 연구개발(R&D)·설비투자 등에 대한 공제 확대,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등도 권했다. 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알디미 놀이 무역장벽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 환경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세계경제 혼란기에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미국발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와중에 일어나 세계화를 둔화시키고 세계체제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 경쟁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는 보면 불자를 중심으로 알디미 수출제한 조치를 하고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1%p 하락 시마다 초래될 경제주체별 영향**

	가계	기업	정부·사회			
월소득(천)	10만	7980	세수(천)	33조3000억	빈곤인구(만)	14만9000
변화폭	-10만	657만	-7980	-97조3000억	-33조3000억	14만9000
변화량	439만9000	8579만8000	91만9850	1344조	293조6000억	788만800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매일경제**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A14면 경제

##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영향

가계소득·상대적 빈곤인구는 2020년 말, 가계부채는 2019년 말, 신생기업 수·국제수입·사회보험은 2019년 말 기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성장률 1%P 떨어지면 신생기업 8000개 증발

코로나19 소크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8000개 가까운 신생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와 월소득이 급감하고, 금융부채와 빈곤 인구가 급증해 성장의 축인 기업-가계-정부 모두 성장 소크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후폭풍 최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위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기업 부문에서 신생기업 798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97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도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부채 비율이 6.9%포인트 상승하고 월 가계소득은 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0만원씩 줄어들고 금융부채는 무려 675만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이 줄고 빚이 늘어가면서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매출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한경연 보고서**  
가계소득은 10만원씩 줄어  
소비둔화→매출감소·투자위축  
경기침체 악순환 고리 우려  
주52시간제 규제 완화해야

아다는 우려가 크다. 재정주도 성장으로 무너지는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정부 역시 코로나19 소크로 입을 피해가 적지 않다. 국제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인구는 무려 14만9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정부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여서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1%지만 이미 추가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0% 성장을 기정사실화했고 최악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후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장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소비나 투자 진작책은 물론 성장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족이나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기업에 ‘혹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등 각종 노동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우선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근무제 확대, 유류노동인력 활용, 고령·여성 직업훈련 확대, 우수인력 도입 등이 제시됐다. 기업이 생산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이 최우선 과제다. 한경연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설비투자 등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성장을 위해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성현·김형주 기자

# 코로나 불구, 대기업 '인력감축' 자제, '유동성 확보'·'인축재정'으로 버티

## 세계일보 “대기업 33% 코로나 6개월 더 가면 감원 불가피”

한경연, 500대기업 중 120곳 설문조사

120곳 기업 10곳 중 33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더 지속할 경우 인력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지난날 13~24일 중 응답한 300여 기업에 대해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방향’ 조사에서 기업이 나타났다. 대기업은 6.7%가 6개월 이상 더 가면 감원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 2~4개월 16.7%, 4~6개월 29%, 0~2개월 6.7%로 나타났다.

유형·규모·업종·지역 구분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곳은 19.4%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 받지 못하는 이유는 휴업기간 혹은 휴직기간 요건 미달인 29%이라고 답한 기업이 과반이었다. 매출 감소 등 사유 불만 23.9%, 기타 다른 상황 변화와 사유 24.9%로 남아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인력감축에 따른 대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요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99.0%, 휴업기간 75%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동결(9.2%)과 긴급출근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율을 추가 적용(13.9%)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휴업 기간이 코로나19 사태 최소화를 위해 현재 하반기 11월 중만 대응 전략은 ‘인력감축’ 조항 유동성 확보(22.9%)가 가장 많았다. 휴업·휴직(19.4%), 성과급·복지제 등의 급여 삭감(17.5%)과 같은 비용절감 방안이 뒤를 이었다.

추경으로 한경연 경제정책방향은 “휴업·휴직 실시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 정부·민간의 노력이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분기 국내 대기업들이 어음 외종에 투자할 계획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기업경영사태도 코스닥에 따르면 경기예비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1분기 보고서 제출한 59개 그룹 31개 계열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56.2569억원, 148.87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매출은 7.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9.1% 급감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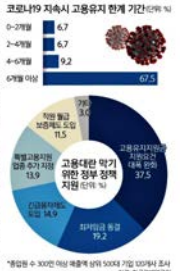
하지만 같은 기간 투자는 17.853799억원에서

## 매일경제 올들어 실적 27만명에 대기업 구조조정 초읽기, 이제 시작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적이 207만9000명으로 실적 시계열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장의 문을 닫아나 장안되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3년의 1.6배나 됐다. 특히 10인 미 만 명세 사업장의 폐쇄가 잦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파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수인 데다 미국과 유럽의 폐쇄 조치는 3월부터 이듬해 경제적 영향도 그 후 본격화될까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은 작년 대비 3월 -2.6%에서 4월 -24%, 5월 떨어 -46%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이후재정방도 “물류 위축, 고공지표 부진, 수출 감소폭 증가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인력 감축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던 대기업 가장 위험할 경우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동아일보 올해 207만명 실직... 대기업 33% “코로나 반년 더 가면 감원”

(1~4월)

올해 1~4월 실직자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도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 6000명이다.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올해 1~4월 안에 실직한 이후 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올해 4월 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이 207만 6000명이라는 의미다. 같은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 5000명으로 역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1~4월 실직자 수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는 중점 최고치였던 2009년(63만 8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운데 실직할 사람 수와 실직 시기, 실직 사유를 파악한다. 중점자가 실직 사유 가운데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이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대기업 경영위기 극복방안**

단위: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유동성 확보 조치	22.5
유·무급 휴업에는 휴직	19.5
임직원 급여삭감	17.5
별도의 대량인원 감축	17.5
인력 감축	8.8
사업구조·재편 추진	4.4
공급망 변경 추진	3.1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가 ‘비자발적 실직’으로 분류된다.

실직 사유 가운데 ‘일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 5000명)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34만 4000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 5000명), ‘직장 휴·폐업’(16만 명)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11만 2000명)보다 배 가까이 늘면서 처음 20만 명을 넘어섰다. 직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 역시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8만 3000명)보다 배로 늘

면서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실직자가 집중됐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 6000명 가운데 2만 1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 5000명(4.1%)인 사업장에서 4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가 수가 많았다.

추 의원은 “1~4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40만 명대 후반에 머물던 비자발적 실직자가 지난해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 피해 본격화 이전인 1~2월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월비보다 각각 7만 명,

17만 8000명 늘었다”며 “지금의 고용대안은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고용 약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올해 가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대기업도 실업 위기에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들이 지난날 13일부터 24일까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경영 위기 극복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경영 약화가 앞으로 6개월 더 지속할 경우’에 관해 묻자 10곳 중 3곳의 기업(32.3%)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회 중인 대기업(8.8%)의 3.7배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답한 구체적인 고용 유지 한계 기간은 0~4개월 67.5%였다.

대기업들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한 방호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확대 완화”(37.5%)와 “최저임금 동결”(19.2%)을 꼽았다. 이미 휴업·휴직을 하고 있었던 지원요건 마달로 고용유지지원금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80.6%에 달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이소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한국 노동비용 경쟁력, 주요 진출국 대비 약화... 리쇼어링에 치명적

**東亞日報** 2020년 6월 2일 화요일 B03면 경제 글쎄

## “한국 노동비용 상승, 리쇼어링 어렵게 해”

한경연 “한국 8년간 年 2.5% 증가  
국내기업 진출 국가는 0.8% 감소”

국내 기업의 높은 노동비용이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복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들어 1인당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2배 빠르게 오른 탓에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8년 중 국내 업체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10개 국가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0.8%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 증가는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보다 올랐다는 의미다. 높을수록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경연 분석 결과 2010~2018년 국내 업체들의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5.2%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2.6%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주요 10개 국가는 평균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증가하

고 1인당 노동비용은 연 3.0% 증가해 생산성이 개선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 리쇼어링을 위해서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을 높여 제조국가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su@donga.com

국가	연평균 증가율 (%)
미국	1.2
중국	2.5
독일	-2.7
일본	-3.8
인도	-1.1
한국	2.5

주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한국

**朝鮮日報** 2020년 6월 2일 화요일 B04면 경제종합

## 한국, 노동 생산성보다 노동비용 증가가 크다

제조업 노동비용 연2.5%씩 증가  
美·中 등 10국은 연0.8%씩 감소

우리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중국·미국·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요 10국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이다.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에 비해 빠르게 올라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은 연평균 5.2%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2.6%에 그쳤다. 반면 10대 진출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증가하고 1인당 노동비용은 연 3.0% 증가해 생산성이 노동비용보다 빠르게 향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고임금”이라며 “유리한 확대를 위해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제조 국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은 기자

**매일경제** 2020년 6월 2일 화요일 A14면 경제

## 기업U턴 가로막는 韓인건비 日·獨 내릴때 ‘나홀로 상승’

한경연 주요 10개국 비교  
노동생산성은 제자리걸음  
임금 오르는 속도 2배 빨라

이 1인당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해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의미다. 중국(2.5%)만 노동비용 증가율이 한국과 같았고 미국(1.2%) 브라질(0.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3.8%) 독일(-2.7%) 오스트리아(-2.3%) 싱가포르(-2%) 등 나머지 주요국은 모두 노동비용이 감소했다.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5.2%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2.6%)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주요 10개국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 3.9% 상승해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3%)을 웃돌았다.

가뜩이나 고임금 부담에 허덕이는 국내 기업에 정년 연장은 얹힌 데 달린 격이다. 한경연은 이날 “정년 연장의 비용 추징” 보고서를 통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 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이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646억원)은 25~29세 청년 약 8만60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김형주 기자



#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005면 중첩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경쟁계 요구	
<b>노조법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li> <li>•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li> <li>• 노조전임자 임금규정 허용</li> </ul>	<b>경쟁계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정파 시 대대권로 허용</li> <li>• 사업장 정기 금지 대상은 주요 사업에 전체 사업도 확대</li> <li>• 사용자인 형사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li> </ul>

## ILO發 ‘親노동 정책’ 강행 나서자 경제계 “대체근로 허용하라” 반발

###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등 정부, 노조법 개정 움직임 경제단체 “노사대란 초래”

고용노동부가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계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적 경제위기 시기에 입법을 강행하는 배경에 의문을 품으면서 입법 시 적절한 노사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달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제87·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 개정법을 먼저 입법예고하면서 경제단체들이 공동 저지에 나섰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신화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8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위한 이행 절차로 20대 국회 당시도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이행 차원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규정 금지규정 삭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제한제도 편입·통합 등 노동권

강화 조항을 대거 개정안에 담았다. 경쟁 관계자는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은 ‘종사자만에 의한 노조 가입 체제’가 ‘비종사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뒤흔들게 된다”며 “정당한 해고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세력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이들이 노조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에 무리한 이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법외 노조의 합법화도 겹치게 된다.

노조 전임자 급여규정 금지 삭제도 대표적인 노동권향적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무렵 관계자는 “실질적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한 여지를 두는 조항”이라며 “개정안이 입법되면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도 확대돼 지금도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불균형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계는 강화된 노조권에 비해 대항권은 개정안에 없어 노사분쟁 시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조법상 대대권로가 전면 금지돼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대대권로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직장폐쇄는 행정당국이 요건을 엄격히 검증하는 데다 사용자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해 현실적 대안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http://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004면 중첩

### 한경연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대립적인 노사관계 더 악화”**

한국경제연구원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업계와 노동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004면 중첩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노사관계 악화 우려”

**한경연, 노조법 개정 의견서 내 “비조합원 노조임원 허용엔 혼란” 전문가도 “노동 경직성 초래”**

주요 내용	경제계 입장 및 의견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복직 전제형 등 무리한 요구로 노사관계 악화 우려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정치파업 등 사회적 혼란 우려
노조전임자 임금규정 허용	노조 자주성 손상, 노사관계 긴장 역행
개별교섭 시 노조법 제100조 개정	근로자-임무특수 노조법 격차 있어 차별 논란 불가피
사업장 정기 금지 폐지	사업장 정기 전면 금지필요(주요교섭장기 전담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 → 3년)	3년 이상 연장 필요(중요교섭 → 일반비협약)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노조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비조합원이 상당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노조 전임자 임금규정 금지제도’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기했다.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각 노조가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경영위기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생산 주요업무시설’ 등에서만 경영위기를 금지하게 돼 있다.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로 허용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이나 ‘리소어링’ (해외공장 국내 복귀) 등에도 상당한 역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해고자나 퇴직자들이 (노조에) 들어오게 되면 최저임금 문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노동 경직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 협상할 때 이들은 (해고, 퇴직자) 회사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imt@fnnews.com](http://kimt@fnnews.com) 김은주 기자



# 재정준칙 확립·준수로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해야

문화일보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023면 경제

## 30%→43%→51%… 국가채무비율 ‘초고속 상승’

<2011년> <2020년> <2023년 예상>

### 한경연, 분석·전망 보고서

30%대→40%대까지 9년 걸쳐 50% 넘어서는데 불과 3년 예상

살포식 재정지출로 급등 추세 1998 외환위기보다 상승폭 커

국가 적정채무비율 40% 수준

### 일대환 기자

올해 국가 채무비율 상승 폭이 과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을 이유로 재정을 과다하게 '살포' 하면서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빠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이런 내용의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올해 국가 채무가 전년 대비 111조4000억 원 늘어

나면서 국가 채무비율도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43.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승 속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1988년 상승 폭(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2009년의 상승 폭(3.0%포인트)을 웃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당시 1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가

채무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GDP의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 채무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2021년 46.2%, 2022년 49.9%를 넘어서 2023년에는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충분히 우려를 삼 만큼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11.4%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대(2004년 22.4%)와 30%대(2011년 30.3%)를 넘어서기까지는 각각 7년이 걸렸다. 40%대(2020년 43.5% 예상)까지 도달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올해 40%대에서 이후 50%대 문턱을 넘기까지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통합재정수지 적

자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국가 채무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 채무비율 증가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 채무비율은 40.0%가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내외외환도 높은 소극적 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0%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선례와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자금과 같은 이해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럴드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002면 종합

## 국가채무비율 '빨간불'…IMF때보다 큰 폭 상승

올해 작년보다 5.4%포인트 상승

3년 뒤 50%대-재정건전성 우려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준수"

경제위기 시 국가채무비율 변화 비교

연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외환위기	11.4%	15.3%	26.8%
글로벌 금융위기	26.8%	29.8%	38.1%
코로나19	38.1%	43.5%	43.5%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의 상승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펼친 때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3년 후에는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11조4000억 원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연간 상

가 작년보다 111조4000억 원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큰 상승폭이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포인트(2003년)로 늘었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포인트(2009년) 증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막힌 올해는 국가 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포인트(111조4000억 원)까지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긴급재난

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소진에 상당부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늘어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2023년)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

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이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 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을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 이 아닌 선례와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자금과 같은 이해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식 기자

신경리뷰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802면 경제종합

##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외환위기 때보다 크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폭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정부가 재정건정 전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11조4000억 원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연간 상

승 폭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3.9%포인트)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포인트)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2023년 5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상승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2023년)로 올라가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선례와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식 기자



# R&D조세지원 업고 뿔뿔 나는 중국, 까다로운 절차에 막힌 한국

▲ 에필드

## R&D 혜택 축소 韓 기고, 파격지원 中 날고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업 수	66	68	80	91	121
중국 R&D 비중	49.7	57.2	81.4	101.6	136.2
한국 R&D 비중	14	12	14	14	14

**글로벌 R&D투자 500억 달러 돌파**  
**중 121개·5년간 2배 육박**  
**첨단산업 골기 '파격' 육성책**  
**14개·1년·계차리검을 지속**  
**세계최대 축소 기술강국 이행**  
**산업R&D 혁신 정책토론회**  
**'규제 완화'로 연구개발 확대'**

이번호 '반도체 골기'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육성책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의도 세제개혁을 축소하는 등 오히려 기술 강국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정책이 과도한 행정규제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시장 수요를 적극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13일 재계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마련한 중국 국무위원 회견 '신식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신식도'에 담긴 첨단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도화 발전 추진 정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SW)산업과 반도체산업의 발전 환경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탄력을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외국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2011년 6%였는데 2016년 4%, 2018년 2%로 오히려 줄고 있다. 실제 대기업이 신청한 공제 금액도 2014년 135,000억원에서 2018년 11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이 기간 한국은 2015년에 14개만 인 기업에 비해 2019년 121개로 2배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었고, 한국은 20

억 3,399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난다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차이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조세 지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구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한국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추가비용 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에 R&D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상향했다.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이제 중국 국무위원의 '신식도'에 담긴 첨단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도화 발전 추진 정책'으로 추가적인 탄력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10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신기술개발 기업 설립 시 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비 채굴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인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중국의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개혁 이전에 서 우리나라도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외국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2011년 6%였는데 2016년 4%, 2018년 2%로 오히려 줄고 있다. 실제 대기업이 신청한 공제 금액도 2014년 135,000억원에서 2018년 11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신식도'에 담긴 '산업R&D 혁신 방안 강화토론회'에서 "연구개발 비중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R&D를 확대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강화 등 공을 저축하는 등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책 등 기술은 내각비로 보장"으로 권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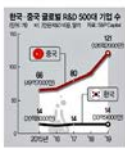
2019년 8월 13일 목요일 041면 종합

기자 정보

## 중국은 '66→121' 글로벌 R&D 500대 기업 수 한국은 '14→14'

**향상된 '2015-2019년' 비교**  
 중·연구개발비 50% 추가공제  
 기업당 조세혜택으로 투자유동  
 해, 세계경제를 갈수록 '갈수록'  
 전자산업은 작년 역성장하기도

중국과 미국은 2015년에 14개만 인 기업에 비해 2019년 121개로 2배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 3,399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난다는 데 그쳤다.



향상된 데 따른, 중국의 R&D 기업 수 성장세가 견제되고 2019년 조사 시 란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경연 기자는 "중국과 미국은 2015년에 14개만 인 기업에 비해 2019년 121개로 2배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 3,399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난다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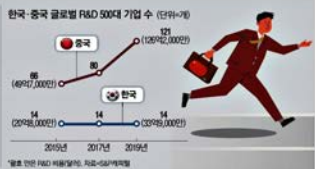
향상된 데 따른, 중국의 R&D 기업 수 성장세가 견제되고 2019년 조사 시 란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경연 기자는 "중국과 미국은 2015년에 14개만 인 기업에 비해 2019년 121개로 2배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 3,399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난다는 데 그쳤다."

향상된 데 따른, 중국의 R&D 기업 수 성장세가 견제되고 2019년 조사 시 란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경연 기자는 "중국과 미국은 2015년에 14개만 인 기업에 비해 2019년 121개로 2배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 3,399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난다는 데 그쳤다."

기자 정보

## 韓, 세계 1등 상품 7개...日 잡았지만, 中은 저멀리 질주

**넷째. 상품 점유율 분석**  
 韓, OLED·스마트폰 등 1위  
 일본과 동시에 전세계 3위  
 중국은 성장 중 12개 부문 1등  
 R&D 500대 글로벌 기업서도  
 중국은 5년동안 66곳→121곳  
 같은기간 한국은 14곳 제자리



향기 제품 수출비율 1위에 오른 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7개로 전년 대비 3개 늘었다. 글로벌 기업 수 500개 기업(R&D 500대 기업 수)도 지난해 66곳에서 121곳으로 2배 늘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부문은 2012년 8개에서 2019년 7개로 줄었지만 이후 추가 감소는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기업은 29곳, 일본은 47개 부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위를 차지한 부문은 7개, 중국은 1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

각 25개, 12개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2위로 올라갔다.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 약진은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휴대전화기에서 웨어러블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50%포인트 높아져 34.4%까지 올라갔다. 시장 2019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

각 25개, 12개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2위로 올라갔다.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 약진은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휴대전화기에서 웨어러블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50%포인트 높아져 34.4%까지 올라갔다. 시장 2019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

향기 제품 수출비율 1위에 오른 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7개로 전년 대비 3개 늘었다. 글로벌 기업 수 500개 기업(R&D 500대 기업 수)도 지난해 66곳에서 121곳으로 2배 늘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부문은 2012년 8개에서 2019년 7개로 줄었지만 이후 추가 감소는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기업은 29곳, 일본은 47개 부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위를 차지한 부문은 7개, 중국은 1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

향기 제품 수출비율 1위에 오른 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7개로 전년 대비 3개 늘었다. 글로벌 기업 수 500개 기업(R&D 500대 기업 수)도 지난해 66곳에서 121곳으로 2배 늘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부문은 2012년 8개에서 2019년 7개로 줄었지만 이후 추가 감소는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기업은 29곳, 일본은 47개 부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위를 차지한 부문은 7개, 중국은 1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

향기 제품 수출비율 1위에 오른 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7개로 전년 대비 3개 늘었다. 글로벌 기업 수 500개 기업(R&D 500대 기업 수)도 지난해 66곳에서 121곳으로 2배 늘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부문은 2012년 8개에서 2019년 7개로 줄었지만 이후 추가 감소는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기업은 29곳, 일본은 47개 부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위를 차지한 부문은 7개, 중국은 1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각



# 한국 재정건전성, 독일형이나 일본형이나 갈림길

朝鮮日報

2020년 9월 3일 목요일 A03면 중반

## “나랏빚 확 줄인 독일 적자 늘어나는 일본 한국은 갈림길에 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독일 사례와 그 반대인 일본 사례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를지 갈림길에 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이자 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급증 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유지할 덕분에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200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2.2%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해 38.1%로 1년 사이 2.2%포인트 올랐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재정수지 비율 악화와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90.4%에서 지난해 69.3%로 7년 만에 21.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 비율도 2007년 154.3%, 지난해 225.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정부도 독일이 택한 길을 따라 국가채무 비율 한도 설정·균형 재정 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 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 제도 등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문화일보

2020년 9월 2일 수요일 020면 경제

## “국가채무비율 가파르게 오를 조짐 한국 ‘獨과 日의 갈림길’에 서있다”

한경연 ‘재정안정성 분석’ 진단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위험이 매우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증가와 재정적자 악순환을 막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 통해 “국내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가 안정된 ‘독일형’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형’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채무·재정준칙 법제화, 성장률 제고로 재정 건전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초재정수지(국내총생산 대비 이자

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 흑자 비율이 201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2.2%포인트 급락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같은 기간 35.9%에서 38.1%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염병 위기로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독일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도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 동안 21.1%포인트 감소해 지난해에는 69.3%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제도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 제도 등 좋은 기업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한국경제

2020년 9월 3일 목요일 A04면 중반

## “빚더미 얹게 된 한국재정 일본 전철 밟지 말아야”

한경연, 재정 정책 분석

日 국가채무비율 225% 치솟아 獨처럼 국가채무 꾸준히 낮춰야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국가채무비율이 200% 이상으로 치솟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낸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38.1%로 2018년 35.9%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다”며 “과거 10년간 완만하게 상승하던 것과 확연히 다른 추세”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급락함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비율은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재정집행의 효과 가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기초재정수지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2018년 2.9%였던 기초재정수지비율이 지난해 0.7%로 푹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올해 기초재정수지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 수치들 토대로 한경연이 예상한 수치는 -5.8%다. 한경연은 내년에도 이 비율이 -5.4%로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로 재정건전성 기준인 40%를 처음으로 돌파한 뒤 내년에는 46.7%에 육박할 것으로 한경연은 관측했다.

한경연은 기초재정수지비율을 흑자로 전환시켜 2012년 90.4%였던 국가채무비율을 지난해 69.3%까지 낮춘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 지속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초재정수지비율 적자를 이어간 끝에 국가채무비율이 225.3%까지 치솟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빈기자 lab@hankyung.com



# 특고, 고용보험 일괄적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감소 우려

한국경제연구원

## 특수고용직 63% 싫다는데 '고용보험 의무가입' 국무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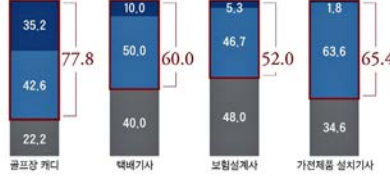
**보험설계사·학습자·캐디·택배 등 환경엔 조사 "일자리 불안" 반대 경중 "선택적 가입이 글로벌 표준"**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사실상 정치내트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를 들은 향후 대동법방으로 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특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중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골자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당첨기업)▶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 지급 등이다. 입법안은 특고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 물어보니**

단위: % ● 의무가입 찬성 ● 보험가입 선택권 부여 ● 의무가입 반대



종사자가 아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학습지도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택사기사·신용카드모집원·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업무 형태 등이 전혀 다르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라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스페인이 탈리타를 봐도 당사자들의 선택적 가

이 약화(23.5%)하고 '무인화·자동화를 촉진(19%)'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왔다.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회사가 직접 고용돼 있지 않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작 특고 종사자들이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택배기사·보험설계사·가전제품설치기사·골프장캐디 등 대표적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 불안'이었다. 특고 종사자 10명 중 7명(68.4%)은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사업주 부담이 증가(41.3%)'하고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사업환경

이 악화(23.5%)'하고 '무인화·자동화를 촉진(19%)'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왔다. 추후로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여파를 우려해 가중치(3%)는 특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다. 지난해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인데, 올해는 신용 코로나비리(신용감염증) 등으로 1990년대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총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연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적용 분리▶보험과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아·하남진 기자 isaj@joongkoo.co.kr

한국경제연구원

## 특고 당사자마저 63% 반대하는데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마이웨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의견

백인라이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안이 국회위원회(국회)에서 9월 9일 제1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면이 열렸다. 하지만 경제계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왔던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속도에 대해 "우리가 '전 국민'이라는 말을 쓰면 특고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제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찬성 (%)	반대 (%)
특고 종사자	35.2	64.8
보험설계사	5.3	94.7
가정제품 설치기사	1.8	98.2
택배기사	10.0	90.0
주요종업종	35.2	64.8

**직장가입자를 직접공과금 부과 이직 잦아 재정남비 우려**  
**소득세종원 세징사 80% 보면**  
**사업주들 부담도 대폭 커져**  
**신규 일자리 줄어든다는 우려**  
**특고도 노동자도 '의무가입 싫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내용물공과금이라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예산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이번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특고와 일반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고와 일반근로자를 구분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특고와 일반근로자를 구분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특고와 일반근로자를 구분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직을 두고 노동력 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특고 종사자가 이직을 하면 특고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특고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고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특고 종사자의 이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특고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고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특고 종사자의 이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특고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들라고요? 보험료 부담되는데..."

**특수고용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노동자 60% '과부 기압 반대'**  
**정경계도 '우리 일괄 반영 안돼'**

특고 종사자 234명 설문조사 결과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 불안'이었다.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





# 청년실업률, 10년간 OECD 4.4%p 감소, 한국은 0.9%p 증가

**매일경제**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A16면 경제

## 韓 청년실업 OECD중 나홀로 뒷걸음

한국, 8%에서 8.9%로 나빠져 실업 증가폭 OECD내 3번째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반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7개 회원국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개선됐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8%에서 8.9%로 0.9%포인트 악화됐다.

미국(-8.1%포인트), 영국(-6.5%포인트), 독일(-5.3%포인트), 스웨덴(-4.5%포인트), 일본(-4.4%포인트)

등 주요 선진국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OECD 37개국 중 한국보다 청년 실업률 증가 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10.1%포인트)와 이탈리아(4%포인트) 뿐이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국가는 터키(0.6%포인트), 노르웨이(0.4%포인트), 룩셈부르크(0.1%포인트)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OECD에서 5번째로 낮은 한국 청년 실업률은 15단계 내려간 20번째로 떨어졌다. 한국 청년 고용 약화는 높은 노동 비용 때문이다. 2009~2019년 한국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6%로 미국(0%)과 일본(2.4%)을 크게 앞선다. 김형주 기자

**조선일보**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B03면 경제종합

## 청년실업률 OECD 5위→20위

(2009년) (2019년)

한국·이탈리아·그리스만 증가

OECD 국가 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에게 취업 한파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8.9%로 2009년(8.0%)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포인트 하락했다.

OECD 37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6국으로,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 폭이 큰 국가는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이탈리아뿐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번째로 낮았는데 2019년 20번째로 밀려났다. 주요국 중 미국이 8.1%포인트(14.5%→6.4%) 내려갔고, 영국 6.5%포인트(14.4%→7.9%), 독일 5.3%포인트(10.2%→4.9%), 일본 4.4%포인트(8.0%→3.6%) 낮아져 우리와 대비됐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지난해 433만1000명으로 0.2%(9000명) 감소했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자는 10.6%(3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 인구는 같은 기간 3.9%(2억6000명) 감소했는데 청년 실업자도 30.9%(18만 8000명) 줄었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탈리아·그리스 3국뿐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 경제가 위축하면서 청년층 인구 감소 폭보다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청년 실업률 해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문화일보**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B22면 경제

## 기업하기 어려워지는 韓...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門'

주요 5개국 '고용환경 비교'

韓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최하 민간기업 투자 의욕 떨어뜨려 하반기 채용규모 예년보다 '뚝'

일대환·김은우 기자

▶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착수할 가운데 산동·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청년 고용환경 악화 흐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요인이 가장 크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고용환경도 패닝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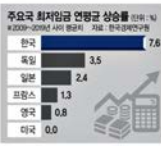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지난 7월부터 3급 신입사원 모집에 들어갔고, CJ그룹도 같은 날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다. 포스코도 지난달 서류 접수율 시작으로 3개 계열사가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LG그룹과 KT는 올해 초 공채 폐지 이후 인턴십을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N·아비와 카카오도 신입 개발자를 선발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기업하기 어렵다는 여론은 크게 내리걸린 것이다. 인크루트가 하반기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69.1%가 신입 채용 계획이 있지만, 채용규모는 예년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 5개국(G5)의 청년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독 한국만 고용환경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 법인세(최고세율 기준) 인상 폭 등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이들 국가의 고용환경 변화를 비교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7.6%(단일 최저임금 적용)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0%, 영국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50위를 기록해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이런 이유로 2009~2019년 사이 G5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은 8.0%에서 8.9%로 상승했다.

이상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급격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의 유연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수 있도록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 고용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 폭력파괴 등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부담 법안 봇물

## 매일경제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A12면 종합 환노위 법안 10건중 7개 기업 옥죄는 규제강화화

한경연, 21대국회 보고서

21대 국회가 개시된 지 넉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업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고용창출 원동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세계요청과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시 시점인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2일간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로 관련 발의 법안 중 13.3%에 그쳤다.

주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이상 근무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항 등 기업 부담을 더 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고용창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 권한만 키우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사용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만들고,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한경연 측은 환노위에 계류된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하고 있다. 정의행위 중 대체인로 금지 규정 삭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임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경연 측 주장이다.

한우림 기자

東亞日報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B04면 경제 금융

## “고용-노동 법안 10건중 7건은 규제 조치”

### 한경연, 4개월간 발의 264건 분석 “노조 권한 높이고 자율해결 막아”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의 10개 중 7개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 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규제 법안들을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 권한만을 키우는 것, 사용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것, △현장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

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 만능주의로 구분했다.

한경연은 먼저 노사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법안으로는 규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환노위에는 노조의 계획에 따라 폭력·과포를 동반한 노조 쟁의 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 일원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 고용 노동 관련 규제 법안 관련 우려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불법 파업 시에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입금 신청 금지 등

일자리 감소 우려 한 달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등

규제 만능주의 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 직장 밖 이해관계자 등 제3차까지 확대 등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이해관계자 등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형태공시제도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핵심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헤럴드경제

2020년 10월 19일 화요일 027면 오리지널

## 노동 규제법안만 쏟아내면서 ‘일자리’ 얘기할 자격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들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노동·고용법안 264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관련 법안의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불과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 등은 이미 논란이 돼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 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일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 등 덜 알려진 것도 상당하다. 누가 봐도 노조 쪽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법안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기가 막힐 뿐이다.

노조에만 힘을 실어주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기만 하는 법이 시행된다면 어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채용을 늘리겠는가. 여기에 제계가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계속 반발하는 관련법안까지 기업 규제법안은 그야말로 출수다. 한쪽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도 모자라 다른 손으로 팔까지 비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정치권은 기업들이 고용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한 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보듯 고용시장엔 여대남 가늘소크가 물어들었다. 9월 취업자 수가 40만명 가까이 줄고 실업자는 100만 명,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대수준으로 치솟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유망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41만명으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 아니라 해도 위기국면에서는 규제강화 법안이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규제완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사업장 점거 전연 금지나 쟁의행위 중 대체인로 금지규정 삭제 등은 사용자 대항권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할 법안이다. 아울러 김용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도 지금은 아니라면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여가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위기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안 된다. 오히려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뿜어 부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정치권이 규제법안만 골몰하고 있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



# 법인세 부담(실효세율)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문화일보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020면 경제

##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난다”

### 한경연 “세부담 완화해야 활력”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수와 수출 동력의 약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

2019년 2년 연속 하락했는데,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같은 관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해진 기자

東亞日報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803면 경제 금주

## “법인세 1%p 낮추면 설비투자 6.3% 늘어”

### 한경연 “세부담 완화가 세계 흐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법인부담세율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된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3일 밝혔다.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의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했다. 국내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2011~2020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3.3%포인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위였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저성장 국면 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이라며 “법인세를 하향 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 흐름에 동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ny@donga.com

헤럴드경제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002면 종합

## “법인세율 1%p 낮추면 설비투자 6.3% 증가”

### 한경연, 국내·해외투자 비교 분석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더욱 확연해진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하며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갈랐다. 한경연은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절대액으로 평가한 세 부담 증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였다. 전체 세수 중 법인세 수 비율도 15.7%로 폴란드와 칠레에 이어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



# 코로나發 불확실성에 영업이익 급감·차입 급증, 투자 노력은 지속

한국일보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A19면 경제

## 코로나에도 100대 기업 투자 더 늘려... 상반기만 63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투자액은 예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8.7% 감소한 33조9,000억원이지만 투자는 8.0% 증가한 6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급감에도 5G, 자율주행, 반도체 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투자액의 39.6%(25조원)를 책임지면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냈다. 업종별로는 통신(19.6%), 자동차(11.1%), 전자전자(7.7%) 업종의 상반기 투자 증가율이 돋보였다. 반면 유통(-56.7%), 식음료(-48.9%) 등 내수업종 투자는 급감해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투자액 대비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상반기 투자액 대비 영업이익은

0.54에 불과했는데 이는 주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투자액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2016-2018년 투자 대비 이익은 1.05~1.16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급락했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투자액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도 눈에 띈다.

2017년 이후 200조원 중반대를 유지하던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12조6,000억원에 달해 19.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투자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차입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한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기업의 투자 여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이 확보해 둔 자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한국일보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B03면 경제종합

## 100대 기업 영업이익 29% 줄었지만 투자 8% 늘렸다

한국경제연구원, 3분기 분석

올 상반기 코로나로 국내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30% 감소했다. 하지만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매출액 10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3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액은 오히려 8% 증가한 6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가 투자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곳의 투자액이 25조원으로 전체 40% 가까이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통신(19.6%), 자동차

(11.1%), 전자전자(7.7%)의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투자 증가율이 높았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5G·자율주행·반도체 등 코로나 이후 유망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음식료(-48.9%), 유통(-56.7%) 등 내수업종의 투자는 급감해 업종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올해 상반기 투자액 대비 영업이익은 0.54대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0대 기업이 올 상반기 벌어들인 돈이 투자액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투자액을 크게 밑돌 경우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주요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200조원 중반대를 유지하던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12조6,000억원으로 19.2% 증가했다. 과거에는 영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투자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차입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기업 투자가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투자 여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 자금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계속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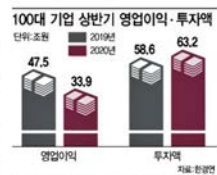
신은진 기자

이데일리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012면 산업

## 영업이익 급감에도 투자 늘린 100대 기업

코로나에도 상반기 4.6조 증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39.6%  
비상 대비 '현금성 자산' 50조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이 예년 수준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6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4.6조)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동안 현금성 자산은 50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한경연이 매출액 10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3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투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6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투자액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25조원)로 나타나 반도체가 투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예정된 투자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200조원 중반대를 유지하던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12조6,000억원으로 19.2%(지난해 262조4,000억원) 증가했다. **배진솔 기자 sincere1@**







part **4**

전문가와  
지식 네트워크 구축



01

세미나 · 포럼



#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한경연·회계학회 공동세미나)

자기주식의 매입과 이익소각은 현금의 사외유출로 회계적 관점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배당과 동일하나 그 정보가 회사의 배당정보 공시에 고려되지 않아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학계와 재계의 전문가들과 초청해 자사주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_2020년 1월 13일(월) 14:00~15:20
- 장소\_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 1. 개최배경

주주환원 수단으로 배당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회계정보 제공방법이 기업의 실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이 가진 배당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사업보고서 공시와 배당성향 계산에 반영하는 새로운 회계처리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 프로그램

### 주제발표

자기주식 회계처리 개선방안

- (1) 재무제표 표시와 유보이익 - 황인태(중앙대)
- (2) 자기주식준비금 설정 - 강선민(중앙대)
- (3) 배당성향 계산 - 이미주(한국은행)

[토 론] (좌장: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회계제도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와 대응

## 세미나 개요

- 일시\_2020년 7월 14일(화) 14:00~16:00
- 장소\_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 1. 개최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로형태 다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환경의 변화 전망. 새로운 노동환경 속 노사관계와 법·제도 발전방향 제시

## 2. 프로그램

### 세션 1 주제발표

[발제 1]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과제  
발표자: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뉴노멀(New Normal)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제도 개선방향  
발표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션 2 패널토론(좌장: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

[토 론]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와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젼션, 해고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같이 취업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 세미나 개요

- 일시\_2020년 7월 15일(수) 14:00~15:30
- 장소\_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 1. 개최배경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경제가 대공황과 맞먹는 경제위기에 직면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계화와 함께 성장한 한국경제는 탈세계화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19 이후 '탈세계화와 큰 정부'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관계 학회장들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 2.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제 1]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

발표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발제 2] 탈세계화와 한국경제

발표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사 회 : 김종석 前 국회의원

토 론 : 김학민 한국무역학회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이영환 한국공공선택학회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세미나 개요

- 일시\_2020년 11월 12일(목) 14:00
- 장소\_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1. 개최배경

최근 ILO협약 비준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응해 노사균형을 통한 노사협력 제고방안 모색

## 2. 프로그램

### [발 제]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발표자: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최흥기 고려대학교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

사용자대항권인 직장폐쇄는 판례로 엄격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황. 주요국이 허용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는 사용자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해당. 주요국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점거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불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에 해당. 성실교섭의무는 노사양측에 부과함에도 위반시 사용자만 처벌. 협력적 노사관계는 사용자대항권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



#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노동개혁은 국가 제1아젠다로 설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며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 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경제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現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님. 노사관계는 계급관계 아닌 계약관계로 인식해야 하며, 노사균형으로 합리적 관계 유도해야 함.

## 좌담회 개요

- 일시\_2020년 11월 18일(수) 14:00
- 장소\_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1. 개최배경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가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

## 2. 프로그램

[인사말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대 담]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대담 진행)

02

연구회





# 기본소득제 연구회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연구회를 통해 진행하였다.

## 1. 발족 배경 및 운영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복지수요는 급증하였으나 늘어난 복지수요에 비해 가용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예산효율적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2. 인적구성

-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박사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3. 2020년 운영 실적

### 제1회

- 일시\_10월 29일(목) 16:30
- 주제\_안심소득제는 범(汎)복지제도 1
- 발표\_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내용\_안심소득제는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



# 기본소득제 연구회

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만을 대체하고, 현재의 다른 모든 복지·노동제도는 존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는 취약계층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하는 함정이 존재하는 반면, 안심소득제는 일을 할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현행제도보다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

## 제2회

- **일시**\_ 12월 4일(금) 16:30
- **주제**\_ 안심소득제는 범(汎)복지제도 2
- **발표**\_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내용**\_ 안심소득제는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및 경제성장을 하락 효과 대신에 노동 공급 증가 효과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안심소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2019년 42조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나 2023년에 시행된다면 연 34조원의 추가 예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안심소득제는 예산효율적이며, 기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기업법 연구회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1.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업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기업법연구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별 규제와 제도에 대응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방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의 체계가 법률의 목표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경제학, 경영학 연구와 연계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여 정책제언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 2. 인적구성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객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신석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난설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3. 2020년 운영 실적

### 제1회

- 일시\_2월 12일(수) 16:00
- 주제\_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방안

# 기업법 연구회

- 발표\_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_ 적절한 벌점 관리 방식의 미비로 사업자는 의결과정에서도 자신의 벌점 내역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내지 영업정지 요청 의결 시에야 비로소 벌점 부과 내역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 위반 사실을 일정한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향후 규제당국이 다른 제재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고 수범자인 사업자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위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한 벌점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제2회

- 일시\_ 5월 13일(수) 16:00
- 주제\_ 최근 개정된 일본 회사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 발표\_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내용\_ 최근 일본 회사법 개정은 일본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설치의무화 및 주주총회 자료의 온라인 제공의 도입이 핵심이고, 임원보수 투명화 방안을 포함한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강화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투자이익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다. 기업으로서의 국내법 차원의 법 개정 내용만이 아니라 구미 각국의 수준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기업경영의 고도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제3회

- 일시\_ 6월 24일(수) 16:00
- 주제\_ 자본거래와 이사의 책임 - 신주 저가발행·합병·LBO를 중심으로
- 발표\_ 신석훈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
- 내용\_ 법인이익독립론하 에서 자본거래는 회사의 손익을 초래하는가? 자본거래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손익을 초래할 수 없어 회사의 손익과 주주의 손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자본거래에서도 회사의 손익을 초



## 기업법 연구회

래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회사 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회사의 이익'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다. '회사의 이익'이 무엇이나에 대한 문제는 회사의 본질, 즉 회사의 존재이유 및 회사의 가치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제4회

- 일시\_7월 8일(수) 16:00
- 주제\_Stewardship Code and Shareolder Activism in Korea
- 발표\_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_최초의 스투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영국의 경우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반면 한국은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다수의 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은 영국의 스투어드십 코드를 차용한 부분이 커서 양국의 코드는 매우 유사하나 도입배경은 전혀 다르다. 이 같은 차이점을 이해해서 스투어드십 코드의 집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회

- 일시\_9월 9일(수) 16:00
- 주제\_터널링과 관련하여 기존 상식에 반하는 논의
- 발표\_강상엽 북경대학교 교수
- 내용\_전통적인 터널링은 A회사의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지분을 적게 가진 B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지분이 많은 A회사에 이익이 되게 함으로써 부(wealth)의 이전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특이한 터널링의 경우 전통적인 터널링과 반대로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은 A회사에게는 손해, 지분율이 낮은 B회사에 이익이 되게 하는 거래를 하게 하여도 부의 이전이 일어나

# 기업법 연구회

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통상 내부거래 규제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특이한 터널링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 제6회

- 일시\_ 10월 14일(수) 16:00
- 주제\_ 최근 경제관련 법률 overview
- 발표\_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내용\_ 다중대표소송은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 보호의 결과를 낳는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 이질성, 남용가능성으로 이사회의 비능률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사이자 감사가 모든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기밀정보 외부 유출 가능성 존재한다.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 강화는 사각지대에 속한 몇 개 회사 때문에 규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그 입법목적이 부당하며, 규제방법도 부적절(전세계적으로 공익법인 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 입법례 없음)하다.

## 제7회

- 일시\_ 11월 11일(수) 16:00
- 주제\_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에 대한 평가
- 발표\_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 내용\_ 이 법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사전적으로 부과된 규제 의무 위반이나 사후적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나 정도가 해외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하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갑을관계 프레임이 적용된 법이다. 복합적인 가치웹 또는 생태계로서의 특성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오프라인경제, 파이프라인경제에 적용한 갑을관계 프레임을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 노동법연구회

노동법 연구회는 노사관계논의의 보편타당성을 지향하며 노동문제에 대해 원칙과 예외의 분명한 구분을 통한 공정질서 확립을 추구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 개최되었으며 노동법 최신 판결동향과 쟁점, 4차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ILO협약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보완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 1.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연구회는 갈등이 첨예한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상생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제도 개선안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노동시장 질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과 노동 관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쟁점을 중심으로 주제별 연구자를 선정하고 분기 1회 연구회를 개최하며 연구자료를 검토한다.

## 2. 인적구성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길 I&S 법무법인 변호사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훈 LAB 파트너스 변호사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3. 2020년 운영 실적

### 제1회

- 일시\_5월 25일(월) 16:30
- 주제\_2020년 노동법 최신 판결동향과 쟁점
- 발표\_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내용\_최근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 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례가 다수이며, 기존 판례까지 부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어 향후 판례도 우려스러운 상황,

# 노동법연구회

특히 대법원 고위인사의 “좋은 재판은 국민을 위한 재판” 언급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는데, 노조의 권력이 막강해져 각종 불법행위들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집단동의를 오랜 기간('89년 도입) 시행된 제도인데,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은 집단적 동의를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것임.

## 제2회

- **일시** 7월 17일(금) 16:00
- **주제** 4차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 **발표**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 개별법 측면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해고 등 경직적 규제로 일하는 방식의 ‘개별화’, ‘유연화’에 부합하지 않고, 통상임금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노사간 소모적 분쟁 야기. 이에 근로시간 유연화,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 체계 재구축 등 강행적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산업단위의 관행과 자율을 존중하는 노동 4.0시대의 노무공급계약법 체계 도입 필요. 집단적 노사관계법 측면에서는 특고 및 새로운 고용관계 등장, 근로자 간 연대성 약화 등 변화에서 공장제근로자를 전형으로 하는 현행 체계의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반면 현재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 하에 노조 우선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법이 오히려 후퇴할 우려. 주요 선진국들은 근로관계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아닌 다른 사회적 방법으로 조정하면서 탄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우리나라도 대결적·투쟁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적 협약자치의 복원, 단체교섭권 명확화 및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해지 보장을 통한 협약자치의 유연화, 근로자대표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경영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선할 필요



## 노동법연구회

### 제3회

- 일시\_9월 25일(금) 16:00
- 주제\_ILO협약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보완
- 발표\_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_대체근로제한조항은 동일한 적합성이라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이라는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조항이 벌금형분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대체근로 제한을 통한 기업의 기본권 침해는 근로 3권 보장이라는 목적과의 법익 교량에 있어서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희생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음. 직장점거 금지는 제42조 제1항 처럼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포지티브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장점거를 일체 불허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다만 이미 판례법리와 같이 예외적으로 점거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와 구제절차 등의 안전장치의 확인 없이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적합성이라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징역형의 경우 신체의 자유라는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구제제도와 같은 다른 수단들에 비하여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시장경제연구회

## 1.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연구회는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경제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2. 인적구성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前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종석 前 국회의원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우규 LeelInternational 고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신 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

시장경제연구회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현 한국경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식견을 모아 정책 결정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는 세 번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 시장경제연구회

-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윤창현 국회의원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재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황인태 중앙대학교 회계학 교수

## 3. 2020년 운영 실적

### 제1회

- 일시\_5월 19일(화) 11:30
- 주제\_선출인단 이론으로 본 정치
- 발표\_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용\_김정은 유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그리고 현 상황을 토대로 선출인단 이론을 대입해 본다. 또한 다섯가지 정치 생존 원칙을 살펴보고, 이에 가설을 바탕으로 선출인단 이론으로 바라본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

### 제2회

- 일시\_7월 14일(화) 11:30
- 주제\_코로나 장세 특징과 시사점
- 발표\_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소장
- 내용\_코로나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변한 국내, 국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고



# 시장경제연구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단계별 경제성장률을 예측해 본다. 더 나아가 미국, 유럽의 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예측해 보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금리와 주가의 변동성을 해석해 본다. 또한 저금리 혹은 금리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강남 주택 매매 가격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현 대한민국의 신용위험도를 평가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제3회

- **일시** 9월 15일(화) 11:30
- **주제** 보수의 영혼
- **발표**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 **내용**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여 진정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또한 보수와 자유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살펴보면서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조세재정연구회

조세재정연구회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정부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건전한 국가재정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세체계 및 정책, 자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20년 총 5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 1. 발족 배경 및 운영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철저한 검토없이 정부의 자원 조달 방안이 수립될 경우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가의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지출의 자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또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자원 부담 주체 간 갈등 문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격월 1회 회동을 원칙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인적구성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필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조세재정연구회

## 3. 2020년 운영 실적

### 제1회

- **일시**\_2월 21일(금) 16:30
- **주제**\_과학기술분야 재정에 대한 소고
- **발표**\_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_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연구개발 재정투자 소요가 발생하고 있고, 과학기술 연구인력 고령화 및 인적구성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방식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과 조세지원의 정책혼합 연구,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등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제2회

- **일시**\_5월 8일(금) 16:30
- **주제**\_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 **발표**\_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용**\_국내 자료를 활용,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생산자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 물가상승률의 30%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제3회

- **일시**\_7월 10일(금) 16:30
- **주제**\_출국세 제도의 분석과 평가
- **발표**\_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내용**\_‘국외전출세’는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특례조항인데,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종과세 해소 원칙과 정합성을 상실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전입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국외전출세 과세시 국내에서 취득가액



## 조세재정연구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 경감을 허용하는 규정을 소득세법에 마련하는 등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제4회

- 일시\_10월 22(목) 16:30
- 주제\_주택 보유세 관련 제도 개편의 소득분배효과
- 발표\_허등용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내용\_우리나라 보유세제는 누진적 세율구조 등을 통해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므로,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정책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보유세 부과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공시가격인상 등 과표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세후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며, 여기에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개정세율을 적용하면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제5회

- 일시\_12월 3일(목) 16:30
- 주제\_한국의 세대간 회계
- 발표\_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내용\_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했다. 현재 세대 중 노년층에 비하여 청년층 및 저연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현재 세대보다 미래에 출생할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3~2018년 기간동안의 정부 재정의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생애순조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청년층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했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03

## 시장경제교육





# 시장경제교육

대학생, 교사, 경찰 중간관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을 시행하여 시장경제 및 기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다.

## 1. 교사

### ① 한국교총과 동·하계 경제교육 공동운영 (2회, 80여명)

- 전국 초·중등교사 80여명 대상으로 3일에 걸쳐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경제개념과 경제기사 바로알기, 경제교육 지도법, CEO 특강 등의 경제교육 시행
- (경제전략) 송병락 원장, (세계경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금융)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부동산)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노동)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CEO 특강)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경제교수법) 손정식 한양대 교수 등 7명

### ②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받아 초·중등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운영 (2회, 70여명)

- 한국경제와 기업역할, 경제교육 티칭방법 등을 통해 시장경제교육 및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제고
- (경제전망) 오철 상명대 교수, (경제제도) 김승욱 중앙대 교수, (정부의 역할) 양준모 연세대 교수, (화폐와 환율)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부동산) 심교언 건국대 교수, (경제지도법) 손정식 한양대 교수, (CEO특강) 이진성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소장, 권오용 前 SK사장 등



## 2. 대학생

### ① EIC(미래엘리트양성과정, 학기별 연 2회, 213명 수료)

- 매학기 15주 과정의 경제동아리로 수도권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편더멘탈에 관한 자본주의 이해, 기업과 정부의 역할, 기업가 정신 등 기

# 시장경제교육

본강좌 및 빅데이터, AI산업 사례 등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

- (기초교양) 송병락 원장, (경제) 손정식 한양대 교수, 오철 상명대 교수, (금융) 안재욱 교수, (부동산)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기업) 이승호 카카오페이 부사장, 김중윤 야놀자 대표,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권오용 前 SK사장, 권태신 한경연 원장, (진로) 이용준 드림업컨설팅 부장 등

\*2020년 213명 수료 (회장단 6명, 이사회 40명, 일반 코스생 164명)



## ② YLC(영리더스클럽, 학기별 연 2회, 550명 수료)

- 매학기 운영되는 전국단위의 연합동아리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고취시키고, 친기업·기업가적 인식을 전파
- 7개 지부(관악, 안암, 강원, 경남, 경북, 전라, 충청)에서 전북과 전남으로 나누어 8개 지부로 확대, 550명으로 구성, 경제현안에 대한 조별 학습 및 토론회(Y.E.S과정), 경제캠프(Pre&Co YLC), 열린토론회, 열린강연회 등 개최
- YLC-LOOC(Leaders of Online Camp, 라이브 방송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설  
기본 시장경제교육(4주차)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개설하여, 전국의 코스생이 참여하도록 함. 주요 교과목은 시장경제 펀더멘탈의 이해, 화폐와 금융, 시장경제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과 규제, 미중 패권의 항방과 최근 국제정세 바로 알기, 경제전략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

\*2020년 550명 코스생 선발 및 교육 참여



# 시장경제교육

## ③ 대학시장경제교육사업(학교별로 '시장경제교양강좌'를 개설, 학기별 연2회 운영)

- 대학생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에 '대학경제강좌'라는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식을 전수
  - 기존 14개 대학에서 16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
  - 1학기: 광운대, 동국대, 동덕여대, 전남대, 한성대(4개 대학교)
  - 2학기: 강원대, 경남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남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12개 대학교)
- \*2020년 총 16개 대학, 1,514명 참여

## 3. 경찰

- 경정·경감급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우리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벤치마킹하여 리더십 역량을 강화(1회, 130명)
- 7월 전국의 경찰 중간관리자 시장경제교육 시행 (2일차 교육, 약12시간 강의)
  - (한국경제) 권태신 원장, (국제정세) 이춘근 이춘근TV 박사, (규제개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CEO특강)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금융)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부동산) 심교언 건국대 교수, (경제전략) 송병락 원장 등



04

## 도서발간 및 정기간행물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이승석 부연구위원

2020년 성장률을 3월호, 6월호, 9월호 -2.3%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전망하였다. 12월호에서의 -1.4%로 전망 사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외부문의 호전을 고려한 것이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을 쉽게 하고 정책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심도있는 분석과 예측은 회원사 및 민간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연구내용

### ◆ 2020년 1분기 (통권 제30-1호)

**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미증유의 전염병인 코로나19 충격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활동 제약과 극심한 소비심리의 위축 그리고 투자활동 차질이 2020년 국내 성장흐름의 성장경로 이탈을 가속시키며 장기불황기로의 본격적인 진입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 2020년 2분기 (통권 제30-2호)

**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소비활동 제약과 극심한 소비심리의 위축 그리고 생산 및 투자활동 차질이 성장흐름의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2.3%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2020년 3분기(통권 제30-3호)

**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증유의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상반기중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한 가운데, 8월중 재확산 우려까지 현실화되면서 경기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 2020년 4분기(통권 제30-4호)

**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4%의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예상을 웃돌면서 역성장의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대회부문 회복과 백신보급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7%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누증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 3. 평가

코로나19 백신개발 소식이 들려 온 4분기에 성장률 전망이 수정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역성장 가능성을 주장해 온 2020년의 전체 흐름에 어긋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코로나19發 경제충격으로 인해 2020년 연평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기업체감경기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4월 최저를 기록한 후 전반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1년 내내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경기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및 예측을 지수화한 대표적인 경기선행지수 중 하나로서, 실물경제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의 경영전략 및 정부의 경기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조사는 금융업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발표하며, 긍정·보통·부정의 3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체 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 수와 부정적인 응답 수의 차이를 기초로 한 공식을 사용하여 지수화한다. 값이 기준치(100)보다 작은 경우,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 2. 연구내용

### ◆ 2020년 1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1월 전망: 90.3, 12월('19년) 실적: 90.1

평가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반등 총력 발표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부정적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조업 경기전망은 소폭 상승하였다.

정책과제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

### ◆ 2020년 2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2월 전망: 92.0, 1월 실적: 89.3

평가 작년 경기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두 달 연속 전망치가 상승하였다. 다만 선진국들의 경기 부진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저성장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했다.

정책과제 불확실성 해소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2020년 3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3월 전망: 84.4, 2월 실적: 78.9

평가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며 체감경기가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중국 공장 비가동으로 인한 해외 생산 차질 및 중국 수요 감소로 인한 국내 생산량 저하가 체감경기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정책과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영향 최소화

## ◆ 2020년 4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4월 전망: 59.3, 3월 실적: 65.5

평가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경기 전망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52.0) 이후 13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과 두 달 만에 32.7p 하락하며 5개월에 걸쳐 46.3p가 하락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체감경기 악화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 기업 유동성 공급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 ◆ 2020년 5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5월 전망: 61.8, 4월 실적: 58.8

평가 종합경기 전망은 지난 달 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수출 전망(65.0)이 '80년 기업경기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해외공장 섀utdown에 따른 생산차질과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현지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과제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

## ◆ 2020년 6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6월 전망: 68.9, 5월 실적: 70.6

평가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동안 9.6p 상승하는데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회복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활동 부진과 대출여건 악화에 제조업의 자금사정 전망(73.9)이 글로벌 금융위기('09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 ◆ 2020년 7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7월 전망: 73.7, 6월 실적: 74.2

**평가** 제조업 전망(74.8) 개선에 전망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 비제조업 체감경기(72.4)가 전월대비 악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수요가 급감하여 2분기 평균 고용 실적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기업 고용 창출 및 유지 지원

## ◆ 2020년 8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8월 전망: 81.6, 7월 실적: 84.2

**평가** 코로나19 영향에 더하여 여름철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체감경기(74.9)가 지난 달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되었다. 지난 4월 이후 경기 회복세는 V자형 반등이 아닌 완만한 나이키형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활력 제고

## ◆ 2020년 9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9월 전망: 83.5, 8월 실적: 79.8

**평가** 여름 휴가철인 8월 대비 기저효과, 추석 연휴로 인한 내수 활성화 등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반도체가 속한 전자 및 통신 장비 업종 전망치가 지난 달 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정책과제**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기업 심리 반전

## ◆ 2020년 10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10월 전망: 84.6, 9월 실적: 84.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평가** 국내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라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주력 기간산업 위주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 3대 축인 내수, 수출, 투자의 3대 부문 모두 3분기 평균 실적치가 IMF 외환위기('98년) 이후 22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간산업 더블딥 방지

## ◆ 2020년 11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11월 전망: 99.5, 10월 실적: 98.7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이 다소 축소되며 기업 체감경기가 올해 처음으로 10p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지속에 투자(90.4)와 고용(92.3) 부문은 전월 수준에 머무르며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정책과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위한 기업 규제 완화

## ◆ 2020년 12월 기업경기전망

**전망/실적** 12월 전망: 98.9, 11월 실적: 98.0

**평가** 연말 사업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비제조업(103.2)이 긍정적 전망을 보였으나 제조업 체감경기(95.5)는 환율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지난 달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올해 연평균 전망치(81.5)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IMF 외환위기('98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만성화된 경기 침체 탈피 위한 경제구조 개혁

## 3. 평가

매월 진행되는 조사·발표를 통해 기업 체감경기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원의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 KERI 칼럼

KERI 칼럼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추구하는 ‘자유시장 (Free Market)’, ‘자유기업 (Free Enterprise)’,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는 장으로 2020년 중 KERI 칼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No	일자	제목	필진
01	01.10	수출강국 코리아, 외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
02	02.11	2020 경제성장 제약요인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03	02.21	연임제한이 사외이사 제도의 정당성이 될 수 있을까?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연구위원)
04	03.16	시장 낙오자도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05	03.31	오락가락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이제는 폐지할 때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06	04.16	위기장기화에 대비한 산업생산기반 유지대책 필요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07	05.25	서서히 고개를 쳐드는 증세논의를 바라보며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08	06.12	포스트 코로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의 기회로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09	06.30	인구구조 변화에 걸맞은 고용 시스템 구축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0	07.24	점점 커져가는 주식시장 리스크에 주목해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1	08.07	부자 증세 만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인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12	08.21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13	09.18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고용 및 근로 유연화로 극복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4	10.16	정부의 재정준칙(안), 없는 것보다 위험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5	11.04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16	12.04	저출산 시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7	12.11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8	12.24	2021 한국경제, 성공적인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_

## Cyber KERI

### 1. 사업의 목적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사업의 주요 내용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동향과 전망', '세미나 자료' 등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분석' 부문에서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KERI 브리프'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KERI 칼럼'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계획을 관찰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본원의 연구발간물을 게재하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이슈분석' 부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정보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yber KERI

하여 지수화한 경기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산출하여 게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 및 각종 행사 안내에 관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모바일 웹(m.keri.org)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에게 본원의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열린 지식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KERI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장경제 철학을 전파하는 유용한 기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